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4715-0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심층연구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합평가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 한이철** | 연구위원 | 연구 총괄
정문수 | 연구위원 | 정책 평가 및 환류체계 개편 방향
권인혜 | 전문연구원 |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 방향
정민주 | 전문연구원 | 기본계획 성과 분석
민경찬 | 연구원 | 전략별 평가 결과 분석
김민석 | 연구원 | 전략별 평가 결과 분석
나현수 | 연구원 | 기본계획 성과 분석
손경민 | 연구원 | 기본계획 성과 분석
유서영 | 연구원 | 전략별 평가 결과 분석
이진 | 연구원 | 전략별 평가 결과 분석
오한솔 | 연구원 | 자료 분석

연구보고 E20-2023-6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합평가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3. 12.

발 행 인 | 한두봉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주)프리비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연구 목적

-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합평가는 5개년 삶의 질 기본계획 4년 차에 실시하며, 그 동안의 성과와 문제점, 개선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차기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2020~2024) 추진에 따른 농어촌 삶의 질 개선 성과를 정량적, 정성적 지표를 토대로 평가하고,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2025~2029)의 정책 목표 및 정책 분야, 신규 과제 등을 도출한다. 또한 시행계획 점검·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농어촌 영향평가, 사전협약 등 삶의 질 정책의 평가 및 환류 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 방법

- 종합평가는 농어업인·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정책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총괄반과 정책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한다. 총괄반은 전문가 포럼을 통해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추진체계와 평가·환류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한다. 정책평가반은 제4차 삶의 질 4대 전략(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생활기반, 경제·일자리) 16개 정책군에 대해 평가기준 및 항목에 기초하여 핵심과제 평가를 수행하고,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신규 정책 분야 및 과제 등을 도출한다.

연구 결과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은 4대 전략 16대 정책군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 전략의 ‘의료 서비스 여건 개선’ 정책군은 추진과제 대부분이 목표했던 성과를 달성했으나, 사업별 성과지표와 핵심 목표가 불일치하여 실질적인 정책 달성 목표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정책군은 사회서비스 정책 사업과 농어촌 정책 사업을 연계한 농어촌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의 개발·확산에 집중하였고, 일부 지역에서 성과를 보였다. ‘보육·육아 친화적 지역사회 육성’ 정책군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아이돌봄센터 지원 사

업은 양적 측면에서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도시에 비해 낮은 서비스 수준, 영유아 감소에 따른 시설 운영비 부담 등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사회안전망 내실화’ 정책군은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 지원, 안전 재해보험율이 양적으로 확대되면서, 농어업인의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생활 안전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 교육·문화 전략의 ‘교육 서비스 확충’ 정책군은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버스 이동 시간이 감소하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학생 만족도가 증가하는 등 농어촌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평생교육 강화’ 정책군은 학교 교육 기회가 적었던 여성 노인들의 문해역량이 향상되면서 건전한 여가활동 및 문화활동 기회가 늘어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 정책군은 체육공간과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체육·문화·여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주민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 정책군은 단순한 문화·여가 활동 횟수를 넘어 개인의 치유·사회적 관계망 확대 등 사회적 효과까지 창출하여 농어촌 내에 사회적 자본을 형성·축적하였다고 평가하였다.
-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교통여건 개선’ 정책군은 농어촌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개선되고 주민의 대중교통 만족도와 교통안전 만족도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농어촌 교통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다. ‘주거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정책군은 농어촌 주민의 일상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과제들로 구성되었고 농어촌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였지만, 정책 수행도와 삶의 질 영향도는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정책군은 ICT 기술 등을 활용한 무인행정민원서비스 키오스크 보급, 생활SOC 복합센터 조성,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 기반 개선에 기여하였다. ‘농어촌다움을 유지하

는 환경·경관 보전' 정책군에서는 폐기물 수거, 가축분뇨 처리, 농촌공간계획을 통한 난개발 방지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촌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았다.

- 경제·일자리 전략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정책군은 농촌융복합사업 활성화, 푸드플랜 연계 가공 기초기반 조성을 위한 맞춤형 종합 지원과 신규 경영체 수 및 매출액 증가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일자리와 연계된 인력유입 등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농어촌 관광 활성화' 정책군은 농어촌 관광 홍보 강화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정책군은 영농창업 활성화 지원으로 청년층의 농촌 유입이 확대되었고, 스마트팜 보급을 통해 농산물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여성 취업 지원 및 일손 부족 해소' 정책군은 여성 고용률 증가 및 실업률 감소라는 고용지표 개선에 기여하였으나, 사업 규모가 전체 농촌 여건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되었다.
- 본 연구에서는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유한 비전과 아젠다를 제시하고, 아젠다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부처에 제안하도록 삶의 질 정책 영역의 확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농산어촌과 관련한 새로운 법·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를 고려한 삶의 질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향후 이루어질 여러 제도적 변화에 대응하여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중간지원조직이나 민간 주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있는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농산어촌의 부족한 인적 자원과 서비스 공급 역량에 대응하여 ICT·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주거환경과 생활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책시행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및 사업의 성과가 농어촌 주민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다변화된 농어촌 구성원의 지역 사회 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할 수 있는 주체를 육성해야 한다. 여섯째, 지방분권 확대 기조에 따라,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문화 관련 사업과 농어촌 마을 관련 사업이 삶의 질 정책 체계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지방이양 사업과 지자체 자체 사업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나아가 지자체 자체 사업 중 삶의 질 향상 성과가 우수한 과제를 선정하여,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개편 방향으로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촌협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일선 지자체에서 삶의 질 정책에 대한 인식은 낮지만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협약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촌공간계획 제도와 연계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이행실태 점검 결과로 기존의 달성률을 보여주는 것 보다, 서비스 공백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기준 항목의 일부 개편이 필요하며, 특히 생명, 안전 등과 직결된 핵심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기준을 재구성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삶의 질 정책 평가 및 환류체계와 관련해서는 시행계획 점검·평가의 신뢰도 제고, 정책사례 모니터링의 내실화, 농어촌 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확대, 사전협의의 시범 운영 등의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신규로 추진되는 중앙부처 단위 정책 사업과 지자체 고유 정책을 검토하여 삶의 질 정책의 외연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농어촌 삶의 질과 밀접한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삶의 질 위원회 차원의 지속적인 정책사례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어촌 영향평가는 제도 도입 취지와 맞도록 농어촌 지역의 여건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 전반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4

제2장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4대 전략별 평가 결과

1. 보건·복지 전략 9
 2. 교육·문화 전략 30
 3. 정주생활기반 전략 57
 4. 경제·일자리 전략 86
 5. 4대 전략별 평가 요약 105

제3장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성과 및 개편 방향

1.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성과 115
 2.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 기본 방향(안) 122
 3.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 방향 127
 4. 정책 평가 및 환류체계 개편 방향 136

부록

〈부록 1〉 전문가 포럼 운영 결과 145
 〈부록 2〉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과제 목록(2020년 기준) 165

참고문헌 171

제1장

〈표 1-1〉 제4차 삶의 질 시행계획 점검·평가 부문별 정책군과 세부 과제 수 3
 〈표 1-2〉 총괄반 전문가 포럼 운영 사항 5
 〈표 1-3〉 정책평가반 구성 6
 〈표 1-4〉 16대 정책군 평가기준 및 항목 7

제2장

〈표 2-1〉 보건·복지 전략 정책과제 10
 〈표 2-2〉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내 보건·복지 전략 성과 목표 10
 〈표 2-3〉 보건·복지 전략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11
 〈표 2-4〉 보건·복지 전략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 이행실태 변화 12
 〈표 2-5〉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정책군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평가 결과 13
 〈표 2-6〉 보건·복지 전략 세부 항목별 도시·농촌 지역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2022년) 15
 〈표 2-7〉 보건·복지 전략 세부 항목별 읍·면 지역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2022년) 16
 〈표 2-8〉 농어촌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정책군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평가 결과 18
 〈표 2-9〉 보육·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육성 정책군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평가 결과 22
 〈표 2-10〉 농어촌 사회 안전망 내실화 정책군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평가 결과 26
 〈표 2-11〉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현황 27
 〈표 2-12〉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비교 28
 〈표 2-13〉 교육·문화 전략 정책과제 30
 〈표 2-14〉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내 교육·문화 전략 성과 목표 31
 〈표 2-15〉 교육·문화 전략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32
 〈표 2-16〉 교육·문화 전략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 이행실태 변화 32
 〈표 2-17〉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정책군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평가 결과 33
 〈표 2-18〉 2020년 지역별 학령인구(12~19세) 통학버스 이동시간 34
 〈표 2-19〉 농어촌 통학 여건 개선 사업의 성과지표 달성 목표치(안) 35

〈표 2-20〉 농어촌 통학 여건 개선 사업의 성과지표 제안	36
〈표 2-21〉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정책군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평가 결과	37
〈표 2-22〉 농어촌 지역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 정책군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평가 결과 ..	43
〈표 2-23〉 농어촌 체육공간 조성 성과목표 달성도	44
〈표 2-24〉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성과목표 달성도	44
〈표 2-25〉 농어촌 체육공간 조성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45
〈표 2-26〉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46
〈표 2-27〉 2022년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 전달체계 및 운영방식	48
〈표 2-28〉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 정책군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평가 결과 ..	50
〈표 2-29〉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 정책군 과제별 성과지표와 달성도 (2020~2022년)	51
〈표 2-30〉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과제 수행에 따른 삶의 질 관련 성과	51
〈표 2-31〉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의 연차별 주요 성과 내용	54
〈표 2-32〉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 포함 사업(안)	56
〈표 2-33〉 정주생활기반 전략 정책과제	57
〈표 2-34〉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내 정주생활기반 전략 성과 목표	58
〈표 2-35〉 정주생활기반 전략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59
〈표 2-36〉 정주생활기반 전략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 이행실태 변화	60
〈표 2-37〉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개선 정책군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평가 결과	61
〈표 2-38〉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개선 정책군 핵심과제 투융자 실적	62
〈표 2-39〉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개선 정책군 핵심과제 평가 결과	62
〈표 2-40〉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개선 정책군 핵심과제 관련 분야 만족도	63
〈표 2-41〉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정책군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평가 결과 ..	66
〈표 2-42〉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정책군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평가 결과 ..	74
〈표 2-43〉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정책군 핵심과제의 3년간 달성률	78
〈표 2-44〉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정책군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평가 결과 ..	83

〈표 2-45〉 경제·일자리 전략 정책과제	86
〈표 2-46〉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내 경제·일자리 전략 성과 목표	87
〈표 2-47〉 경제·일자리 전략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88
〈표 2-48〉 경제·일자리 전략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 이행실태 변화	88
〈표 2-49〉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정책군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평가 결과 ..	89
〈표 2-50〉 농어촌 관광 활성화 정책군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평가 결과	92
〈표 2-51〉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정책군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평가 결과	96
〈표 2-52〉 농어촌 여성 취업 지원 및 일손 부족 해소 정책군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평가 결과 ..	101

제3장

〈표 3-1〉 최근 3년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점수 비교	117
〈표 3-2〉 최근 3년간 4대 전략 만족도 점수 비교	117
〈표 3-3〉 전략별 세부 항목 만족도 개선 항목	118
〈표 3-4〉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119
〈표 3-5〉 지역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증기목표치 달성률(평균) 변화 추이	120
〈표 3-6〉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연도별 투융자 실적	121
〈표 3-7〉 삶의 질 기본계획 시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변화	128
〈표 3-8〉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 주요 내용 및 배경	129
〈표 3-9〉 현행 농어촌 영향평가의 틀	142

제1장

<그림 1-1>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4대 전략 2
 <그림 1-2>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종합평가 평가단 구성 4

제2장

<그림 2-1> 2022 생활문화 지원사업 추진 성과 52
 <그림 2-2> 2022 생활문화사업 프로그램 참여 성과 52
 <그림 2-3> 생활문화사업 참여자의 사업참여 전후 연결망 구조 변화 53
 <그림 2-4> GIS를 활용한 대중교통 사각지역 해소율 분석 예시 64

제3장

<그림 3-1> 4차 기본계획 기간의 4대 전략 평균 정주 만족도 116
 <그림 3-2> 지역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중기목표치 달성률(평균) 변화 추이 120
 <그림 3-3>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 관련 배경과 논의사항 130
 <그림 3-4> 지역 내 서비스 접근성 취약지역 분석 예시 132
 <그림 3-5> 삶의 질 정책 성과평가 환류체계의 열개 136
 <그림 3-6> 시행계획 점검·평가 운영 절차 137
 <그림 3-7> 제1~4차 삶의 질 기본계획 시기별 정책 점검·평가 방식의 변화 138
 <그림 3-8> 농어촌 영향평가 절차(운영 지침 제5조) 139
 <그림 3-9> 사전협의 추진 절차(안) 140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20~2024)(이하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에 근거를 둔 5년 단위 법정계획임.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을 세우고, 부처별 시행계획 및 지자체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됨.

농어업인삶의질법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은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비전으로 지역별, 정책 대상별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음.
 - 이를 위해 농어촌 지역 내 삶의 질 격차를 평가하고, 상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곳에 필수적 서비스를 중점 지원하고자 함. 또한 농어촌 인구·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정책 수요를 발굴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음.

-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생활기반, 경제·일자리의 4대 전략별 178개 과제에 대해 5년간 51조 629억 원의 투융자 계획을 수립함.

〈그림 1-1〉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4대 전략

비전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민을 포용하는 자립적 지역사회 ② 어디서나 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되는 3·6·5생활권 ③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생명의 터전 	
전략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② 농어촌 통합 돌봄시스템 구축 ③ 보육, 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조성 ④ 농어촌 사회안전망 내실화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②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③ 농어촌지역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 ④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어촌 지역 교통 여건 확충 ②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③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④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보전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② 농어촌 관광 활성화 ③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④ 농어촌 여성 취업 지원 및 일손 부족 해소
추진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서비스 기준 개편, 사전협의제도 도입 및 농어촌 영향평가 지침 제정을 통한 삶의 질 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범부처 정책 조정 ○ 농촌협약 도입을 통한 지역 주도 삶의 질 정책 추진기반 제도화 	

자료: 관계부처 합동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2020).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종합평가는 5개년 기본계획 4년차에 실시하며,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 개선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차기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기간 전체 178개(2023년 165개¹⁾) 시행계획 과제에 대한 점검·평가를 매년 추진하였으나, 기본계획 및 정책군 단위의 전반적인 평가와 과제 도출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2024년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기 위해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정책추진체계 및 평가·환류체계의 개선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향 설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표 1-1〉 제4차 삶의 질 시행계획 점검·평가 부문별 정책군과 세부 과제 수

전략	정책군	세부 과제 수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보건·복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11	11	11	11
	농어촌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3	3	3	2
	보육·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조성	6	6	6	6
	농어촌 사회안전망 내실화	19	19	19	19
교육문화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16	14	13	13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5	5	5	5
	농어촌 지역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	8	8	8	5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	6	6	5	5
정주생활기반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확충	14	13	13	12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11	11	11	11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17	17	17	17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보전	24	24	23	23
경제활동·일자리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8	8	8	7
	농어촌 관광 활성화	6	6	6	6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19	18	18	18
	농어촌 여성 취업 지원 및 일손 부족 해소	5	5	5	5
계	16개 정책군	178	174	171	165

주: 사업이 종료되거나 지방이양이 이루어지면서 매년 세부 과제 수가 감소함.

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시행계획 추진실적(각 연도).

1) 종료과제 8개, 지방이양 전환 과제 5개 제외

○ 구체적으로는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2020~2024) 추진상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2025~2029) 수립에 반영해야 할 개선 방향 및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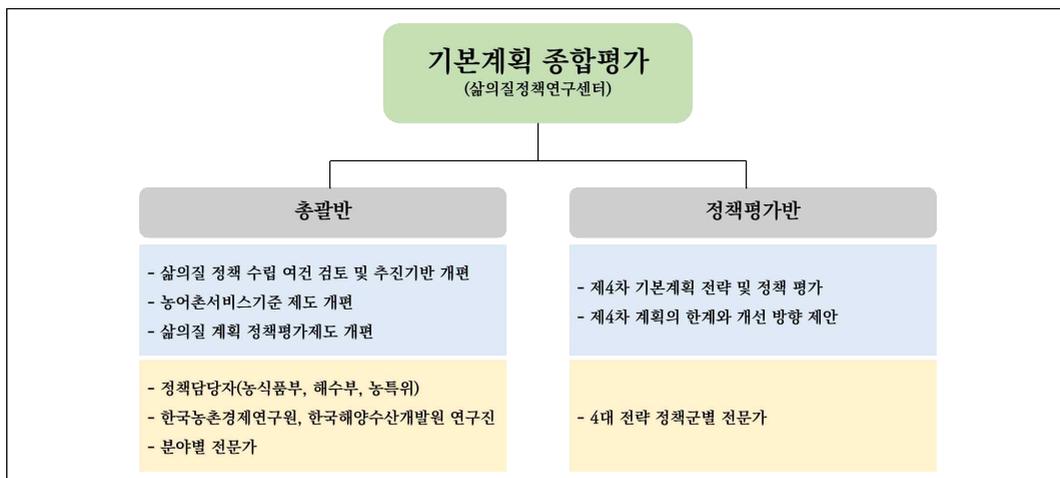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삶의 질 개선 등의 성과를 평가함.
-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정책 목표 및 정책 분야, 신규 과제 등을 도출함.
- 시행계획 점검·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농어촌영향평가, 사전협의 등 삶의 질 정책 평가 및 환류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 방향을 도출함.

2. 연구 방법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종합평가를 위해 총괄반과 정책평가반을 구성·운영함.

- 총괄반은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추진체계와 평가·환류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함.
- 정책평가반은 제4차 삶의 질 4대 전략 16개 정책군에 대해 종합평가를 수행하고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신규 정책 분야 및 과제를 도출함.

〈그림 1-2〉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종합평가 평가단 구성



자료: 저자 작성.

2.1. 총괄반 구성 및 운영

- 총괄반은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종합평가 및 개선 과제 도출을 위해 구성함.
 - 총괄반은 정책담당자(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분야별 농어촌 정책 전문가, 전문지원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진 등 약 20명으로 구성함.
-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여 해당 주제별 발제와 지정 토론, 자유 토론을 진행함.
 - 삶의 질 정책을 구성하는 주요 제도(「농어업인삶의질법」 기반)를 중심으로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추진 성과와 한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함.
 - 기본계획 등의 평가·환류, 사전협의, 농어촌 영향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운용 등의 추진 내용 점검 및 개선 방향을 논의함.

〈표 1-2〉 총괄반 전문가 포럼 운영 사항

구분	논의 주제	주요 내용
1차 (10.4.)	kick-off 회의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개요 및 종합평가 수행 방식 공유
2차 (10.27.)	삶의 질 정책 추진체계 개편 방향	• 농어촌 여건 변화 진단, 농어촌 주민 삶의 질 실태 진단 • 농어촌 정책 수요, 정책 추진 환경 변화 분석 • 삶의 질 위원회 변경, 정책 추진 거버넌스 체계 검토
3차 (11.17.)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 방향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운영 방향 논의 • 서비스 점검 항목 및 목표치 수준 조정, 기준 설정 방식, 이행실태 점검 관련 이슈 검토
4차 (12.5.)	삶의 질 정책평가 및 환류체계 개편 방향	• 시행계획 사업(사업목록, 지자체 사업 등) 조정 • 농어촌 영향평가·사전협의 고도화 등 정책평가 환류 제도 검토

자료: 저자 작성.

- 제4차 삶의 질 정책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설정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함.
 - 총괄반 토의 내용을 종합하여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설정함.
 - 농어촌서비스기준, 농어촌 영향평가, 사전협의 등 관련 제도의 세부 개선 방향을 도출함.

2.2. 정책평가반 구성 및 운영

○ 기존 삶의 질 시행계획 점검·평가단 중 정책군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16명의 정책평가반을 구성함(표 1-3).

- 정책평가반은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설정된 계획 방향과 내용, 과제들이 실제 계획의 실행을 통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평가하고,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함.
- 정책군별 평가 기준 및 항목에 기초하여 핵심과제 평가를 수행하고 원고를 작성함.

〈표 1-3〉 정책평가반 구성

구분	정책군	소속	이름
보건·복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동진 박사
	농어촌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린 박사
	보육·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조성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설 박사
	농어촌 사회안전망 내실화	부산대학교	김남훈 교수
교육·문화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박사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공주대학교	박상욱 교수
	농어촌 지역 문화·여가 향유 여건향상	지역문화관광네트워크	김효정 대표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	전북연구원	장세길 박사
정주생활기반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확충	전남연구원	김용욱 박사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지역활성화센터	오형은 대표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충남연구원	윤정미 박사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보전	농촌진흥청	김상범 박사
경제활동·일자리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충북대학교	전익수 교수
	농어촌 관광 활성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주영 박사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한국농수산대학교	이민수 교수
	농어촌 여성 취업 지원 및 일손 부족 해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순미 박사

자료: 저자 작성.

○ 4대 전략 16대 정책군 및 세부과제에 대해 추진과제별 목적과 목표(2024년까지의 달성 목표 중 2022년까지의 중간달성 결과) 달성 여부를 파악함.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제시된 세부과제의 실현 여부 및 성과목표의 달성 수준에 대해 <표 1-4>에 기초하여 정성평가 위주로 종합평가를 수행함.

<표 1-4> 16대 정책군 평가기준 및 항목

평가기준		평가항목
1. 정책군 형성	1-1. 정책군의 목적 및 목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책군 및 세부과제의 목적은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비전과 목표와 얼마나 부합하는가 ② 정책군 세부과제의 방향은 당시 농어촌 주민의 특성 및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③ 24년까지의 달성 성과목표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실제 기여하도록 충실히 제시되었으며, 달성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하였는가
	1-2. 정책군의 내용 정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당 정책군이 포괄해야 할 중요 내용이 세부과제 및 성과목표에 충실히 담겼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중에 누락되어 향후 담아야 하거나, 혹은 불필요한 내용은 없는가 ② 각 정책 사업은 정책군의 취지 및 목적에 맞게 선정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부처 정책·사업 중에서 포함할 필요가 있거나, 새롭게 추진할 과제는 무엇인가
2. 정책군 실행	2-1. 정책·사업 추진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책군 내의 각 정책·사업 중에서 지난 3년간('20-'22) 추진 실적 및 성과에 대해 (1) 우수 과제는 무엇이며, 어떠한 점을 본받을 필요가 있는가, (2) 미흡 과제들은 무엇이며, 어떠한 점을 개선해야 하는가 ② 정책군의 지난 3년간 추진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과제들은 목적 및 달성목표, 내용, 정책수단 측면에서 일관성을 갖도록 운영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목적과 내용의 예측치 못한 변경, 달성목표치의 잦은 수정 등 운영 일관성이 미흡한 과제는 무엇이며,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③ 각 정책·사업은 농어촌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주민유형별 수요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대상이 특정 지역, 주민집단에 편중되거나, 수혜 필요 대상이 배제된 과제는 무엇이며, 어떠한 점을 개선해야 하는가
	2-2. 정책·사업의 개선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어촌 현실 및 주민 수요에 맞게 사업 내용 및 운영방식, 현상추진체계, 제도적 여건 등을 개선한 과제는 무엇이며, 개선점은 무엇인가 ② 정책환경의 변화(후속 정부의 국정방향, 국민 삶의 질 수요 및 트렌드 변화, 정부·지자체의 역할 변화 등)에 맞게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한 과제는 무엇인가, 어떠한 점을 개선하였는가
3. 정책군 성과	3-1. 정책·사업의 목적 및 목표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제시된 정책군 및 세부과제 취지에 맞게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② 정책군별로 제시된 '24년까지의 달성 목표 중 '22년의 중간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자료: 저자 작성.

2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4대 전략별 평가 결과

1. 보건·복지 전략

1.1. 보건·복지 전략 전체 평가 결과

1.1.1. 정책 목표 달성도

□ 정책 목표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보건·복지 전략의 목표는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임.

-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정책군으로 설정된 주요 과제는 ①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② 농어촌 통합 돌봄시스템 구축, ③ 보육·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육성, ④ 농어촌 사회 안전망 내실화임.

〈표 2-1〉 보건·복지 전략 정책과제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농어촌 통합 돌봄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지역 의료 공공성 강화 • 의료 취약지역 지원 확대 • 농어업인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통합 돌봄 인프라 조성 • 농어촌 지역사회 통합 돌봄 개발 및 확산
보육·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육성	농어촌 사회 안전망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충 • 농어촌 지역 특성에 맞는 보육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농어촌 주민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 강화 • 농어업인 작업 안전 보장 • 노령 및 여성농어업인 대한 지원 강화

자료: 관계부처 합동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2020).

□ 정책 목표 달성도

- 공공의료 확대, 사회적 농장을 활용한 돌봄 체계 구축에서 성과를 보였으나, 응급 의료 여건 개선 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보건·복지 여건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향상되지 못하였음.
 -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건수는 117개소(2020)에서 181개소(2022)까지 증가하였으나, 농어촌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개소 수는 109개소(2020)에서 54개소(2022)로 감소함.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은 65.2%(2020)에서 64.0%(2022)로 3년 사이 소폭 하락하였으며, 취약지역 응급실 운영기관 117개소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이루어졌으나 그 수가 증가하지는 않음.

〈표 2-2〉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내 보건·복지 전략 성과 목표

전략	성과지표	성과목표(실적)		
		2020년	2021년	2022년
보건·복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건수)	117	121	132
	사회적 농장 지원(건수)	30	60	83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개소)	109	87	54
	농지연금 가입자 수(명)	17,098	19,178	21,708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65.2	66.4	64.0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자수(명)	21,500	20,788	23,349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수(천명)	478	495	516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개소수(개소)	117	117	117
농어촌 보건·복지 만족도(10점척도)	5.2	5.8	5.1	

자료: 농식품부 내부자료.

1.1.2. 삶의 질 개선 정도

○ 삶의 질 개선 정도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함.

-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3년간(2020-2023)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에서 보건·복지 전략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답보 상태를 보였으나,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도시 지역 주민에 비해 모두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특히 의료 서비스 범위 및 수준, 분만의료 및 출산 지원,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격차가 크게 나타남.
- 또한 농어촌 지역에서 분만의료 서비스, 아동 양육 및 보호 지원, 취약 계층 복지 지원 여건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3년 사이 하락하였음.

〈표 2-3〉 보건·복지 전략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11점 척도)

전략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2020년	2021년	2022년	2020년	2021년	2022년
보건·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7.4	7.7	7.7	5.7	6.3	6.1
	의료 서비스 범위	7.1	7.3	7.3	5.0	5.6	5.1
	의료 서비스 수준	6.9	7.2	7.2	5.1	5.7	5.3
	분만의료 서비스	6.7	7.0	6.8	4.4	5.2	4.3
	산후조리 서비스	-	-	6.4	-	-	4.0
	여성 출산 지원	-	-	6.2	-	-	4.4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7.0	7.3	7.0	5.2	5.9	5.2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6.5	6.8	6.5	5.5	6.0	5.6
	아동 양육 보호 지원	6.3	6.7	6.4	5.4	5.9	5.3
	취약계층 복지 지원	6.2	6.6	6.2	5.6	6.1	5.4
	여성 및 다문화 주민 복지지원	-	6.5	-	-	5.9	-
	농어작업 안전(농어업인만)	-	5.5	-	5.9	7.0	7.1
	(평균)	6.8	7.0	6.8	5.2	5.8	5.1

자료: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각 연도).

○ 같은 기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 핵심 항목의 이행실태는 목표치를 기달성하였으나, 일부 서비스 항목에서 개선 정도가 미흡함.

- 진료 항목의 2022년 달성도는 23.1분으로,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소요 시간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음.

- 영유아 보육·교육 항목의 3년간 달성 수치(소요 시간)는 오히려 증가함.

〈표 2-4〉 보건·복지 전략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 이행실태 변화

부문	서비스 항목	세부시설(기초 인프라 시설) 및 측정 기준	2020년	2021년	2022년	목표 ('20~'24)
보건·의료·복지	진료	차량을 이용하여 30분~1시간 이내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하다.	23.3분	22.7분	23.1분	30분~1시간
	응급의료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구급차가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 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5분	14.6분	13.8분	30분
	영유아 보육·교육	차량을 이용하여 20분 이내로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다.	5.8분	9.0분	9.1분	20분
	노인복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돌봄 등의 서비스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한다.	99.3%	100%	100%	80%

자료: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각 연도).

○ 보건·복지 전략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와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바탕으로 볼 때, 보건·복지 서비스의 공급과 접근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의 이행실태는 목표치에 비해 소극적으로 설정되어 달성 여부가 크게 유의하지 않으며, 농어촌 지역의 여건은 도시 지역에 비해 여전히 열악함.

1.2. 정책군별 평가 결과

1.2.1.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 정책군 개요

○ 본 정책군은 농어촌 보건의료 시설과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의료 취약지 해소 및 예방적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농어촌 지역 의료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주요 정책과제로 ① 농어촌지역 의료 공공성 강화, ② 의료 취약지역 지원 확대, ③ 농어업인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를 설정함.

- 이와 관련한 핵심과제는 ① 농어촌 공공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 ②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③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을 통한 농어촌 정신건강관리 지원임.

〈표 2-5〉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정책군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평가 결과

단위: 점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2020년	2021년	2022년
(1-1-1-2) 농어촌 공공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	91.3	88.7	92.7
(1-1-2-1)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복지부)	94.7	87.3	79.3
(1-1-3-3)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을 통한 농어촌 정신건강관리 지원	91.7	90.7	90.0

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각 연도).

□ 평가 결과

〈정책 성과〉

○ 의료 취약지 해소 등 농어촌 지역에서의 부족한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대부분 과제가 당초 설정된 성과 지표를 달성하는 등 사업은 비교적 충실하게 수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 농어촌 공공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사업의 성과 지표로 제시된 ‘이용자 (종합) 만족도’,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의 성과지표로 제시된 ‘응급의료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 법정 기준 충족률’,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을 통한 농어촌 정신건강관리 지원의 성과지표로 제시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 인력 확충’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참여 시·도 수’ 등 세부사업별 목표는 대부분 달성된 것으로 나타남.

○ 추진 사업별로는 사업내용이나 추진 과정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특히 사업별 성과지표와 핵심 목표의 불일치로 인해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

- (농어촌 공공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 농어촌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개선 사업은 농어촌 특별세를 재원으로 농어촌 지역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등 기능 보강을 추진해 왔음.

* 사업 대상 보건소는 전국 151개소로 1994년 이후 총 1조 1,534억 원 투입

- 그러나 사업 내용 중 농어촌 지역의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혹은 보건지소의 건강증진 중심 기능 개편과 관련한 사업의 추진과정과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관리되지 않음.
 - *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실적은 '20년 4개소, '21년 1개소에 불과
-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환자가 없어도 24시간 대기해야 하는 응급의료의 특성상 인구 과소 지역은 환자수가 적어 응급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움.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일 정책군 내 타 사업에 비해 예산 규모가 크지 않고 직접적인 정책효과 검증 또한 어려움.
 - * 응급의료서비스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사업 예산은 '20~'22년 기간 동안 확대되지 않았으며, '22년 기준으로 동일 정책군에 있는 '농어촌 공공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사업 예산의 35%,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을 통한 농어촌 정신건강관리 지원' 사업 예산의 12% 수준에 불과
- 한편,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의료 서비스의 공급자인 지역 응급의료기관 종사자와 수요자인 주민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같은 정책 효과 검증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효과를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 또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음.
-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을 통한 농어촌 정신건강관리 지원) 정부는 기초지자체 단위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사례관리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전문인력은 부족하고 지역별 편차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보건복지부는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1인당 적정 사례관리대상자 수를 1:25 목표로 인력 확충을 추진하였으나, 2021년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인력 부족 및 지역별 편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전히 사업 초기에 수립한 사업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성과지표가 교체되어 사업 추진과정을 적절히 모니터링하기 어려움.

○ 농어촌 주민 정주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도시 대비 농어촌 생활 만족도는 보건·복지 전략의 격차가 가장 두드러졌음.

- 도·농 간 만족도 평균 점수 차이를 살펴보면 보건·복지 전략이 1.7점 차이로 도·농 간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연도별로도 2021년도에는 도시 지역보다 만족도 점수가 1.2점 낮았고, 2022년도에는 1.7점으로 차이의 폭이 더 커졌음.
- 보건·복지 전략의 모든 세부 항목에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특히, 분만의료 서비스, 산후조리 서비스, 의료서비스 범위, 의료서비스 수준,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 등 의료서비스 여건에 대한 만족도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표 2-6〉).

〈표 2-6〉 보건·복지 전략 세부 항목별 도시·농촌 지역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2022년)

(11점 척도)

구분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의료 서비스 범위	의료 서비스 수준	분만 의료 서비스	산후 조리 서비스	여성 출산 지원	신속한 응급 의료 서비스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아동 양육 돌봄 지원	취약 계층 복지 지원	농어작업 안전 (농어업인)	전체 평균
도시 지역	7.7	7.3	7.2	6.8	6.4	6.2	7.0	6.5	6.4	6.2	-	6.8
농어촌 지역	6.1	5.1	5.3	4.3	4.0	4.4	5.2	5.6	5.3	5.4	7.1	5.1
도·농 차이	-1.6	-2.2	-1.9	-2.5	-2.4	-1.8	-1.8	-0.9	-1.1	-0.8	-	-1.7

주: 모든 항목에서 도·농 비교 시 χ^2 값은 $p <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함('농어작업 안전' 항목 제외).
자료: 민경찬 외(2022).

- 농어촌 지역의 의료서비스 여건이 도시 지역에 비해 열악한 한편, 농어촌 지역 안에서 읍·면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읍·면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남(〈표 2-7〉).
- *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같은 보건·복지 전략 내 다른 세부 여건의 만족도 점수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지만, 읍·면 지역 간 0.5점으로 가장 큰 격차

〈표 2-7〉 보건·복지 전략 세부 항목별 읍·면 지역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2022년)

(11점 척도)

구분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의료 서비스 범위	의료 서비스 수준	분만 의료 서비스	산후조리 서비스	여성 출산 지원	신속한 응급 의료 서비스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아동 양육 돌봄 지원	취약 계층 복지 지원	농어작업 안전 (농어업인)	전체 평균
읍 지역	6.4	5.3	5.4	4.5	4.3	4.6	5.3	5.6	5.4	5.3	7.1	5.4
면 지역	5.9	5.0	5.1	4.2	3.9	4.2	5.1	5.6	5.3	5.5	7.0	5.2
읍·면 차이 (읍-면)	0.5	0.3	0.3	0.3	0.4	0.4	0.2	0.0	0.1	-0.2	0.1	0.2

자료: 민경찬 외(2022).

○ 이처럼 그동안 삶의 질 계획에서 의료취약지 해소 등 농어촌의 부족한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였고, 대부분 성과지표를 달성하는 등 사업은 비교적 충실하게 수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도시 대비 농어촌 생활 만족도 격차는 여전히 크고 그 중에서도 보건의료 전략의 격차가 가장 두드러진 것에 대해서는 사업 방향 전환이나 사업 성과관리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정책 제언〉

- 농어촌 고령화,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도·농 간 건강불평등 등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 응급, 분만 등 필수 의료에 대한 접근성 보장,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서비스 강화 등 그동안 추진되어왔던 정책의 효과성을 재검토하여 정책 추진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농어촌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농어촌 지역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된 세부사업들은 상대적으로 장기간 추진되어 왔던 사업들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행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의 체감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사업과 ‘농어촌 공공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사업은 지금까지 농어촌 보건의료기관의 하드웨어 개선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만큼 향후 농어촌 주민의 체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의 방향 전환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음.

- 특히 '농어촌 주민 정주민족도 조사' 결과 먼 지역 주민들의 의료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농어촌 지역 중에서도 의료서비스 접근에 특히 불리한 주민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임.

○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사업 내용과 예산 규모를 대규모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응급의료 접근성이 특히 낮은 산간 및 도서지역 주민들의 응급의료 접근성 체감지표를 별도 선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 등으로 의료기관 폐업이 증가하고, 의료진이 이탈하여 최소한의 응급의료 접근성 보장도 어려운 상황임.

* 특·광역시 제외 시·군·구 중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곳 24개소('22.12월 기준)(보건복지부, 2023)

* 2022년 기준 중증 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 치료기관 도착률은 49.6%에 불과(한겨레, 2023. 5. 31.)

- 현재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도시와 동일한 법정 인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운영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노력이 시급하게 요구됨.

-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내용과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야 할 것임.

- 예컨대 현재 고령으로 인한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농어촌의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의료기관이 적어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민관 거버넌스 중심으로 방문형 의료·간호 서비스,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사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되어 온 정책 성과와 농어업인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만족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세부사업별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대부분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나, 성과목표 달성 여부와 농어업인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성과가 별개로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함.

1.2.2. 농어촌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 정책군 개요

- 본 정책군은 고령화, 과소화가 심화되는 농어촌에 통합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농어촌형 서비스 제공 모형을 개발·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주요 정책과제로 ① 농어촌 통합돌봄 인프라 조성, ② 농어촌 지역사회 통합 돌봄 개발 및 확산을 설정함.
 - 관련 핵심과제는 ① 농촌형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시스템 구축, ② 사회적 농업 활성화임.

〈표 2-8〉 농어촌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정책군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평가 결과

단위: 점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2020년	2021년	2022년
(1-2-1-1) 농촌형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시스템 구축	91.0	90.7	96.0
(1-2-2-1) 사회적 농업 활성화	93.0	93.3	92.0

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각 연도).

□ 평가 결과

〈정책 성과〉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의 일환으로 추진된 ‘농어촌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정책군은 시장경제 영역과 공공부문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자율적 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사회서비스 정책사업과 농어촌 정책사업을 연계한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의 개발과 확산에 집중하였으며, 일

부 지역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인정됨.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지난 3년간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 모형을 개발·검증하기 위해 5개 도농복합 지역(경기 남양주,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김해, 제주 서귀포)과 2개 농촌 지역(충남 청양, 충북 진천)에서 수행되었음. 이를 통해 농업 등 농촌 자원을 활용한 돌봄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을 장려하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영양보충형 식사배달, 찾아가는 보건 서비스 등)를 시도함.
- (이용자 만족) 농촌 지역(청양)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행한 결과,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가 증가하였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은 경감하였음.
*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효과 평가 및 개선사업 연구(2020, 단국대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건강증진정책연구소)
- (장기요양 진입 예방)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 지역(청양, 천안)과 미실시 지역(홍성, 예산)의 전체 노인 대비 장기요양 신청자 비율 증감을 비교한 결과, 그 비율이 선도사업 미시행 지역에서는 증가하였으나 시행 지역에서는 감소하였음.
- (농어촌 정책사업과의 연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위한 지역 내 서비스 자원으로 사회적 농업을 활용하여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 적응을 지원한 사례(진천)가 관찰됨.
-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 동 정책군과 관련해 명시한 부처간 협업을 통한 지자체, 지역 사회서비스 기관, 민간 조직(사회적 경제 조직 등) 등의 지역 단위 통합돌봄 거버넌스 구축 성과는 미약한 것으로 보임. 특히 부처 수준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요구됨.

○ 성과지표 상 드러난 성과를 살펴보면, 동 정책군의 핵심과제는 지난 3년간 매년 성과지표를 100% 이상 달성해 왔음. 다만 상기한 바와 같이 현재의 성과지표들은 각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여부를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으므로 제한적인 수준에서 소기의 성과를 성취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농촌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성과지표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한 자립생활 유 비율(%)’의 목표치를 지난 3년간 매해 100% 이상 달성하였으나, 성과지표의 측정준거가 적절치 않은 한계로 인해 동 과제의 목표가 충분히 성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성과지표인 사회적 농장 지원 개소수의 매년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함으로써, 농촌의 자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등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농장의 양적 확대에 기여함. 그러나 실제 농촌 지역에서 사회적 농장을 통한 돌봄 인프라 확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농장의 서비스 이용자 규모,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 수준, 사회적 농장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완화 효과 등이 성과지표로 포함될 필요가 있음.
- * 2022년 기준 사회적 농장 및 협력 기관을 통해 약 2,400명의 사회적 약자에게 서비스 제공 (정은수 외 2022)

○ 그 외, 동 정책군의 핵심과제들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도모하는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과 관련해 다음의 성과를 성취함.

- (농촌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일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인프라 조성이 시도되었으며, 경로당 등을 거점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주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킴.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회적 농장 내 고용(보조강사, 행정·관리직), 지역사회 취·창업 지원을 통해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함. 또한, 사회적 농업 지원 확대를 위한 거점 농장 운영(현장교육, 자문 등 수행), 지자체 조례 제정(충남, 제주, 전북 등), 지역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신설(충남, 제주, 경남) 등 농촌의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천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함.
- * 발달장애 아동가족간 돌봄 협동조합 결성(완주군 사례), 여성쉼터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원예교육 및 지역교육 실시, 강사 고용, 창업 지원(임실군 사례) 등

〈정책 제언〉

○ 본 정책군은 지난 3년간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바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및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수행해 왔음.

- (성과 및 의의)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추진하였으며, 사회적 농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의 돌봄 인프라 확충 가능성을 확인함. 이는 기존 돌봄서비스와 달리 농촌의 특성에 적합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또한 사회적 농장의 꾸준한 양적 성장이 이루어진 가운데, 2022년에는 지역서비스 공동체를 도입하여 농촌에 필요한 더 다양한 서비스를 자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질적 확대를 시도함.
- (한계) 농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행한 지역이 전국에서 단 두 곳(청양, 진천)에 불과하여 다른 농촌 지역으로의 적극적인 확산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부처간 협력도 미약한 수준임. 또한, 사회적 농업의 경우 현재 공모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적 배분이 고려되지 않음. 농촌의 돌봄 수요 증가에 비추어 향후 사회적 농업의 규모가 더 확대될 것을 가정한다면, 일부 지역으로의 편중·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농촌의 고령화 여건 및 주민 수요를 고려할 때, 농촌에 적합한 돌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해당 정책군은 향후에도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 추진되어야 함. 다만 정책 여건의 변화 등에 비추어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농촌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2022년 12월로 종료됨에 따라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이 모색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핵심과제의 명칭도 변경되어야 함. 예를 들어 핵심과제의 명칭을 ‘농촌 노인 맞춤형 돌봄 여건 조성’으로 변경할 경우, 예방적 돌봄 제공을 목적으로 취약 노인의 욕구에 기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포함하고, 해당 서비스 자격 요건을 갖춘 농촌 노인의 이용률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촌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할 수 있음. 핵심과제의 명칭을 ‘농촌 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활성화 여건 조성’으로 변경할 경우,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4년 8월 시행)에 근거해 돌봄 등 농촌 주민에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정부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농촌서비스협약제도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만함.

- (사회적 농업 활성화) 향후 계획에서는 사회적 농업의 확대가 양적 측면을 넘어 질적 측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 2022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된 지역서비스 공동체와 관련하여 기존 사회적 농업과는 성격이 다소 다른 만큼 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별도 지표가 요구됨. 또한 지역서비스 공동체는 동 정책군의 또 다른 핵심과제인 ‘농촌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

1.2.3. 보육·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육성

□ 정책군 개요

- 본 정책군은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육아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주요 정책과제로 ① 농어촌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충, ② 농어촌 지역 특성에 맞는 보육 서비스 제공을 설정함.
 - 관련 핵심과제는 ① 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② 찾아가는 보육 서비스 제공임.

〈표 2-9〉 보육·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육성 정책군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평가 결과

단위: 점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2020년	2021년	2022년
(1-3-1-1) 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93.7	92.0	86.0
(1-3-2-3) 찾아가는 보육 서비스 제공	90.3	89.3	95.3

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각 연도).

□ 평가 결과

〈정책 성과〉

- 본 정책군의 세부 과제는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 지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며 대부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기본계획의 취지에 맞게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일부 과제에서는 명확한 성과가 측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되었고, 목표로 하는 양적 확충을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보임. 그러나 사업의 목적인 국공립시설 확충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보장되고 있는지는 추후 검토와 확인이 필요함. 공공보육이용률 제고라는 정책 요구는 충족되고 있으나 농촌의 열악한 민간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양적 기준을 만족시킨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 경우에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면밀한 평가가 필요함.
- 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 지원 사업의 경우 영유아 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 부담 경감과 농어촌 보육 여건 개선이라는 취지에 적합하도록 추진되었으나, 목표로 한 실적이 충분히 달성되고 있는지는 주어진 성과목표만으로 확인이 어려움. 또한 성과목표가 연도별로 다르게 제시되고 있음.
 - * 2020년도와 2021년도의 성과지표는 공동아이돌봄센터 이용자 수였으나, 2022년도에는 센터 개소 수로 변경되어 추진 경향 확인이 어려움. 제시된 내용으로는 2021년도를 제외한 성과 목표 달성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농어촌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취지에서, 핵심과제인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 확대, 차량 운영비 지원,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은 지속적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22년 실시된 농어촌 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정책군 내 정책이 농어촌 지역에 미친 사회적 파급 효과 및 영향력은 지속적 성과목표 달성으로 보육 접근성이 강화되는 효과를 보이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한계가 있음.

- 정책군 내 정책·사업들이 사업량의 확대 및 공공 보육의 지속적 추진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는 있는 반면, 여전히 도시 대비 국공립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작은 예산 규모와 사업량 변동으로 인해 농어촌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한 지속성, 안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주민 만족도는 높지만 작은 사업 규모로 인해 정책 인지도와 이용 경험이 미미한 것이 문제로 지적됨.
- 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사업 목표치를 매년 초과 달성하고 있어 보육서비스 접근성 개선에 기여하였으나, 보육의 질적 수준에서 도시와의 격차 해소가 여전히

한 한계로 지적되고 있고, 영향력 제고를 위해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 전달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음.

〈정책 제언〉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하여 보육과 육아서비스의 기반을 확충하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성은 농어촌에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공적 양육지원에 대한 접근성 제고라는 점에서 가장 큰 성과와 의의가 있음.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양적 확충이 농어촌 보육의 질 개선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함이 있고, 찾아가는 보육 서비스 사업 확장은 지역적으로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이 문제일 수 있음.

-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과 소규모 돌봄시설(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를 통해 공공보육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농어촌 영유아 가정이 수적으로 확대되어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였음.

- 농번기아이돌봄방 확충 및 운영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보육 수요에 가장 적합한 농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도심과 멀어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이동식 놀이교실을 확대·운영토록 함으로써 공적 양육지원에의 접근성이 제고되었음.

* 연도별 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 수 변화: 918개소(2020년) → 983개소(2021년) → 1,037개소(2022년)

* 찾아가는 보육서비스(이동식 놀이교실) 전년 대비 증가율: 16.7%(2020년) → 42.9%(2021년) → 30.0%(2022년)

○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 그동안 보육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양적 확충에 집중했던 점을 넘어 질적 개선에 한층 더 관심을 가져야 함.

- 국공립 어린이집의 양적 확충은 민간시설의 전환, 매입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가 다수 있어 이들 시설이 국공립 수준에 적절한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함.

- 찾아가는 보육 서비스인 이동식 놀이교실은 단순히 장난감 대여 등 제한적 활동을 넘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지자체의 적극성과 재정 차이 등으로

지역에 따라 운영에 편차가 크므로 사업 효과성에 대한 정책 홍보 등을 통해 확장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음.

-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의 경우도 2세부터 초등 2학년까지의 넓은 범위 아동을 동시에 1명의 돌보미가 돌봄 활동을 하고 있어 아동의 안전, 건강, 성장지원 등 개별 요구 대응에 소홀하지 않도록 돌보미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십수년 간 지원 금액에서 변화가 없는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 등은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협력과 공동 노력을 통해 점진적 증액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기존 부처 정책·사업 중 향후 기본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과제로, 농어촌 영유아 양육 가정이 가장 높은 수요를 보여주고 있는 긴급·일시 보육, 시간제 보육 확충을 제안함.

- 농어촌 영유아 부모는 긴급한 상황(병원 진료 등)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자녀 돌봄을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없어 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김은설 외, 2023). 기존 보건복지부 사업인 시간제 보육이 농어촌에서는 거의 작동하고 있지 못하므로, 양적으로 증가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거점으로 하여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사회 내 지원 인력 확보 등을 통해 긴급·일시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농어촌 맞춤형 일시 보육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1.2.4. 농어촌 사회 안전망 내실화

□ 정책군 개요

○ 본 정책군은 노령·취약 농어업인의 소득 불안정 및 농어작업 관련 위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사회 안전망을 내실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주요 정책과제로 ① 농어업인·농어촌 주민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 강화, ② 농어업인 작업 안전 보장, ③ 노령 및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설정함.

- 관련 핵심과제는 ① 농업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지원, ②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③ 농업 재해보험 사업 내실화임.

〈표 2-10〉 농어촌 사회 안전망 내실화 정책군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평가 결과

단위: 점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2020년	2021년	2022년
(1-4-1-1)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95.7	96.7	97.3
(1-4-1-2)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97.7	96.7	94.7
(1-4-2-1)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95.7	98.0	95.3
(1-4-3-2) 농업 재해보험 사업 내실화	98.0	97.3	93.3

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각 연도).

□ 평가 결과

〈정책 성과〉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3개년 간 성과지표 달성도가 100%를 상회하였고 사업 성과에 대한 질적 판단도 충실한 것으로 나타남.
 -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지역 농업인에게 최대 28%(농어촌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22%를 고려하면 최대 50%)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됨.
 - 2022년 건강보험료 지원 세대가 약 34만 세대로 나타나 2020년 32만 세대보다 약 2만 세대가 증가하였음.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수혜 농가가 증가하여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효과가 발생 하였으나, 해당 제도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 접근성 격차 문제 해결이 필요함.
 - 2019년을 기준으로 1회 방문당 의료비의 도·농 격차가 주요 질환에서는 1.7만 원, 치료 가능 사망 질병에서는 7만 원 가량 발생함(안석 외 2019).
 - 건강보험료 지원 외에 다양한 정책 수단을 이용하여 의료접근성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함.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3개년간 성과지표 달성도가 100%이며, 사업 효과에 대한 질적 판단도 충실한 것으로 나타남.

- 농업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기준소득 금액 상향으로 인한 월 최대 지원 금액 인상, 연금 수급자 및 수급액 증가 등의 효과가 확인됨.

* (수급자 수) 2020년 약 48만 명 → 2022년 약 51만 명, 약 3만 명 증가

* (월평균 수급액) 2020년 30만 원 수준 → 2022년 35만 원 수준, 5만 원 인상

〈표 2-11〉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현황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월평균 지원 인원(명)	376,093	373,573	363,780	347,771	338,759	310,802
연간 지원 금액(억 원)	1,768	1,769	1,812	1,746	1,751	1,619
1인당 평균 지원액(원)	39,183	39,454	41,518	41,842	43,068	43,404
기준소득 월액(원)	910,000	910,000	970,000	970,000	1,000,000	1,000,000

주: 2023년 기준소득 월액은 1,030,000원임.

자료: 2022년 신청훈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과 수급자 수가 증가하여 사업의 효과가 나타났지만, 여전히 전체 가입률과 농업인 가입률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타 지원 제도와 비교하여 기준 소득이 낮아 보험료 지원 금액이 부족함.

- 농업인은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로 농업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국민연금 공단에서 발표하는 농업인 국민연금 가입률 공식 통계는 없지만, NH투자증권 100 세시대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2020)에 따르면 2018년 농업인의 연금 가입률은 35.6%로 추정되며, 해당 연도 전체 국민연금 가입률 70.9%와 비교하여 절반 수준에 불과함.
- 농업인의 월평균 수급액은 2020년 30만 5,000원에서 2022년 34만 6,000원으로, 평균 기초연금 수급액인 45만 6,200원의 76.1% 수준임.
- 보험료 지원에서 기준소득 월액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와 비교하여 부족함.

〈표 2-12〉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비교

구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270만 원 미만) 근로자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저소득(270만 원 미만) 가사근로자	농어업인
지원 내용	보험료의 80%	보험료의 80%	- 기준소득 이하: 50% - 기준소득 초과: 46,350원 (기준소득: 103만 원)
지원 기간	36개월	36개월	일몰제

자료: 저자 작성.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은 성과지표 달성률이 95% 이상이며, 사업 성과에 대한 질적 판단도 충실한 것으로 나타남.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은 2022년 가입 인원이 91.2만 명으로 전년 대비 1만 명 이상 증가하였고, 약 5만 명의 농업인에게 800억 원 규모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농업인 생활 안전에 기여함.
- 2021년 가입자 90만 명 중 86%인 77만 명이 2022년에 재가입함으로써 농업인에게 필요한 보험으로 인식됨.
- 지원 금액 상한액 제한, 일시금 지급 등의 문제점은 최근 꾸준히 개선되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보험금 지급도 원활히 유지되는 바 목적인 사업 효과가 존재하며,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추진 중임.

〈정책 제언〉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방향으로 정책 형성·실행·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전달 체계의 미비, 서비스 접근성 부족, 민간 시장의 미진입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 농업인에 대한 정책이 확대 중임.

-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금도 늘고, 지원받는 농업인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정책

보험으로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가입률도 증가하고, 보장 범위도 확대되고 있음.

○ 전체적으로 정책 대상자가 확대되어 사각지대는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임의가입 형태의 지원임을 감안하여 세부적으로 정책에서 소외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농업인 집단이 확인이 필요함.

-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임의 가입 방식이므로, 정책 접근성이 높은 농업인은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존재할 수 있음.
- 2021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적연금 미가입 이유로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가 62.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50대 이하로 대상을 한정하면 그 비율은 72.8%로 증가함.
- 청년 농업인이나 소농은 경제적 문제로 국민연금 가입에 주저할 가능성이 높고, 국민연금 가입 없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음.
- 소외된 집단을 파악하고, 해당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괄 지원에서 벗어나 맞춤형 지원이나 차등 지원 등도 고민해야 함. 정책 성과를 평가할 때 단순히 지원자 수가 가입률 등 포괄적 수치보다 농업인 집단을 나누어 집단별 사각지대 개선을 지표화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

○ 보험료 지원 금액이 지속 상승했지만, 여전히 타 정책 대비 지원 금액이 낮아 도시 주민과 차별이 존재할 수 있음.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서 기준소득 금액이 최근 상승했지만, 여전히 도시 주민이나 유사한 정책 대상자와 비교했을 때 낮기 때문에 향후 충분한 노후 소득을 보장받기 어려움.
- 건강보험료 지원도 농어촌 거주자가 지불해야 하는 접근성 비용을 고려하면 충분한 금액이 지원되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음. 단순히 지원 금액을 올리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농어업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서비스 과소 공급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이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교육·문화 전략

2.1. 교육·문화 전략 전체 평가 결과

2.1.1. 정책 목표 달성도

□ 정책 목표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교육·문화 전략의 목표는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임.

-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정책군으로 설정된 주요 과제는 ①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②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③ 농어촌 지역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 ④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임.

〈표 2-13〉 교육·문화 전략 정책과제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학생 교육 복지 증진 • 농어촌 환경을 고려한 교육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성인 문해 교육 활성화 • 농어촌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농어촌 지역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 소외지역 문화·여가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문화 공동체 활성화 • 향토 문화자원 활용 생활문화 육성

자료: 관계부처 합동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2020).

□ 정책 목표 달성도

○ 평생학습도시 지정 수, 농어촌 고등학교 무선망 구축률, 농어촌공간 체육시설 지원 수, 생활문화센터조성 등 교육·문화 전략 대부분 성과목표가 증가하였으나, 만족도는 소폭 하락함.

- 농어촌 초중고 통학버스 제공 비율은 51.3%(2020)에서 54.0%(2022)까지 증가함.
- 평생학습도시 지정 시군구 수는 174개소(2020)에서 188개소(2022)로 점차 증가함.

- 농어촌지역 체육공간 지원 수는 100건(2020)에서 110건(2022)으로 점차 증가함.
-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건수는 44건(2020)에서 60건(2022)으로 점차 증가함.
- 생활문화센터 조성 개소 수는 217건(2020)에서 383건(2022)으로 증가함.

〈표 2-14〉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내 교육·문화 전략 성과 목표

전략	성과지표	성과목표(실적)		
		2020년	2021년	2022년
교육·문화	농어촌 초·중·고 통학버스 제공 비율(%)	51.3	54.6	54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참여학교수)	-	-	-
	평생학습도시 지정 시·군·구 수(누계, 개)	174	180	188
	농촌유학 지원시설 수(개소)	26	29	29
	농어촌 고등학교 무선망 구축률(%)	8.2만	31.2만	38만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건수)	202	187	198
	농어촌 공공·작은도서관 건립 수(건수)	45	42	47
	농어촌지역 체육공간 지원 수(건수) ※ '23년부터 지방이양됨	100	105	110
	생활문화공동체 지원(건수)	44	49	60
	생활문화센터 조성(누계, 개소)	217	351	383
	문화가 있는날 참여프로그램 수(개수)	18,488	21,322	21,530
	문화예술행사 관람율(%)	60.5	33.6	58.1
농어촌 교육·문화 만족도(10점척도)	4.8	5.4	5.2	

자료: 농식품부 내부자료.

2.1.2. 삶의 질 개선 정도

○ 2022년도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3년간 교육·문화 전략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에서 동일하게 소폭 하락해 답보 상태를 보였으며,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도시 지역 주민에 비해 모두 낮게 나타남.

- 특히 지역사회 연계 교육, 문화·여가 시설, 문화·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격차가 크게 나타남.

〈표 2-15〉 교육·문화 전략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11점 척도)

구분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2020년	2021년	2022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교육·문화	공교육 수준	6.6	6.7	6.8	5.2	5.8	5.8
	방과 후 교육 기회	6.5	6.6	6.7	5.1	5.7	5.6
	평생교육 기회	6.1	6.3	6.2	4.7	5.4	5.1
	지역사회 연계 교육	6.1	6.3	5.9	4.7	5.4	4.7
	문화 여가 시설	6.2	6.5	6.6	4.6	5.4	5.2
	문화 여가 프로그램	6.2	6.2	6.3	4.4	5.2	5.0
	문화 공동체 활동	5.7	5.9	5.8	4.7	5.2	4.8
	향토문화 향유	5.7	-	-	4.9	-	-
	지역 향토 문화 기회	-	-	6.0	-	-	5.3
	(평균)	6.1	6.4	6.3	4.8	5.4	5.2

자료: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각 연도).

○ 같은 기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 모든 핵심 항목의 이행실태는 중기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일부 서비스 항목에서 개선 정도가 미흡함.

- 초·중등교육, 문화, 도서관 항목의 2022년 수치(소요시간)가 전년 대비 증가함.
- 평생교육 항목의 달성도가 2021년(79.1%) 하락 후, 2022년(84.6%) 회복함.

〈표 2-16〉 교육·문화 전략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 이행실태 변화

부문	서비스 항목	세부시설(기초 인프라 시설) 및 측정 기준	2020년	2021년	2022년	목표 ('20~'24)
교육·문화	초·중등교육	차량을 이용하여 10분 이내에 농어촌 초등학교·중학교에 도달할 수 있다.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초등학교·중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7.5분	7.3분	7.4분	10분
	평생교육	읍 면내에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설치·지정된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88.2%	79.1%	84.6%	70%
	문화	차량을 이용하여 40분 이내에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에 도달할 수 있으며,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24.7분	24.0분	24.1분	40분
	도서관	차량을 이용하여 10분 이내에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10.3분	9.9분	10.0분	10분
	체육시설	차량을 이용하여 30분 이내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8.8분	17.0분	16.6분	30분

자료: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각 연도).

○ 교육·문화 전략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와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바탕으로 볼 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농어촌 지역의 여건은 도시 지역에 비해 여전히 열악하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도·농간 격차 완화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

2.2. 정책군별 평가 결과

2.2.1.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 정책군 개요

○ 본 정책군은 통학 여건 개선을 통한 농어촌 학생의 교육 복지 수준 향상 및 농어촌 환경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주요 정책과제로 ① 농어촌 학생 교육 복지 증진, ② 농산어촌 환경을 고려한 교육 제공을 설정함.

- 이와 관련한 핵심과제는 ① 농어촌 학교 통학여건 개선, ② 농어촌 방과후학교 내실화임.

〈표 2-17〉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정책군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평가 결과

단위: 점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2020년	2021년	2022년
(2-1-1-1) 농어촌 학교 통학여건 개선	92.7	84.7	96.0
(2-1-2-5) 농어촌 방과후학교 내실화	93.7	90.7	93.3

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각 연도).

□ 평가 결과

〈정책 성과〉

○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농어촌 영향평가 결과, 통학버스 배차대수 확대 등 지속적으로 통학여건 개선에 주력한 결과 이용학생의 이동시간이 감소 추세임이 확인됨.

* 통학차량(유치원 포함): (2016년) 3,213대 → (2020) 4,878대, 51.8% 증가

〈표 2-18〉 2020년 지역별 학령인구(12~19세) 통학버스 이동시간

지역 구분	15분 미만	15~30분 미만	30~60분 미만	60분 이상
도시(동부)	10.6%	62.2%	20.6%	6.6%
농어촌(읍·면부)	22.3%	60.3%	14.7%	2.7%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20).

○ 농어촌 영향평가에서 학부모 및 지방 교육청 실무자 면담 결과, 농어촌 지역의 협소한 도로 및 안전환경 문제를 주요 개선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음.

- 지방도·마을진입로 등 전반적으로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한 교통여건 불리지역이 많아 기상악화 시 대형버스 운행 곤란함. 또한 유아용 카시트 등 유아보호장구 설치(도로교통법 제50조)가 미흡하고, 일부 도로는 보행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함.

○ 농어촌 방과후 학교 관련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 긍정적 응답이 85% 이상으로 꾸준히 유지 중임.

-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서 농어촌 소규모학교 방과후학교 업무 지원을 통해 학교 업무를 경감하고, 역량 있는 강사를 확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을 지원함.
- 농어촌 지역 학교의 방과후 학교 지원 우수사례가 꾸준히 발굴되어 보급·전파되고 있음.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우수 사례〉

2021년

- (충남 내산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핵심역량 꽃 피우는 내산 교육
- (경북 울진초등학교) 온마을 CARE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학교
- (경남 진성초등학교) 더 배움을 행복을 담은 참 좋은 방과후학교 이야기
- (충남 원이중학교) 일곱빛깔 방과후학교로 높아지는 원이 인재들의 품격
- (충북 안내곶자락곶다락방) 마을교육공동체, 품이 있는 아이들의 꿈 다락방

2022년

- (세종 북부교육지원센터)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전담*하여 단위학교 업무 부담 경감, 농어촌 학교 강사 확보 및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지원
 - * ①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수립, ②순회강사 관리, ③회계관리, ④민원관리, ⑤공개수업 및 평가 환류 등
- (경남 함양교육지원청 캠퍼스형 방과후학교) 지역사회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역대학 연계한 대학생 튜터링, 거점형 방과후 운영 등 캠퍼스형 방과후학교 운영
- (전북 방과후업무 최적화학교)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서 전담*하여 소외 지역 학교의 강사 채용 곤란 문제 해결,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및 질 관리
 - * ①방과후위탁 업체 선정·계약, ②프로그램 컨설팅·모니터링, ③지역사회연계, ④민원관리, ⑤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정책 제언〉

○ 농어촌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과 연계한 공공통학차량 이용률 제고 및 다양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함. 우선 통학수단 확대 및 여건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변경과 더불어 학부모 및 현장 요구를 반영하여 통학차량 안전 지표 신설이 필요함.

- 현재 성과지표인 ‘농어촌 초중교 통학버스 제공 비율’은 학생 수와 무관하게 통학버스를 운영할 경우 ‘달성’으로 평가되는 문제점이 있음. 농어촌 지역 학생 입장에서 정책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농어촌지역 통학수단 수혜 학생수 비율’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측정산식: 농어촌 통학수단(버스, 택시비) 수혜 학생수/농어촌 학생수×100

〈표 2-19〉 농어촌 통학 여건 개선 사업의 성과지표 달성 목표치(안)

구분	2020년	2025년	비고
성과지표 달성률(%) [농어촌지역 통학수단 수혜학생 수 비율(%)]	19.0%	21.0%	2015~2020년 승용차·승합차 이용 증가율 (2.3%p)을 감안하여 설정

자료: 저자 작성.

- 통학차량 증차, 통학수단 다양화, 노선 조정, 승하차 구역 확대 등으로 수혜자 중심의 실질적 통학여건 개선을 기대함.

- 학생 수요 중심 통학수단 다양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학수단 제공을 통한 수혜자(학생) 중심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농어촌 초중고 통학수단 제공 비율’을 성과지표로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측정산식: (통학수단[버스, 택시비] 제공 농어촌학교수)/(전체 농어촌학교수)×100

- 또한 유·초등학생 등 교통약자가 주 정책 대상인 점을 감안하여 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호장구 설치를 성과지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표 2-20〉 농어촌 통학 여건 개선 사업의 성과지표 제안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유아·저학년 어린이용 보호장구 설치 차량 비율(%)				
* 측정산식 : (읍·면 지역 소재 학교의 유아·저학년 어린이용 카시트 설치 통학차량 수) / (읍·면 지역 소재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통학차량 수) × 100	42.7%*	60.0%	80.0%	100.0%

주: 2021년은 읍·면 소재 학교 중 보호장구 설치 차량 비율, 2024년까지 보호장구 전면 설치를 목표로 설정함.

자료: 저자 작성.

- 통학 안전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 제시, 전담인력 확보, 지역교육협의체 운영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는 농어촌 통학차량 안전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지방교육청은 자체 점검·개선체계를 구축해야 함.

- 교육청은 통학차량 운영 등 농어촌 통학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지정·확보로 통학 여건 개선 업무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게 ① 통학차량 증가 및 노선 조정, ② 지원수단 다양화, ③ 통학로 안전확보 등 자체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함.

* 전담인력은 지역교육협의체에 참여하여 안전위해요소 관리활동 강화

- 또한 학부모, 교육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학 관련 현안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지역교육협의체 주도로 통학차량 탑승장소 안전 확보, 오작동 교통신호 개선 등 자체 안전위해요소 관리 활동을 확대하도록 함.

- 차량이 부족한 농어촌 특성을 고려하여 통학차량 운영 효율화가 필요함.

- 학교 간 통학수단 공유, 타 교육활동 지원 등을 통해 통학차량 활용을 극대화하고, 학생이 유리한 노선을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함. 차량 증차 시 협소도로에도 운행 가능한 중소형 통학차량 중심으로 확대하도록 함.

- 농어촌 방과후 학교 내실화를 위한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의 ‘방과후 학교 학생 만족도’ 외에 방과후 학교 운영비 지원 외에 실제 실행하고 있는 ‘순회강사 선발·배치 지원’,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과 관련한 별도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실질적인 사업 개선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2.2.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 정책군 개요

- 본 정책군은 성인 문해 교육 활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기반 구축을 통해 농어촌 지역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여건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주요 정책과제로 ① 농어촌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 ② 농어촌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실화를 설정함.
 - 이와 관련한 핵심과제는 ① 농어촌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②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표 2-21〉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정책군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평가 결과

단위: 점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2020년	2021년	2022년
(2-2-1-1) 농어촌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90.3	91.3	93.3
(2-2-2-2)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91.3	90.7	91.3

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각 연도).

□ 평가 결과

〈정책 성과〉

- 농어촌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정책 사업은 지난 3년간 성과 목표를 충실히 달성함.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성과지표로 문해교육프로그램 개설 수를 설정하고, 매년 목표치를 전년 대비 5% 향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1,693개, 1,777개, 1,865개의 성과목표를 계획하였고, 2020년은 실적을 기재하고 있지 않아 달성률을 알 수 없지만, 2021년은 1,770개 개설(99.6% 달성), 2022년은 2,044개 개설(114.3% 달성) 운영으로 사업목표를 충실하게 달성해 왔음.
-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축소와 고위험군인 고령층 문해학습자의 참여 저조로 성과목표를 100%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 농어촌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의 정책목표 개선 사항으로 제안되었던 농어촌 지역 성인의 문해능력 수준이 향상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제3차 성인문해능력조사(2020) 결과, 농어촌 거주자의 12.1%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조사되어 제2차 조사 대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 농산어촌 성인의 비문해율 하락: (2017년) 16.2% → (2020) 12.1%, 4.1% 감소

- 제3차 성인문해능력조사 결과가 2020년의 조사결과이기 때문에 2020~2022년의 사업 성과라고 할 수 없지만,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2006년부터 현재까지 실행되고 있기에 농산어촌 성인의 비문해율 하락은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의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임.
- 성인문해능력조사의 경우 3년 주기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사업의 성과로 제시하기 어려운 지표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성인문해능력조사는 농어촌 주민을 포함한 전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능력 수준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이지만 장기적인 문해교육 지원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음.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은 성과목표로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를 설정하였는데, 지난 3년간 충실히 성과목표를 달성해오고 있음.

- 2020년도의 성과 목표는 지난 4년간(2016~2019년) 사업의 만족도 결과의 평균(88.0점)을 기준으로, 만족도 점수의 임계적 특성을 고려해 평균 만족도 대비 소폭 상향하는 것으로, 즉 88.3점으로 조정하여 목표를 설정하였음.

- 하지만 2020년도의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는 85.2점으로 96.5%의 달성률을 보였음.
- 미달성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인해 고위험군인 어르신의 참여율 저하, 초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 안전한 사업운영을 위한 준비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지연되어 활동 기간 축소, 활동 내용이 대면 중심에서 비대면 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참여자들의 참여방식 변경 등의 이유로 참여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2021년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10~12월) 결과,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 만족도는 92.4점으로, 목표치인 88.6점 대비 104.3%의 달성률을 보여주고, 2022년 종합 만족도는 91.6점으로 목표치인 88.9점 대비 103.0%의 달성률을 보여줌.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은 고령사회 어르신의 문화향유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역할 및 소속감 확대라는 사업 목적에 맞게 성과를 내고 있음.

- 2021년 지원했던 총 187개 문화프로그램 중 농어촌(수도권 제외)에 120개(64.2%)를 지원하였는데, 참여자 대상 삶의 격(인지적, 정서적, 문화역량)을 조사한 결과, 83.8점으로 문화프로그램 비참여자 74.0점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 2021년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의 사업효과성 분석 결과, 참여자의 삶의 격(인지적, 정서적, 문화역량) 및 행복온도, 사회자본이 미참여자 대비 10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2년도 농어촌 어르신 대상 문화예술활동 지원 결과, 총 198개 프로그램 중 농어촌(수도권 제외)에 115개(58.1%)를 지원하였고, 문화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행복온도 조사 결과가 78.2℃로, 2020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인 70.0℃보다 8.2℃ 높게 나타남.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지방문화원을 통해 많은 부분 농어촌 지역에서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세부 사업 내용이 분야별 목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정책군은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처음으로 포함되어 추진된 사업이지만, 교육 취약계층이 많은 농어촌 주민의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함.

- 농어촌 성인문해교육 지원은 이전 학교교육 기회가 적었던 농어촌 주민, 특히 여성노인들의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의 문해역량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기여를 함.
- 고령층 맞춤형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문화향유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활동 및 사회적 역할 확대를 통해 삶의 만족도 증가 및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함.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은 노인만이 아니라 세대간 협력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세대간 소통 활성화로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였고, 노년문화활동의 다양성 확보 및 자발적 활동 환경 조성을 통해 긍정적인 노년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단체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문화서비스 제공과 함께 지역기반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단체의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함. 이는 결국 지역의 문화서비스 수준 향상과 인프라 확대로 이어져 농어촌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기회가 지속 가능하도록 기여하고 있음.

〈정책 제언〉

- 농어촌 세대별 맞춤형 평생교육의 확대를 위해 사업 및 예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함.
 -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정책군의 사업은 문해교육, 문화예술프로그램, 양성평등 교육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하지만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정책군은 ‘생애 주기 별 맞춤형 교육 여건 마련’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군에 포함된 사업은 일부 세대 즉 고령층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됨.
 - 물론 농어촌 지역의 고령층이 다른 세대에 비해 교육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지만, 농어촌 지역의 다양한 세대와 생애 주기에 있는 주민 역시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이는 농어촌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음.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활성화 사업

등은 예산 확보 및 확대를 통해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육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를 위해서 예산 확대를 통한 교육 수요에 충족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정책군이 농어촌지역 생애 주기 별 맞춤형 교육 여건 마련이라는 사업 방향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을 농어촌 고령층 중심에서 확장하여 다양한 세대 및 유형의 농어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정책군 사업은 농어촌 지역 여건 및 환경에 맞도록 계속해서 사업 방식 개선과 특화 프로그램 개발 노력이 필요함.

-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정책군 사업은 불리한 교통 접근성 등과 같은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좀 더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지금까지 사업 추진 방식에서 평생교육 또는 문화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단체, 농어촌 마을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찾아가는 교육 방식을 확대하여 해당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특히 농어촌 내에서도 상대적 여건이 더 열악한 면 단위 농촌 지역 사업 확대 노력이 필요함.
-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정책군 사업 중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나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은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지 않음. 또한 성과 지표에서도 농어촌 지역의 사업 성과를 별도로 도출하고 있지 않음.
-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구분없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농어촌 지역에 사업의 혜택 및 성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있음. 특히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과 같이 지자체 매칭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재정이 부족한 농어촌 지자체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 관련 사업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농어촌 지역을 별도 트랙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농어촌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 개발·운영, 농어촌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 노력(예, 농어촌 지역 대비 적절한 성평등 강사 육성 및 교육 수혜자 목표 설정) 등이 필요함.

○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정책군의 사업들은 담당 부처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처 및 지자체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와 농어촌 노인문해교육(문해교육 공동체 지원) 사업은 유사한 사업이지만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더욱이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 담당 부처도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음.
- 농어촌 지역 주민의 문해교육 수요에 비해 현재 지원하는 예산 및 프로그램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두 사업을 함께 연계하고, 사업 예산 역시 연계되어 추진된다면 농어촌 지역 교육 수요를 더욱 충족할 수 있을 것임.
- 구체적으로 농어촌 노인문해교육(문해교육공동체지원)은 농촌희망재단 외 관련 부처, 특히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을 하는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연계할 경우 사업 효과가 확대될 수 있을 것임.
- 농어촌 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활성화(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평생학습도시 사업에서 주민에게 가장 많이 제공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영역 중 하나가 문화예술교육임. 따라서 이 두 사업 역시 연계 방안을 구상한다면 농어촌 지역의 사업 성과 확산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농촌지역 양성평등 교육 확대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양성평등 교육과 관련이 많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등의 부처와 협력 시스템 구축 정도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음. 향후 관련 부처와의 협업 노력이 필요함.
-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정책군(또는 다른 정책군) 사업 중에서 관련성이 높은 사업들은 담당 부처 간의 연계·협력을 통해서 농어촌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교육 여건 마련, 삶의 질 향상 등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2.2.3. 농어촌 지역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

□ 정책군 개요

○ 본 정책군은 농어촌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및 소외 지역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주요 정책과제로 ① 농어촌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② 소외지역 문화·여가 지원 강화를 설정함.
- 이와 관련한 핵심과제는 ① 농어촌 체육공간 조성, ②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임.

〈표 2-22〉 농어촌 지역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 정책군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평가 결과

단위: 점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2020년	2021년	2022년
(2-3-1-2) 농어촌 체육공간 조성	93.0	86.7	86.0
(2-3-2-4)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91.7	95.3	94.7

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각 연도).

□ 평가 결과

〈정책 성과〉

○ 농어촌 지역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 정책군의 취지에 맞게 농어촌 체육공간 조성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체육시설 조성을 목표로 부족한 문화·여가 인프라를 확충하였고,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사업은 문화·향유 프로그램 확대지원을 목표로 문화·여가활동 수요에 대응함.

- 두 사업 모두 계획한 성과목표를 달성함. 그러나 2020~2023년 사업시행계획 점검·평가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체육공간 조성사업은 체육시설 확충으로 지역민의 체육체험 기회가 확대되었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실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 수요와 지역민의 체육시설 접근성 및 체육체험 확대 등 직접적으로 농어촌 주민의 문화·여가 향유 여건과 관련된 성과 달성도는 파악하기 어려움.

-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사업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참여율 및 만족도가 높으나 사업 구조적으로 농어촌 지역에서의 사업 시행 및 농어촌 지역 주민의 수혜 정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직접적인 성과 달성도를 측정할 수 없음.
- 두 사업 모두 농어촌 지역에서 부족한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사업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영향도를 파악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성과측정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문화의 날 만족도(%): 74.8(2020년) → 78.6(2021년) → 81.8(2022년)

* 문화의 날 참여율(%): 78.2(2020년) → 55.4(2021년) → 60.5(2022년)

〈표 2-23〉 농어촌 체육공간 조성 성과목표 달성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체육시설 지원개소 수	계획	100개소	105개소	110개소
	달성	100개소	105개소	110개소
	달성률	100.0%	100.0%	100.0%

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각 연도).

〈표 2-24〉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성과목표 달성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문화가 있는날 참여 프로그램 개수	계획	26,000개	19,400개	23,400개
	달성	18,488개	21,322개	23,402개
	달성률	71.1%	109.9%	100.0%

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각 연도).

○ 2020~2023년 농어업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농어촌 체육공간 조성사업 및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사업 모두 삶의 질 영향력에서 4.3~4.7 등급을 받아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 문화·여가생활은 몸과 마음의 휴식과 개인의 즐거움, 자기만족을 위한 것으로 나타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 그러나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2022)’에 의하면 문화·여가시설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5.2점, 5.0으로 여전히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령주민과 농림어업 종사자들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아울러 '2022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 결과 또한 문화·여가 부분은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43.9점)가 가장 낮게 나타남. 이는 2019년 조사 결과(48.9%)보다 낮으며, 국민 여가생활 만족도(56.6%) 보다 낮은 결과임²⁾.
-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는 여가시설 부족(5.5%)이 여가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2년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만족도 조사에서는 문화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등 문화시설에서도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

○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농어촌 체육공간 조성사업과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사업이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문화·여가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은 분명하나 전체 농어촌 지역의 문화·여가 활동과 삶의 질에 미친 영향 정도는 파악하기 어려움.

- 이에 농어촌 지역의 문화·여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보다는 각 사업별로 사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표 2-25〉 농어촌 체육공간 조성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연도	삶의 질 영향력(등급)	주요 평가의견
2020년	4.7	-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과 관련된 기관 등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한편 매년 사업 예산 증가하며 지원 건수 확대
2021년	4.3	- 생활체육공간을 전국에 균형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공공 체육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
2022년	4.3	- 전국 생활체육공간의 균형적 배치라는 목적에 부합

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각 연도).

2) 문화체육관광부(2022).

〈표 2-26〉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연도	삶의 질 영향력(등급)	주요 평가의견
2020년	4.7	- 문화시설 및 문화재, 체육시설과 연계한 사업추진, 행안부 등과 협업한 성과관리 우수 하나 농어촌 맞춤형 설계는 부족
2021년	4.3	- 주민 주도의 참여형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혜자 만족도가 높고, 사업추진과정 개선, 서비스 전달 방식 개선 등의 우수사례 창출
2022년	4.3	- 지역민 문화향유권 확대라는 사업의 목표와 내용이 적합하게 설정

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각 연도).

○ 농어촌 체육공간 조성사업 및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사업 모두 현재 사업의 공급 규모를 측정하는 정량적 지표 이외에 농어촌 주민의 문화·여가 서비스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성과관리 시스템으로 개선이 요구됨.

- 예를 들어 농어촌 체육공간 조성사업은 정기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체육시설 접근성 개선 및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체육시설의 양적 확대의 실질적 개선 정도와 체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성과로 측정함.
- 농어촌 지역의 체육시설 접근성은 GIS 공간분석을 활용하여 개선 정도를 측정하고, 만족도 조사는 매년 조사하고 있는 ‘국민생활체육조사’ 등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생활 체육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
-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사업은 사업결과 분석 시 사업시행 지역을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사업비중을 도출하고, 매년 평가·조사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 성과분석’ 및 ‘문화가 있는 날 인지도 조사’에서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으로 구분하여 농어촌 지역에서의 사업효과를 측정하도록 함.

* 2019년 공공체육관(구기체육관, 투기체육관, 생활체육관) 1,416개소와 수영장(1,159개소)의 거리를 측정한 결과 평균거리는 도시지역(시·구)는 체육관 2.54km, 수영장 2.92km인 반면 비도시 지역(군)은 체육관 5.76km, 수영장 11.45km로 나타나 농어촌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2배 이상 먼 것으로 나타남³⁾.

3) 노승철·김미옥(2021).

〈정책 제언〉

○ 농어촌 체육공간 조성 및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사업으로 구성된 농어촌 지역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 정책군은 농어촌 전반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도·농간 격차 해소에서 지역 정책 대상별 수요에 맞춤형 대응하고자 하는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및 방향에 부합함.

-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은 전국에 분포되어있는 문화시설 및 문화단체 등을 통해 2020~2023년 기간 1,000여 개의 단체에 60,000여 개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획 확대 및 지역문화의 다양성 제고,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지역문화의 균형적 발전, 문화적 삶의 질 제고 등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 2020~2022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의하면, 3년 동안 생활체육 참여율(주1회, 30분 이상 규칙적 체육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체육시설의 이용 이유로 ‘거리가 가까워서’, ‘이용료가 저렴해서’ 등이 2021년 대비 2022년 5~10% 이상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체육시설 접근성 및 체육서비스가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음.

○ 다만,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사업은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의 일부로 추진되고 있으며,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은 다양한 시행주체에 의해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구조 및 체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고, 이 때문에 본 사업의 직접적인 성과 및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움.

- 실제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사업성과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 인지도 조사’를 기반으로 제시하고 있어 전체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에 대한 조사로 본 사업의 직접적인 사업성과로 보기 어려움.
- 무엇보다 현재까지 본 사업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문화시설이 참여한 문화의 날 기획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는 별도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화의 날 기획사업과 본 사업의 효과를 분리하여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⁴⁾.

4) 지역문화진흥원(2023).

- 직접적인 사업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성과 분석 시 본 사업을 분리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구분하여 농어촌 지역에서 문화·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아울러 문화의 날 기획사업 전체를 검토하여 일부 광역자치단체 및 광역문화재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 대부분을 삶의 질 기본계획의 핵심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문화의 날 기획 프로그램은 농어촌 지역에서 부족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및 자립성이 약한 문화단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농어촌 지역민의 문화·여가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사업이기 때문임.

〈표 2-27〉 2022년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 전달체계 및 운영방식

구분	사업명	예산(억)	전달체계	공모 및 운영방식	기획자율성	비고
지역 문화진흥원	청춘마이크	72.5	문체부-지역문화진흥원 -주관단체(권역형/기획형)-청년예술가	주단단체: 전국공모 청년예술가: 19개 단체 공개 오디션	권역형: 권역제한 기획형: 전국 예술가: 34세이하	주관단체 3년 일몰
	실버마이크	14.5	문체부-지역문화진흥원 -주관단체(광역)-실버예술가	주단단체: 전국공모 실버예술가: 5개광역문화재단 공개 오디션	광역제한 예술가: 60세 이상	-
	지역문화콘텐츠허성화	26	문체부-지역문화진흥원 -지역문화단체	전국공모	자율기획	5년 지원
	생활속 문화활동지원	15	문체부-지역문화진흥원 -지역문화단체	전국공모	수혜자: 아동/근로자	수혜자 공간 방문가능형
지자체	지역특화 프로그램	18	문체부-지자체(광역-기초)-문화재단, 문화원, 문화의 집, 지역문화단체	문체부: 광역 및 기초지자체대상 공모 기초: 보조금 재교부(문화재단 등)	지역제한 (기초지자체)	지방비 매칭 50%이상
문화 기반 시설	참여문화 기반시설	17	문체부-한문연-(광역)-문예회관(기초, 기초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등)	한문연: 전국문예회관 회원사 대상 공모 (일부 광역지자체 거쳐 기초문예회관 재교부)	공간제한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박물관, 미술관, 작은도서관, 도서관)	문예회관 3년 일몰
		6.5	문체부-문화시설협회(자방문화원, 박물관, 미술관)-협회별 문화시설	문화시설 협회 회원대상 문화시설 공모		
		5	문체부-문화시설협회/기관(어린이작은도서관 협회,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한국문화의집협회)-주관사	문체부: 보조사업자 공모 (도서관/작은도서관) 문화의집: 참여문화의집 섭외. 보조금 직접 집행 작은도서관/도서관-광역 사 선정(전문가 매칭)		
계	174.5					

주 1) 음영표시는 2022년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사업으로 추진된 내용임.

2) 한문연은 한국문예회관연합회를 말함.

자료: 지역문화진흥원(2023) 연구 재정리.

○ ‘농어촌 체육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국가 전반적으로 체육서비스 개선이 이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읍·면 이하 지역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생활체육 참여율 및 체육시설 접근성 등은 전체 평균 이하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매년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농어촌 체육공간 조성사업에 앞서 그 원인은 무엇인지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인프라 조성 위치 및 서비스 전반에 대상별·지역별로 수요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비록 2023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지만, 부처 차원에서 농어촌 체육공간 조성사업이 본 목적에 부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방향, 추진 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생활체육 참여율 평균(%): (2020) 60.1 → (2021) 60.8 → (2022년) 61.2

* 읍·면 이하 생활체육 참여율(%): (2020) 54.9 → (2021) 61.3 → (2022년) 58.0

* 공공체육시설 이용률 평균(%): (2020) 20.6 → (2021) 22.1 → (2022년) 22.7

* 읍·면 이하 공공체육시설 이용률(%): (2020) 17.4 → (2021) 22.4 → (2022년) 24.3

* 체육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이유 평균(%):

거리상 가까워서 (2020) 49.0 → (2021) 39.1 → (2022) 49.4,

시설이용료가 무료 또는 저렴해서 (2020) 25.6 → (2021) 24.6 → (2022년) 29.2

* 읍·면 이하 체육시설 자주 이용하는 이유(%):

거리상 가까워서 (2020) 51.7 → (2021) 53.4 → (2022) 36.1,

시설이용료가 무료 또는 저렴해서 (2020) 25.7 → (2021) 26.3 → (2022) 35.0

○ 농어촌 지역 체육공간 조성사업이 지방이양됨으로써 지역수요에 대응하여 체육시설을 자율적으로 확충해나갈 것으로 예상되기에 부처 차원에서는 이렇게 조성된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전문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누리카드’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스포츠클럽 육성’ 등 사업을 삶의 질 기본계획의 농어촌 지역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 정책군의 핵심과제로 제안함.

- 특히 2023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삶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거점으로서 스포츠클럽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스포츠클럽을 통한 생활체육 참여 높이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있어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 스포츠 강좌이용권(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 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하고 싶은 운동을 마음껏 배울 수 있도록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의 운동 프로그램 수강료(월 9만 5천 원)를 지원하는 사업
-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공공체육시설, 복지시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국공립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배치하여 생활체육을 지도하도록 지원
- * 스포츠클럽 육성(대한체육회): 지역 체육시설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우수선수 양성 및 체육인 일자리 창출, 종목별 활성화 등 체육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공공 스포츠클럽을 지원하는 사업

2.2.4.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

□ 정책군 개요

- 본 정책군은 농어촌 문화 공동체 활성화 및 향토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관계부처 합동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2020).
- 주요 정책과제로 ① 농어촌 문화 공동체 활성화, ② 향토 문화자원 활용 생활문화 육성을 설정함.
- 이와 관련한 핵심과제는 ①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②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③ 농경문화자원 활용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임.

〈표 2-28〉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 정책군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평가 결과

단위: 점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2020년	2021년	2022년
(2-4-1-1)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96.7	94.7	98.0
(2-4-1-2)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96.3	97.3	96.7
(2-4-2-2) 농경문화자원 활용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98.3	96.0	95.3

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각 연도).

□ 평가 결과

<정책 성과>

- 각 사업의 성과 목표가 산출(output)지표에 불과하나 과제별로 제시된 성과 목표 대부분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유일하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은 2021년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목표 만족도의 97.4%를 달성함.

<표 2-29>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 정책군 과제별 성과지표와 달성도(2020~2022년)

성과지표	성과지표/측정산식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만족도/평균만족도= {Σ(기획만족도) + Σ(진행/운영만족도) + Σ(성과)}/3	계획	85.1	85.8	85.6
		달성	93	83.6	87.3
		달성률(%)	109	97.4	102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참여 동호회 수/ Σ(참여 동호회 수)	계획(개)	1,720	2,800	1,500
		달성(개)	1,810	2,821	2,674
		달성률(%)	105.2	100.8	178
농경문화자원 활용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개발 건수/ Σ(농촌자원 상품+프로그램 개발 건수) / 시범사업 개소	계획	3.1	3.4	4
		달성	3.2	3.5	4.8
		달성률(%)	103	102.9	120

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각 연도).

- 성과지표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자체 성과분석 결과, 본 과제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음. 생활문화 활동은 개인의 문화적 감수성 증진을 넘어 정신적·심리적 치유와 사회적 관계망 확충 등 사회적 효과를 창출함. 일부 과제에서 이러한 사회적 효과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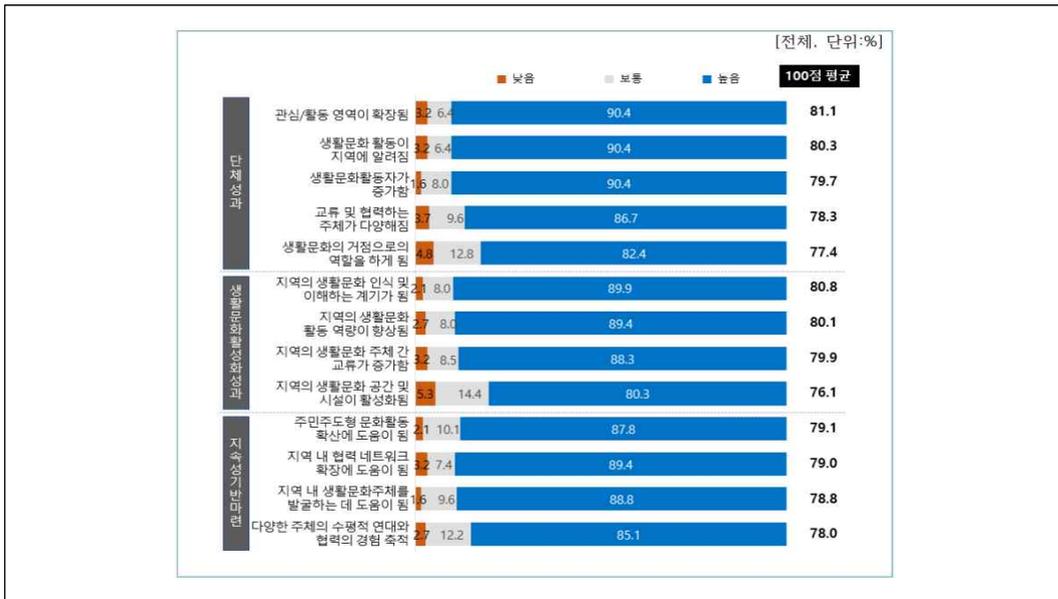
- 문체부의 성과분석 연구가 도시와 농어촌을 구분하여 조사하지는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사회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표 2-30>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과제 수행에 따른 삶의 질 관련 성과

성과지표	사회적 효과 측면의 성과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 2022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사업 효과성 조사 '개인 삶의 질 변화' - (사전) 52점, (사후) 63.2점 → 사업 이후 8.1점 증가
	○ 2022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사업 효과성 '일상생활에서 일주일동안 대화를 나누는 사람' - (사전) 16명, (사후) 23명 → 1인당 평균 7명 증가
	○ 2022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사업 효과성 조사 '스트레스 점수' - (사전) 48점, (사후) 43점 → 5점 하락
	○ 2022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사업 효과성 조사 '행복도' - (사전) 75점, (사후) 80점 → 5점 상승

자료: 지역문화진흥원(2022).

〈그림 2-1〉 2022 생활문화 지원사업 추진 성과



자료: 지역문화진흥원(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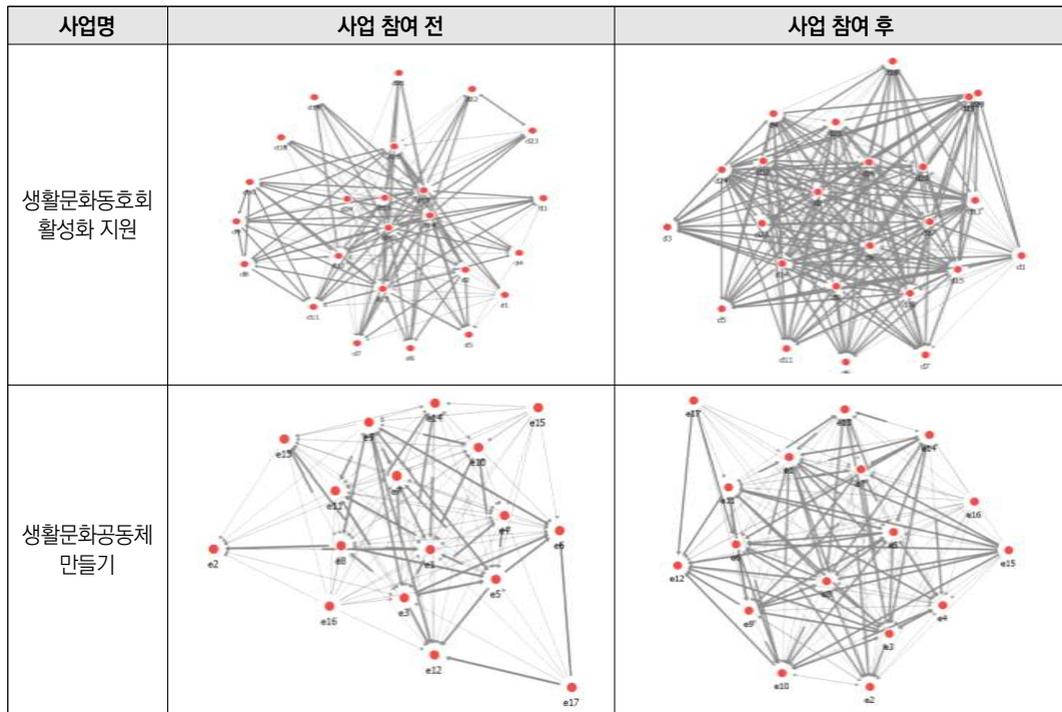
〈그림 2-2〉 2022 생활문화사업 프로그램 참여 성과



자료: 지역문화진흥원(2022).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회연결망 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을 한 결과, 연결망이 보다 촘촘해졌고, 연결 강도도 강해졌음.

〈그림 2-3〉 생활문화사업 참여자의 사업참여 전후 연결망 구조 변화



자료: 지역문화진흥원(2022).

- 2022년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 참여 후에 생활문화활동에 참여하는 월평균 횟수가 각각 102.9%, 175.2%가 증가하였음.
 - 삶의 자신감과 활력 증가(100점 만점)는 각각 85.24점, 83.62점으로 나타났고, 이웃에 대한 신뢰(100점 만점)는 85.24점, 83.62점으로 나타났음. 또한 연결망의 평균 거리가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0.96,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은 0.80으로 나타나, 생활문화사업이 지역주민의 사회적 관계 형성 등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남.

-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의 경우, 농어촌 주민의 문화여가와 관련한 직접적인 지표가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농어촌다움이라는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주요 목표와 관련하여 농경문화자원 발굴 및 체험상품 개발 등의 성과가 두드러짐.
 - 3년간(2020~2022) 농경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및 상품 122건이 개발되었고, 프

로그램 운영으로 마을소득이 창출되어 농어촌 주민의 경제적 삶의 질에 효과가 창출됨. 다만, 본 정책군은 주민의 문화·여가 활동 증진이 목표인데, 체험프로그램 참여자 또는 이들이 지출한 비용 외 지역주민의 문화·여가 활동 증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성과는 크지 않아 보임.

〈표 2-31〉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의 연차별 주요 성과 내용

연도	주요 성과	성과 창출 정도
2020년	진로체험을 위한 교육 콘텐츠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39건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79회 / 2,295명(12개 농장)
	진로체험 프로그램 교재 및 교구	교재 80종, 교구 52종 등 132종
2021년	농경문화자원 활용 상품개발	35건
	마을 수익사업 매출액	297,063천 원(개소당 59,412천 원)
2022년	농경문화자원 활용 상품개발	48건

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각 연도).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본 정책군의 성과는 농어촌 주민 문화여가 활동의 정량적 증가 또는 만족도이나, 생활문화 현장에서 추구하는 활동의 성과는 단순한 활동 횟수를 넘어 사회적 효과(개인적 치유, 사회적 관계망) 창출까지 고려함. 결과적으로 정책군의 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문화활동 횟수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개인의 치유와 관계망을 확산하여 사회적 자본 축적까지 다양한 성과를 도출함.

○ 다만, 생활문화 활동의 사회적 효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 도시와 농어촌을 구분하지 않아 농어촌만의 정확한 사업 결과를 분석할 수 없으며, 도시와 농어촌의 관계망, 구체적으로 연결 강도 및 거리가 다르지만 이를 구분하지 않아 농어촌 특성에 맞는 성과와 한계, 과제를 도출하지 못함.

〈정책 제언〉

○ 첫째, 본 정책군의 목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과제가 포함되었고,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대변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내용에 그침. 또한 농어촌 지역에 특화되고 농어촌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직접적인 사업이 미흡하였고, 포함된 사업의 경우 도시와 농어촌을 구분하지 않아 실제 사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움.

-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 수립 시, 농어촌 주민의 문화·여가 활동을 직접적으로 활성화하는 과제가 포함되어야 함.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포함된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은 문화·여가 활동 증진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이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더 포함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농어촌다움과 연계한 문화·여가활동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인문 진흥 사업, 농어촌 주민이 농어촌다움을 향유하면서 여가를 증진하는 이른바 농어촌 주민 여가(문화·여행 등) 복지 사업이 추가되어야 함.
-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도시와 농어촌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농어촌 선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설정하고, 문화격차 해소가 가장 중요한 문화정책의 목표이므로 사업 선정 과정에서 농어촌 사업을 우대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 둘째, 문화정책에서 주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는 방향은 개인에서 공동체로 전환되었고, 문화 활동을 통해 얻으려는 삶의 질의 내용은 개인의 문화적 감수성에서 사회적 효과, 구체적으로 정신적·심리적 치유, 사회적 자본 축적을 넘어 공동체성 회복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까지 확대됨.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는 문화·여가 활동의 성과를 문화 활동의 횟수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문화정책 전반적인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음.

-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 수립 시, 단순한 문화활동 증진이 아니라 문화활동을 통한 사회적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목표가 설정되고, 관련 과제가 더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사업이 없을 경우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목적 및 성과지표를 사회적 효과에 관련된 내용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생활문화 활동의 성과지표를 만족도나 지원한 동호회 수 등이 아니라 사업에 참여한 주민의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밀도, 거리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거나 사업참여에 따른 개인적 성과(정신적·심리적 치유, 문화활동 참여의향-문화적 감수성 증진, 공동체성 등) 지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함.

* 문체부(지역문화진흥원)가 매년 조사하는 국민생활문화활동조사 자료 활용

○ 셋째,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사업으로 생활문화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안함.

〈표 2-32〉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 포함 사업(안)

구분	제5차 기본계획 포함 사업	사업의 주요 내용
개별 주민의 문화활동 증진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 지원 (모두의 생활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문화 확산 지원: 지역별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추진 생활문화 교류 지원: 주관기관, 협력단체 간 상호 교류 지원 생활문화 성과 관리: 지역 내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성과 관리 및 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 추진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지원 (주말엔 생활문화센터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지원: 전국 지역주관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지원 교육지원: 생활문화센터 운영자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생활문화센터 운영자 간 상호 교류 지원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권 내 공공 거점공간을 활용한 생활문화공동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생활권 단위에서의 생활문화공동체 활동 증진 및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생활문화 파트너십 구축 지원
	대국민 일상 속 생활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문화 온라인 플랫폼 운영: 대국민 접근성 확대를 통한 생활문화 참여 확산 생활문화 활동 사례 확산: 기초 단위 생활문화 활성화, 공동체 생활문화 확산, 생활문화 우수 활동 사례 확산 생활문화 캠페인: 생활문화 활동 인지 및 정책 브랜드 확산
문화활동 증진의 종합 사업	지역문화활력촉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환경취약지역으로 선정된 69개 농어촌 지역을 대상, 문화도시형 지역문화 진흥 및 주민 문화활동 증진 사업 농어촌 등 문화접근성이 낮고, 인구감소로 활력이 저하된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문화인력 양성,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연차별로 지원하는 사업

자료: 저자 작성.

3. 정주생활기반 전략

3.1. 정주생활기반 전략 전체 평가 결과

3.1.1. 정책 목표 달성도

□ 정책 목표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목표는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 기반 구축임.

-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정책군으로 ①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확충, ②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③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④ 농어촌 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보전을 설정함.

〈표 2-33〉 정주생활기반 전략 정책과제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확충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교통모델 고도화 다양화 • 농어촌 지역 교통안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 농어촌 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 농어촌 지역 빈집 정비 및 활용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적 지역개발을 통한 정주기반 내실화 • 농어촌 지역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 다양한 계층 대상 농어촌 임대주택 조성 • ICT 기술을 활용한 정주기반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폐기물 수거·처리 개선 • 농어촌 지역 미세먼지 관리 강화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환경자원 활용 •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자료: 관계부처 합동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2020).

□ 정책 목표 달성도

○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성과 목표는 대부분 하수도 보급률, 상수도 보급률 같이 인프라 개선 측면의 사업과 연관되어 있어 목표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 빈집(폐가) 정비, 슬레이트주택 철거 등 농어촌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리시설 개보수율,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 개선을 같은 농업환경 개선 사업들도 소폭이나마 성과목표가 상승하고 있음.

- 다만, 고령자복지주택 대상지 선정 수,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는 2021년 대비 2022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2-34〉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내 정주생활기반 전략 성과 목표

전략	성과지표	성과목표(실적)		
		2020년	2021년	2022년
정주생활기반	공공형버스(도시형 교통모델) 도입 지자체 수(개수)	66	59	62
	농어촌(읍·면) 하수도 보급률(%)	72.3	73.8	74.5
	빈집(폐가) 정비(누계, 천동)	168,274	176,147	183,698
	고령자복지주택 대상지 선정 수(개소)	10	15	10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지구 지정(누계, 개소)	108	122	135
	농어촌(읍·면) 상수도 보급률(%)	77.0	80.6	81.6
	농촌 주택개량 용자지원(누계, 천동)	4,397	7,593	10,117
	슬레이트주택 철거(누계, 천동)	7.8	14.9	34.8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개소)	15	16	18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누계, 개소)	815	895	840
	깨끗한축산농장지정(누계, 개소)	3,629	5,242	5,374
	목재펠릿 생산량(천톤/년)	331	545	732
	수리시설 개보수율(누계, %)	83.6	84.8	85.7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 개선율(누계, %)	64.2	65.6	66.5
	마을별 방범용 CCTV설치(%)	64.9	71.3	75.9
	고령자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명)	16.5	15.1	13.9
	농어촌 정주기반 만족도(10점 척도)	5.9	6.4	6.2

자료: 농식품부 내부자료.

3.1.2. 삶의 질 개선 정도

○ 2022년도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3년간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에서 정주생활기반 전략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음.

- 농어촌 지역의 정주만족도는 2020년 5.9점에서 2022년 6.2점으로 0.3점 증가하였으며, 같은기간 도시 지역의 정주만족도가 0.2점 증가하여 격차는 일부 줄어들었음.

- 2022년 기준으로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도·농간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큰 세부항목은 대중교통(1.9점), 생활서비스(1.5점), 다양한 외식 장소(1.5점) 등으로 나타남.
- 적은 환경오염, 정돈된 환경·경관 같은 세부 항목에서는 도·농간 차이가 크지 않았음.

〈표 2-35〉 정주생활기반 전략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11점 척도)

전략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2020년	2021년	2022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정주 생활 기반	대중교통	7.1	7.3	7.2	5.2	5.7	5.3
	통신시설	7.6	7.7	7.8	6.1	6.7	6.9
	생활 인프라	7.3	7.7	7.5	5.9	6.4	6.7
	난방 비용	-	-	6.4	-	-	5.5
	생활 서비스	7.3	7.6	7.3	5.6	6.2	5.8
	식자재 구입	-	-	7.6	-	-	6.3
	다양한 외식 장소	-	-	7.3	-	-	5.8
	주택 상태	6.7	7.0	7.0	5.9	6.4	6.2
	교통안전	6.5	6.8	6.7	6.0	6.4	6.2
	자연재해 안전	7.0	7.3	7.3	6.2	6.7	6.7
	응급차량 접근성	-	7.1	-	-	6.6	-
	범죄 안전	6.7	6.9	7.0	6.4	6.7	6.7
	적은 환경오염	6.6	6.8	6.9	6.1	6.4	6.4
	정돈된 환경·경관	6.6	6.9	6.9	6.2	6.6	6.5
	에너지 비용 절감	6.1	6.4	-	5.4	6.1	-
(평균)	6.9	7.1	7.1	5.9	6.4	6.2	

자료: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각 연도).

○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 모든 항목의 이행실태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음.

- 주택, 난방, 방범설비 항목의 이행실태는 2022년에 목표치를 기달성하였으며, 대부분의 항목이 목표치에 근사하게 달성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정주생활기반 전략과 관련된 대부분 항목의 목표치 재조정이나 핵심항목 제외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2-36〉 정주생활기반 전략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 이행실태 변화

부문	서비스 항목	세부시설(기초 인프라 시설) 및 측정 기준	2020년	2021년	2022년	목표 ('20~'24)
정주 생활 기반	가. 주택	주민 누구나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적합한 주택에서 거주한다.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됨)가 사용된 주택 지붕의 철거·개량 비율을 23% 이상으로 한다.	7.8%	30.7%	34.8%	23%
	나. 상수도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85% 이상으로 한다.	77.0%	80.6%	81.6%	85%
	다. 하수도	군 지역 하수도 보급률을 76% 이상으로 한다.	73.3%	74.6%	75.6%	76%
	라. 난방	읍 지역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68% 이상으로 한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엘피지(LPG) 소형저장탱크를 활용하여 가스 보급을 확대한다.	68.1%	69.4%	70.0%	68%
	마. 대중교통	행정리 내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수단(이하 “대중교통수단”이라 한다)을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도입한다. 도서 지역의 경우 모든 본섬에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 1일 왕복 1회 이상 운항된다.	87.1%	87.3%	89.1%	100%
	바. 생활폐기물	행정리 내에서 영농·생활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할 수 있다.	66.4%	75.2%	76.9%	(영농)100%
			16.7%	18.8%	20.6%	(생활)100%
	사. 방법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의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율을 60% 이상으로 한다.	64.9%	71.3%	75.9%	60%
	아. 경찰순찰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장소·시간에 대하여 단력적인 방식의 순찰을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62.9%	90.8%	95.4%	100%
	자. 소방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지역별 목표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72.1%	65.0%	69.1%	70%

자료: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각 연도).

○ 이를 종합하면 정주생활기반 전략은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에 따른 양적인 측면의 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 주민들의 정책 체감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일상적인 생활서비스 이용과 대중교통 이용 측면에 있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3.2. 정책군별 평가 결과

3.2.1.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개선

□ 정책군 개요

- 본 정책군은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통해 각종 사회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는 주요 정책과제로 ① 농어촌 교통모델 고도화·다양화, ② 농어촌 지역 교통안전 확보를 설정함.
 - 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교통서비스를 확충하고, 교통약자를 고려한 교통안전 편의성을 높이는 정책 사업들을 추진하였음.
 - 이와 관련한 핵심과제는 ① 농어촌 교통모델 다변화, ② 위험도로 구조개선임.

〈표 2-37〉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개선 정책군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평가 결과

단위: 점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2020년	2021년	2022년
(3-1-1-1) 농촌형 교통모델 다변화	96.3	95.3	93.3
(3-1-2-1) 위험도로 구조개선	90.3	84.7	88.7

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각 연도).

□ 평가 결과

〈정책 성과〉

-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확충’ 정책군 핵심과제의 투융자는 2021년 급격한 감소가 있었지만 다시 증가함.
 - 농촌형 교통모델 다변화 과제의 예산액은 2020년 514억 원에서 2021년 410억 원으로 20%이상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22년 다소 증가하였음.
 - 위험도로 구조개선 과제의 예산 또한 2020년 732억 원에서 2021년 637억 원으로

약 13% 감소하였으나 2022년 기존 예산 이상으로 증액됨.

- 예산 집행은 두 세부과제 모두 2021년 이후 전액 집행됨.

〈표 2-38〉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개선 정책군 핵심과제 투용자 실적

구분	예산액(억 원)			집행액(억 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0년	2021년	2022년
(3-1-1-1) 농촌형 교통모델 다변화	514	410	419	489	410	419
(3-1-2-1) 위험도로 구조개선	732	637	735	732	637	735

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각 연도).

○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확충’ 정책군 핵심과제에 대한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정책 수행도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농촌형 교통모델 다변화 과제의 정책수행도는 2020년 96.3점에서 2022년 93.3점으로 지속해서 하락하였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과제의 정책수행도는 2020년 90.3점에서 2021년 84.7점으로 하락하였으나 2022년 88.7점으로 회복함.
- 삶의 질 영향력 측면에서 농촌형 교통모델 다변화 과제는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5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의 삶의 질 영향력은 2022년 기존 4.0등급에서 3.7등급으로 하락함.

〈표 2-39〉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개선 정책군 핵심과제 평가 결과

단위: 점, 등급

구분	정책수행도				삶의 질 영향력			
	2020년	2021년	2022년	3개년 평균	2020년	2021년	2022년	3개년 평균
(3-1-1-1) 농촌형 교통모델 다변화	96.3	95.3	93.3	95.0	4.7	5.0	5.0	4.9
(3-1-2-1) 위험도로 구조개선	90.3	84.7	88.7	87.9	4.0	4.0	3.7	3.9

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각 연도).

○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수준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등 농어촌 지역의 기존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준도 급격한 저하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 중임.

-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확충’ 정책군의 정책효과를 기존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훼손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확충’ 정책군 추진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과 교통 안전에 대한 만족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됨.

- 농촌형 교통모델 다변화 과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촌지역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는 2020년 5.2점에서 2021년 5.7점으로 상승하였으나 2022년 다시 5.3점으로 하락함.
- 2020년과 2022년 비교하면 농촌의 만족도 수준은 다소 상승하고 도시와의 만족도 차이도 같은 수준으로 유지됨.
- 위험도로 구조개선 과제와 관련된 교통안전에 대한 만족도는 2020년 6.0점에서 2021년 6.4점으로 상승하였으나 2022년 다시 6.2점으로 하락함.
- 대중교통 만족도와 교통안전 만족도의 변화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표 2-40〉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개선 정책군 핵심과제 관련 분야 만족도

(11점 척도)

과제명	정주 만족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대중교통 만족도	농촌	5.2	5.7	5.3
	도시	7.1	7.3	7.2
교통안전 만족도	농촌	6.0	6.4	6.2
	도시	6.5	6.8	6.7

자료: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각 연도).

〈정책 제언〉

-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확충’ 정책군은 안정적으로 추진 중이나 관련 사업추진 초기와 비교하여 만족도와 서비스 수준 개선 효과는 미미함.
 -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기간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사업이 확장되었으나 현재는 안정기에 돌입하였음.

○ 가시적 정책 성과 도출을 위해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확충’ 정책군 내 주요 사업의 효율성 개선과 새로운 사업 추진 방식의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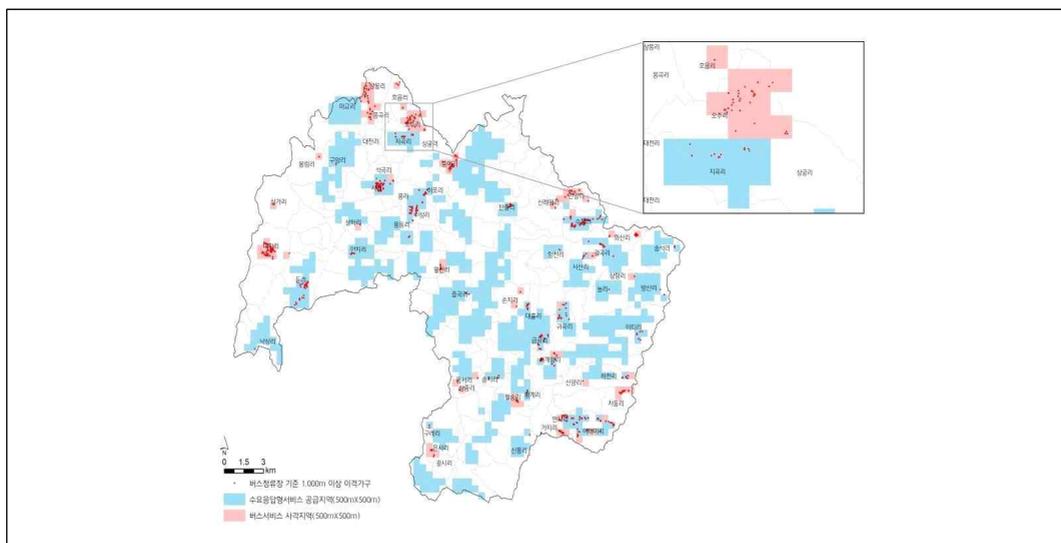
- 세부 정책군 ‘농어촌 교통모델 고도화’에 포함된 세부과제들의 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사업관리모델 구축, 세부과제들의 통합적 운영 모델 개발 등을 검토하여야 함.
- 농촌공간정책 틀 안에서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제안 1) 농어촌 영향평가에서 제안한 지리정보시스템 기반 사업관리모델을 구축하여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체계에 반영함.

- 세부 정책군 ‘농어촌 교통모델 고도화’에 포함된 세부과제들의 추진 현황을 공간 정보로 구축하여 서비스 제공 지역과 사각지대를 도출할 수 있음.
- 대중교통 소외지역 거주 주민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외지역 해소율^{*}’을 세부과제들의 성과지표로 활용하도록 추진하여야 함.

* 측정산식: 기존 소외지역 중 도시형·농촌형·어촌형 사업 수혜지역 / 소외지역 × 100

〈그림 2-4〉 GIS를 활용한 대중교통 사각지역 해소율 분석 예시



자료: 홍성효·김진희·박상명(2021).

○ (정책제안 2)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확충’ 정책군 내 세부사업의 통합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교통수단(버스·택시·선박·기차)과 관련된 세부 과제를 지역 특성에 맞추어 통합 추진하면 농어촌 주민의 실질적 이동성 향상이 가능함.
- 교통수단과 관련된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과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전남 신안군의 경우 섬에 사는 주민이 육지에 다녀올 때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류장-1004 택시-선착장-여객선-선착장-1004 택시-목적지’ 코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추진 중

○ (정책제안 3) 농촌공간계획과 연계한 교통서비스 개선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3월 추진 시행 예정인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은 농촌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농촌공간 기능재생 지원체계를 구축을 통한 농촌의 난개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표가 있음.
- 농촌 주민의 이동량과 패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간구조-교통의 통합적 계획 및 사업 추진이 필요함.
-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의 단독 추진보다 농촌공간계획과 연계한 농촌협약의 한 사업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제안 4) 자율주행 모빌리티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모델 과제를 발굴하여야 함.

-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은 인건비와 유류비가 비용의 80% 이상을 차지하여 자율주행기술(전기차 기반)을 활용한다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함.
* 경상남도 하동군의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농촌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아 내년부터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할 예정

3.2.2.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 정책군 개요

- 본 정책군은 농어촌 지역의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상·하수도 및 난방 등 주민 체감형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해당 정책군의 주요 정책과제로 ①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② 농어촌 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③ 농어촌 지역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설정함.
- 이와 관련한 핵심과제는 ① 농어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② 농어촌 지역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③ 농촌 빈집 정비 및 활용임.

〈표 2-41〉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정책군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평가 결과

단위: 점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2020년	2021년	2022년
(3-2-2-1) 농어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 개선(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98.3	88.7	95.3
(3-2-2-4) 농어촌 지역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96.0	95.3	93.3
(3-2-3-1) 농촌 빈집 정비 및 활용	92.3	93.3	96.7

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각 연도).

□ 평가 결과

〈정책 성과〉

- 농어촌 지역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상하수도 난방 등 주민 체감형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 정책군의 취지에 맞게 세부사업을 추진함.
- ‘농어촌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세부과제는 농어촌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귀농·귀촌인이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농어촌지역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세부과제는 농어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통해 농어촌 복지 향상에 기여함.
- ‘농촌 빈집 정비 및 활용’ 세부과제는 제도를 통해 지자체와 주민의 행동을 촉진해 위생, 환경 부문의 정주환경 악화를 방지함.

- 정책군 평가에서 수행도와 삶의 질 영향도가 지난 3년 동안 낮아지는 추세임.
 - 2020년 정책군 평가에서 영향력이 4.7등급으로 가장 높았으며, 수행도는 92.4점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음. 수행도와 영향력이 높은 정책군으로 평가받음.
 - 2021년 정책군 평가에서 정책 수행도 89.1점, 삶의 질 영향력은 평균 3.8등급으로 평가 받음. 개선 필요 과제에 선정된 세부과제는 없었음. 2020년 대비 정책 수행도와 삶의 질 영향력 평가가 낮아짐.
 - 2022년 정책군 평가에서 정책 수행도는 88.8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고, 삶의 질 영향력은 3.9등급으로 타 전략 부문 대비 정책 성과가 다소 저조함. 3년 비교에서도 수행도는 계속 떨어지며 영향력도 낮아지는 추세임.
 - 농어촌 지역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개선 정책군의 평가가 저조하게 나타난 이유는 해당 정책군의 실행방식과 성과관리체계 때문으로 판단됨.

- 농어촌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과제는 3개년 동안 성과확산 유형 과제로 평가받음.
 -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과제는 대체로 예산 집행 수준이 적절하고, 계획 대비 성과목표를 충실히 달성하는 등 원활히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됨.
 - 2020년 성과확산유형 과제로 ‘농어촌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농어촌지역 LPG 소형저장 탱크 보급’ 정기적 관찰유형 과제로 ‘농촌 빈집 정비 및 활용’이 선정됨. ‘농촌 빈집 정비 및 활용’ 과제는 사후 관리 및 활용 방안이 미비하고 사업추진방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받음.
 - 2021년 성과확산 유형과제로 ‘농어촌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이, 지속유지 유형 과제로 ‘농어촌지역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과제가, 정기적 관찰 유형과제로 ‘농촌 빈집 정비 및 활용’이 선정됨. 빈집정비 및 활용 과제는 실행력을 담보할 제도 정비가 요구됨.
 - 2022년 정주생활기반 전략의 64개 과제 중에서 성과확산형 분류 과제는 8개로 ‘농어촌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농촌 빈집정비 및 활용’ 2개가 선정됨. 중점 개선 필요 과제 3개 중 ‘농어촌지역 하수도 설치’ 1개가 선정됨. 장기개선형 과제 17개 중

‘취약계층 주거여건개선’이, 정기적 관찰유형 과제 32개 중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농어촌지역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2개가 선정됨.

- ‘농어촌지역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나, 사업방식의 개선과 우수사례 도출, 정책효과 검증을 위한 수혜자 만족도 조사 관련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함.

○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은 정책수혜자의 만족도가 높음.

- 해당 정책군에는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농어촌지역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농촌 빈집 정비 및 활용’ 등과 같이 개별 주택 정비 및 난방 여건 개선, 마을 주거환경 정비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과제들이 포함되어 정책수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달성함.
- ‘농어촌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농촌 빈집 정비 및 활용’ 과제는 정책수혜자 측면에서 정책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삶의 질 영향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음.
- 특히 ‘농어촌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농촌 빈집 정비 활용’ 과제는 기초적인 주거환경 개선의 측면에서 정책수혜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 농어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과제는 3년 연속 긍정적 평가를 받음.

- 2022년 ‘농어촌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과제는 주민들의 기초적인 주거 환경과 관련된 사업은 정책수혜자의 측면에서 정책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정책효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정책 수행도에 있어 2020년 98.3점, 2021년 88.7점, 2022년 95.3점을 받았고, 삶의 질 영향력에 있어 핵심과제 평균 4.5등급보다 높은 4.7등급으로 평가됨.
- 본 과제는 2020년 769억 원에서 2021년 1,180억 원, 2022년 1,360억 원으로 현장 수요를 반영해 사업 규모가 확대되었고, 사업 대상지도 2021년 391개소에서 2022년 449개소로 늘어남.

- 마을 주민이 사업 주체로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83.2% (2022년)로 높게 나타남.
- 사업 과정에서 사전 주민 교육, 주민 주도의 사업추진이 이루어짐(교육 만족도 평균 87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권역별 순회 교육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있었음.

○ 농어촌지역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과제는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삶의 질 우수과제로 선정됨.

-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복지가 취약계층과 농촌 지역에 중요한 과제로 떠오름에 따라 농어촌 주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과제로 평가받음.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였으며, 계획한 실적을 초과 달성하였음.
- 2020년에는 정책 수행도 96.0점, 삶의 질 영향력 5.0등급을 받았으나 2021년에는 95.3점, 3.7등급, 2022년에는 각각 93.6점, 4.3의 등급을 받음. 정책 수행도는 매년 떨어지고 있고, 삶의 질 영향력도 2022년에 조금 상향되었으나 여전히 2020년보다 낮음.
- 2020년에는 농어촌 지역 에너지 복지를 위해 지속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평가받았고, 2021년에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시행함.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지원 효과 분석이 보완되어야 하는 과제로 지적됨.
- 2022년에는 사업방식의 개선과 함께 혁신 우수사례 도출의 보완 노력과 정책효과 검증을 위한 만족도 조사 및 연구용역 등이 요구된다는 평가를 받음. 정책 수행도와 삶의 질 영향력이 두드러진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 정기적 관찰형 과제로 분류됨.
- 유통구조를 단순화하여 용기공급 대비 20~30% 공급가격으로 LPG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소비처별 사용량에 맞춰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함.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시공을 지원함으로써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어촌 정주의 안전성을 향상시킴.

- 가스시설을 현대화하여 LPG 가스로 인한 사고 발생을 감소시켜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 및 미관을 개선함.

○ 농촌 빈집정비 및 활용은 2020년부터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구체적 성과를 이룸.

- ‘농촌 빈집정비 및 활용’ 과제는 지방 이양 사업으로서 중앙정부는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시행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여 농어촌 주민의 참여 기반을 마련함.
- 2020년에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빈집정비 이후 사후 관리 방안이 아직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2021년에는 지자체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됨.
- 2021년에는 특정 빈집신고제 도입과 관련 법령 정비가 이루어졌고, 빈집 및 유휴시설의 활용을 확대하고자 농촌공간정비사업과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의 시행지침을 개정함. 정책 개선에 필요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자체 업무담당자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사업의 추진성과를 제고하고자 노력함.
- 2022년에는 지자체의 인식을 제고하고 부처협업으로 빈집 정비실적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확산형 과제이자 삶의 질 우수과제로 평가 받음.

〈정책 제언〉

○ 정주여건 개선으로 삶터로서 농촌 마을을 유지해야 함.

- 도시 근교 농촌은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낮은 지가와 규제로 인해 난개발이 되고 있고 원격지 농촌은 유휴지와 빈집이 방치되고 있음. 입지 특성에 맞게 농어촌다움이 살아있고, 삶터·일터·쉼터로의 기능을 가진 농어촌 주거 여건 및 생활 인프라 개선정책이 필요함.
-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마을을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는 농촌공간계획이 선행되고 농촌 주거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과제가 시행되어야 함.
-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특화지구인 농촌마을보호지구가 지정되고, 삶의 질 정주기반구축 세부사업이 추진되어 사업의 효과를 배가시키도록 노력해야 함.

○ 농어촌다움이 증진하는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함.

- 빈집정비, 담장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의 사업으로 생활환경의 질은 높아지나 지역자원을 활용한 건축 재료, 전수되어 오던 축조기술, 지역성을 나타내는 건축 배치 등이 사라짐.
- 오래된 건축물과 담장이 철거되고, 농촌 마을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이 신축되면서 이전의 농촌 마을다운 풍경을 잃어감.
- 정주 여건을 개선하면서 건물의 배치, 재료, 구조 및 축조기술을 유지할 수 있는 건축 기술개발이 필요함.

○ 농어촌 정주 여건에 필요한 단위사업을 정비유형으로 재분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은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으로 주택, 하수도, 가스(난방), 빈집정비로 한정되어 있음. 이외에 상수도, 보행환경(고령자를 고려한 가드레일 포함), 안전시설(CCTV, 소화기 등), 재해 예방 시설(석축, 축대벽 등)의 시설도 필요함.
- 2022년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82.8%로, 여전히 상수도 배관망이 연결되지 않는 가구가 도시보다 많으며, 정화조가 없는 상태에서 생활하수가 마을 내 소하천으로 배출되는 등 열악한 생활환경을 가진 마을들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상수도 배관망 사업이 필요함.
- 경사지에 위치한 마을은 고령자를 위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행 보조기 이용이 용이한 경사로와 가드레일 등이 필요함. 화재 발생 시 좁은 도로로 소방차 진입이 되지 않는 취약지역도 여전히 존재하므로, 고령자를 위한 도로 개선사업이 필요함.
-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빈번함에 따라 축대 붕괴, 주택침수 등의 재해위험 요소가 농어촌 마을에 산재해 있어 재해 안전에 대비한 정주 환경 개선이 필요함.

○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의 수혜자 확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농어촌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과제는 노후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를 지원하며,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중요한 정책사업이지만 자부담이 있어 용

자나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만으로는 고령 농어촌 주민의 참여가 어려운 것이 실정임.

- 불량 주택 정비율이 62.6%(2020년), 56.1%(2021년), 53.8%(2022년)로 지속 하락 중이므로 최근 3년간 성과지표 달성이 지속해서 저조하게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과정이나 추진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전 지원이 필요함.

- 농촌 지역에는 지적 불부합지가 많아 축대, 담장, 도로 정비 등을 시행하기에 앞서 지적 재조사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 재조사 사업과 연계해야 함.
- 위험시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담장과 빈집 등이 위험도와 관계없이 철거되지 않도록 철거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행정리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현재 최소가구 30가구를 20가구로 변경하여 사업대상을 확대해야 함.
- 대부분 사업 신청 마을이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모든 세부사업을 조금씩 추진하고 있어 취약 특성에 맞춰 특정 부문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의 성과를 높여야 함.
- 도시 근교, 산골 마을, 평지형 농촌 마을의 특성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입지 유형별 우수사례를 제시하고, 마을별 취약등급을 제시하여 사업비를 등급별로 지원해야 함.

○ LPG 소형 저장 탱크의 지속적 지원으로 에너지 복지를 달성해야 함.

- 2021년 비수도권 도시가스 보급률은 75.9%로, 전국 대비 낮은 실정이므로 농어촌의 에너지 환경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사업을 지속 확대해야 함.
-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농어촌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소형 저장 탱크와 배관망 설치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며,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해야 함.
-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통해 농어촌의 도시가스 보급률의 증장기 목표를 상향 설정하고 연차별 목표를 설정해 세부과제 추진을 통한 목표 달성율을 판단해야 함.

○ 농어촌 빈집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농촌 빈집 수는 2020년 55,947호에서 2022년 66,024동으로 증가하였으며, 인구의 급감으로 그 수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는 증가하는 빈집 수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중장기적인 빈집 사업의 사업 물량을 결정해야 함.
- 소유주의 사망 후 복잡한 소유 관계, 노환으로 요양병원 거주 등 빈집 발생 원인이 복잡하고, 상속자의 은퇴 후 거처, 빈집철거 후 재건축의 어려움 등 방치요인도 다양하여 빈집조사를 위한 지역 단위 인력이 필요함. 빈집 유형 세분화(철거, 활용, 보존), 빈집활용에 대한 정보 제공, 빈집 및 재생주택 관리를 위한 민간 조직의 발굴과 육성이 연계되어야 함.
- 지자체가 수립하는 농촌공간기본계획을 통해 연차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함. 지자체가 조사한 빈집과 정비현황에 대한 지속적 DB 구축 및 정비 및 활용에 따른 삶의 질 증진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빈집을 철거할 대상으로 보지 말고 지역의 자산으로 인식하여 빈집의 역사와 스토리를 발굴하고, 각각의 요소를 활용할 방안으로 참여형 공간 정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한달살이, 위케이션,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한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철거할 경우 마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해야 함.
- 주택성능평가로 빈집이나 유휴시설의 리모델링을 유도하고, 주택구매용 대출금리 인하, 소득세 및 고정재산세 특례, 지진 등 피해 보상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해야 함.
- 행정안전부 ‘지방소멸 대응 기금 투자사업’,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청년 마을 사업’, ‘고향사랑기부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 ‘유휴시설 지역활성화사업’, ‘민관합동 빈집 재생 프로젝트’ 등과 연계하여 마을 공동시설, 숙박시설, 농어촌유학시설, 식음시설 등 지역주도의 빈집활용 사업을 모색해야 함.
- 농어촌 빈집 재생 관련 소득세 공제, 고정재산세 감액, 증여세 비과세조치, 등록면허세 특례조치, 부동산취득세 특례조치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3.2.3.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 정책군 개요

○ 해당 정책군은 첨단 기술 기반의 정주환경 고도화 및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제공을 통해 농어촌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는 주요 정책과제로 ① 통합적 지역개발을 통한 정주기반 내실화, ② 농어촌 지역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③ 다양한 계층 대상 농어촌 임대주택 조성, ④ ICT 기술을 활용한 정주기반 고도화를 설정함.
- 해당 정책군과 관련한 핵심과제는 ① 거점과 배후마을 간 상호기능 연계 강화, ② 산불 예방 방지 대책, ③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고령자복지주택), ④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임.

〈표 2-42〉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정책군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평가 결과

단위: 점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2020년	2021년	2022년
(3-3-1-1) 거점과 배후마을 간 상호기능 연계강화(농촌중심지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 조성)	93.3	90.0	90.7
(3-3-2-5) 산불 예방 방지 대책	97.0	94.7	93.3
(3-3-3-2)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고령자복지주택)	88.0	87.3	82.0
(3-3-3-3)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81.3	76.0	73.3
(3-3-4-1)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96.7	98.0	96.7

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각 연도).

□ 평가 결과

〈정책 성과〉

○ 핵심과제 중 달성률 100% 과제 1개, 초과 달성 과제 3개로 달성률이 높음.

- 달성률 100%는 ‘거점과 배후마을 간 상호 기능 연계 강화’ 과제이며, 달성률 초과 달성은 ‘산불 예방·방지 대책’,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고령자복지주택)’,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과제임.

-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과제는 달성률이 미흡함.
 - 정주생활기반 전략 부문의 과제 중에서 특히 농어촌 지역 교통, 주거 여건 등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이 우수하게 추진됨.
 - 스마트타운 조성 사업은 시·군·구 및 주민 수요를 반영하고, ICT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평가됨.
 -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농어촌 지역 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함.
 - ‘거점과 배후마을 간 상호기능 연계 강화’ 사업은 생활SOC 복합센터 내에 작은도서관·영화관, 마을목욕탕, 아이돌봄방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공간들을 조성하여 농산어촌 주민의 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향유 기회와 이용 편의성 증대에 기여함.
 -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이행되고 있으며, 사업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음.
 - 스마트타운 조성 사업은 신청 사업계획에 대한 광역시·도 간담회를 통해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고, 전문가 평가 과정을 거쳐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함.
 - 정책효과 검증을 위한 만족도 조사에서 매년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음.
 - 스마트빌리지 과제는 농어촌 주민 만족도가 높게 조사되었고, 매년 향상되고 있음(수혜자 만족도 2020년 82.8%, 2021년 83.2%, 2022년 89.3%).
 - 거점과 배후마을 간 상호 기능 연계 강화 사업도 만족도 매년 상승함.
 - ‘거점과 배후마을 간 상호 기능 연계 강화’ 사업은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음.
 - 기초인프라가 열악한 농촌지역에 복합적인 생활 SOC를 확충하고, 배후마을까지 해당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킴.
- * 생활SOC시설(누계, 개소): ('20) 693 → ('21) 797 → ('22) 900(100% 달성)

- 생활밀착형·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농식품부 자체 만족도 조사 결과도 전년 대비 상승하였음.
 - *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20) 83.7 → ('21) 83.9 → ('22) 89.4('22.12월 말)
- 문화·반찬 배달, 찾아가는 빨래방으로 어르신 빨래 지원 등 서비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였음.
- 생활SOC 복합센터 내에 돌봄방, 문화 프로그램실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복합화·집적화하여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였음.
 - * 하나의 건물 또는 단지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원스톱으로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 차량, 방문 프로그램 운영 등 지자체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배후마을 주민도 생활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

○ ‘산불 예방·방지 대책’ 과제의 성과는 다음과 같음.

- 산림청 관리과제 국민체감도 조사에서 산불예방·대응 체계 고도화는 24개 관리과제 중 종합 3위의 높은 체감도, 만족도를 보임.
 - * 체감도 61.5(상위 1위), 필요성 75.9(상위 3위)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강수량 감소, 강풍 등 산불 예방 여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16.8%의 매우 도전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였고, 매년 초과 상향 달성되고 있음 (117% →135%).

○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고령자복지주택)’ 핵심과제의 성과는 다음과 같음.

-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통한 복지를 향상시킴.
-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임대주택에 복도·욕실 등에 안전손잡이, 비상안전유도등 등을 설치하고, 복지관에 물리치료실, 식당, 운동시설, 문화강좌실, 옥상텃밭 등을 설치하고, 복지법인이 상주하며, 복지서비스를 상시 제공함.
- 매년 성과지표를 100% 달성하였고, 2021년의 경우 150% 초과 달성함.

○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사업의 성과는 미흡하였음.

- 주거여건이 낙후된 농어촌에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을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나 사업추진이 미흡한 과제로 평가됨.
- 특히 성과지표 달성률이 2020년 50%, 2021년 20%, 2022년 60%로 미흡하여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평가됨.

○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과제의 성과는 다음과 같음.

- 성과지표 달성률은 2020년 100%, 2021년 150%, 2022년 100%로, 모두 달성하였음.
- 담당공무원과 화상 연결이 가능한 행정민원 키오스크를 시골 마을에 설치하여 산간오지 고령층 주민의 편의를 향상시킴.
- 스마트 CCTV, 비콘 등 AI·IoT 기술을 활용한 농작물 절도 감지 시스템 구축으로 농어촌 안전을 강화함.
- 드론 스테이션을 활용한 무인 드론 방제시스템 구축으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킴.
- 개발된 서비스의 간편성, 업무용이성, 신속성, 유용성, 접근성, 신뢰성을 평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 점수가 89.3점으로 나타나, 수혜자인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편인 것으로 조사됨.

* 수혜자 만족도(%): ('20) 82.8 → ('21) 83.2 → ('22) 89.3

- 군청 공무원이 직접 등장하는 비대면 실시간 화상 민원상담,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모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 행정민원서비스 키오스크를 마을에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산간오지 주민, 원거리 이동이 어려운 고령층 대상으로 행정민원서비스의 접근성이 향상됨.

〈표 2-43〉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정책군 핵심과제의 3년간 달성률

핵심 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2020년			2021년			2022년		
			계획	달성	달성률	계획	달성	달성률	계획	달성	달성률
거점과 배후마을 간 상호기능 연계 강화	중심거점-기초거점 조성 현황(누계) (개소)	1,080	693	693	100%	797	797	100%	900	900	100%
산불 예방 방지 대책	소각 산불 발생률(%)	16.8	23.0	19.0	117%	21.9	13.8	137%	20.8	13.6	135%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고령자복지주택)	대상지 선정 수(개소)	10	10	10	100%	10	15	150%	10	10	100%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마을정비형 공공 임대주택)	사업 준공수 (개소)		10	5	50%	10	2	20%	-	-	-
	지구선정 (개소)		-	-	-	-	-	-	2,000	1,200	60%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서비스 모델 발굴 건수(점)		20	20	100%	-	-	-	-	-	-
	서비스 확산 건수(점)	2~3	-	-	-	2	3	150%	3	3	100%
	수혜자 만족도(점)		73.5	82.8	113%	77.2	83.2	108%	81.0	89.3	110%

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각 연도).

〈정책 제언〉

○ 정책 수행도와 삶의 질 영향력 평균 이하 과제들은 농어촌 지역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농어촌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함.

- 핵심과제를 포함한 정책군 17개 과제의 정책 수행도 평균 이하 과제(2020년 9개, 2021년 8개, 2022년 6개)와 삶의 질 영향력 평균 이하 과제(2020년 5개, 2021년 7개, 2022년 6개)에 대한 점검·개선이 필요함.

○ 또한 정책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은 사업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

- 산림보호 지원 등의 세부사업은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한 실적이 보이지 않음.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사업 실적이 저조한데도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 외에 특별히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이 부족함.

- 해당 정책군에 속한 대부분 사업들이 목표로 제시한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성과지표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지 않은 사업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목표치 조정 및 대체 지표 설정이 필요한 사업도 있음.
 -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목표미달 요인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으며, 목표치 조정 또는 대체 지표 설정이 필요함.

- 사업의 달성 목표가 농어촌 지역의 현실적 여건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
 - 목표 달성치를 보수적으로 설정한 사업이 많아 일부 사업의 경우 성과 목표와 지표를 각 사업 자체의 목표와 삶의 질 기본계획 목표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주기반을 마련한다는 정책군 목적은 정주기반 구축 부문 계획 목표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지만 일부 사업들은 정책군 목적 부합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수리시설이나 어항시설 안전, 산불 예방 대책 등 안전 분야 사업들의 경우 필요성 자체는 높지만, 사업 성격상 본 정책군의 취지와 정확히 부합하지는 않음.
 - 정주환경 및 농촌생활서비스 모니터링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분야 자체는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취지와 부합하나 R&D 과제이므로, 기본계획 목표를 직접적으로 달성할 사업은 아니라고 사료됨.

- 농어촌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농어촌형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함.
 - 교통안전 활동, 해역별 외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및 해양경비정보 시스템 구축, 스마트타운 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은 농어촌에 특화된 내용이 아니거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는 사업이므로, 농어촌형 사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단순 실적 지표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삶의 질 향상 효과를 제시할 수 있는 만족도 조사나 사업 진행에 따른 성과분석이 필요함.

- 거점과 배후마을 간 상호기능 연계강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등과 같이 큰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주민들이 직접적 수혜자인 사업의 경우는 단순히 사업지구 개소수 같은 지표가 아니라 주민 만족도나 서비스 이용자 수 등 삶의 질 향상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 도입이 필요함.
- 농어촌지역 범죄예방활동 강화 사업은 순찰 지역 주민의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사업 효과 검증 및 확대가 필요함.
-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은 입주자 만족도 평가 등을 통해 성과평가를 추진하고 개선 방향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은 추후 정책 수혜 대상자의 만족도 및 개선사항 조사 및 사업 규모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농어촌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확대 추진이 필요함.

- 수리시설 안전관리 사업은 재해 위험도를 효과적으로 낮추고, 안전한 농어촌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하기에 수요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확대 추진이 필요함.
-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대책 사업은 상습 침수 농경지의 침수피해 해소에 기여하고,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기에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풍수해에 대응하여 사업 규모와 범위의 확대가 필요함.
- 스마트타운 조성 사업은 우수사례 사업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공 모델을 확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농어촌 중심지 외에도 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용성을 높이고, 타 부처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성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수혜자인 농어촌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사업 실행력 제고가 필요함.
 - ‘거점과 배후마을 간 상호기능 연계강화’ 사업은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농어촌 지역 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사업 실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수혜자인 농어촌 주민이 참여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가지고, 이를 통해 정책사업의 실행력을 높여야 함.

- 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한 사업 실행 방식과 추진체계 개선이 필요함.
 -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등의 사업에서는 하드웨어 구성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이 요구됨.
 -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미입주 발생 원인 분석 및 거주민·입주자 의견수렴이 필요함.
 - ‘거점과 배후마을 간 상호기능 연계강화’ 사업은 거점 구성에 따른 주민 생활 서비스 향상,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 전달체계 구축 등의 성과를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함.
 - ‘스마트 타운 조성 사업’은 주민, 지역기업의 참여 방식과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함.

-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협업, 민간·사회적경제 부문의 서비스 전달 주체 육성 등을 통해 정책의 실행 방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거점과 배후마을 간 상호기능 연계 강화’ 사업은 돌봄·문화 등의 서비스 전달을 위한 주체 발굴·육성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사업의 규모와 적극성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해당 부처에서 추진하는 타 예산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마을 단위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에 적합한 사업

이나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사업의 규모와 적극성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에 국토 부에서 각 지자체가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시행계획 점검·평가 대상 과제에 대한 소관 부처 차원의 자체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해야 함.
 - 시행계획 점검·평가 대상 과제의 소관 부처는 농어촌 지역의 불리한 서비스 접근성과 부족한 자원, 열악한 인프라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 목적을 설정하여야 함.
 - 과제별 성과 목표를 삶의 질 기본계획의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정책·사업들의 자체적인 정책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함.
 - 삶의 질 위원회 차원의 삶의 질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평가 체계와 더불어 소관 부처 차원에서 농어촌 지역에 미치는 정책 성과에 대한 지속적 관리, 정책 실행 과정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 정책 문제점에 대한 환류체계 구축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3.2.4.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보전

□ 정책군 개요

- 본 정책군은 지속가능한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촌 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힐링 공간으로서 농어촌 공간의 가치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는 주요 정책과제로 ① 농어촌 폐기물 수거·처리 개선, ② 농어촌 지역 미세먼지 관리 강화, ③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환경자원 활용, ④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를 설정함.
 - 이와 관련한 핵심과제는 ① 농어촌 폐기물 수거·처리 개선, ② 축산 경종 분야 암모니아 관리 강화, ③ 축산분뇨 자원화-에너지화, ④ 농촌공간계획을 활용한 난개발 방지로 볼 수 있음.

〈표 2-44〉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정책군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평가 결과

단위: 점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2020년	2021년	2022년
(3-4-1-1) 농어촌 폐기물 수거·처리 개선	92.7	83.3	86.0
(3-4-2-1) 축산 경종 분야 암모니아 관리 강화	100.0	98.0	97.3
(3-4-3-4) 축산분뇨 자원화-에너지화①(환경부)	85.0	88.7	92.0
(3-4-4-1) 농촌공간계획을 활용한 난개발 방지	87.7	91.3	83.3

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각 연도).

□ 평가 결과

〈정책 성과〉

○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이라는 비전 아래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생명의 터전을 목표로,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이라는 전략을 추진함.

- ‘농어촌 폐기물 수거·처리 개선’ 과제는 농어촌 지역에 매립, 소각 등 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악취와 환경오염을 예방함으로써 살기좋은 농촌 정주기반 확보로 농어촌 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음.
- ‘축산 경종 분야 암모니아 관리 강화’ 과제는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축산악취를 저감하고, 환경오염 및 국민 불편 예방에 기여하였음.
- ‘축산분뇨 자원화-에너지화’ 과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시설개선을 통해 중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가축분뇨를 정화, 자원화 등 적정처리 함으로써 상수원 등 수질 보전 및 생활환경 보호에 기여하였으나, 현행 성과지표인 자원화율은 퇴·액비 처리비중을 의미해 가축분뇨 처리방식 다각화를 추진하는 현재 정책방향과 상이하기에 추후 성과지표의 개선이 필요함.
- ‘농촌공간계획을 활용한 난개발 방지’ 과제는 농촌공간계획 제도화와 축사·공장 등 위해시설을 정비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의 연계한 ‘先계획-後지원체계’를 통한 쾌적한 농촌 공간 조성에 기여하였음.

○ 해당 정책군에 속한 핵심과제들이 농어촌 지역에 미친 사회적 파급 효과 및 영향력은 다음과 같음.

- ‘농어촌 폐기물 수거·처리 개선’ 과제는 주요 사업을 통한 성과가 악취, 환경오염을 예방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인정되지만, 농어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 환경개선 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축산 경종 분야 암모니아 관리 강화’ 과제는 전문조직 육성, 지도·점검 강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시설 현대화, 축산업 허가자 준수사항 강화 등 제도정비로 환경오염 및 국민 불편 예방이라는 측면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큼.
- ‘축산분뇨 자원화·에너지화’ 과제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을 위해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등 최근 재생에너지와 관련 파급효과가 큰 분야이기에 목표 달성도를 반영하기 어려운 현행 성과지표의 보완 검토가 필요함.
- ‘농촌공간계획을 활용한 난개발 방지’ 과제는 농촌공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연계된 사업을 지원하는 ‘先계획 - 後지원체계’의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에 관한 것으로, 매우 파급효과가 큰 과제이며, 지역의 특화사업, 주민참여 등 지속적인 보완 추진이 필요한 과제임.

〈정책 제언〉

○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보전 정책군’은 ‘농어촌 폐기물 수거·처리 개선, 농어촌 지역 미세먼지 관리 강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역 환경자원 활용’,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를 세부 정책군으로, 성과목표를 ‘재활용 동네 마당 시설 구축’과 ‘퇴비 유통 전문조직 육성’으로 두고 있음.

- 농어촌 환경·경관의 고질적인 문제인 영농폐기물, 어업폐기물 및 수산부산물 수거·처리, 해안쓰레기, 가축분뇨 활용 등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원에 대해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수단 확보와 농촌공간계획 제도화로 난개발 등에 대한 적극적 농촌 공간정책을 시작하였다는 의의가 있음.

-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와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준용하여 삶의 질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과 구상이 작성되고, 성과 목표와 주요 과제가 연계성 있게 작성이 되어야 함에도 시행하고 있는 과제를 연결하여 구성함으로 비전-목표-주요 과제의 연계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부진 과제, 현장 모니터링단이 제시한 의견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여론 수렴, 이슈 발굴, 정책 추천을 거쳐 개선 사항을 보고함으로써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는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요함.

- 농촌특화지구, 농촌협약 등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23.3) 및 시행('24.3)에 따른 정책과제 중 삶의 질 관련 이행과제를 발굴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ICT, AI 등 미래기술 등 최근 사회변화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과제를 발굴하고 삶의 질 관련 민간 부문의 투자나 협업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4. 경제·일자리 전략

4.1. 경제·일자리 전략 전체 평가 결과

4.1.1. 정책 목표 달성도

□ 정책 목표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경제·일자리 부문의 목표는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임.

-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정책군으로 설정된 주요 과제는 ①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② 농어촌 관광 활성화, ③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④ 농어촌 여성 취업 지원 및 일손 부족 해소임.

〈표 2-45〉 경제·일자리 전략 정책과제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농어촌 관광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여건에 맞는 융복합산업 고도화•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푸드플랜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자원 연계 강화 및 수요 확대를 위한 콘텐츠 발굴• 농어촌 관광 인프라 개선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농어촌 여성 취업 지원 및 일손 부족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취업·창업 촉진•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창업·정착 지원• 농산어촌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다문화 여성의 취업 지원 강화•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

자료: 관계부처 합동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2020).

□ 정책 목표 달성도

○ 경제·일자리 전략의 대부분의 성과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하였지만, 경제·일자리 여건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는 등락 폭이 크게 나타남.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건수는 90개소(2020년)에서 101개소(2022년)까지 증가함.
- 농촌관광 방문객 수는 656만(2020년)에서 928만(2022년)으로 증가함.

-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창업 건수는 2,727개소(2021년)에서 2,744개소(2022년)로 증가함.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는 1,909명(2020년)에서 2,204명(2022년)으로 증가함.

〈표 2-46〉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내 경제·일자리 전략 성과 목표

전략	성과지표	성과목표(실적)		
		2020년	2021년	2022년
경제·일자리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누계)	90	96	101
	수산물식품산업 거점 단지 조성(누계)	13	15	19
	농촌관광 방문객 수(만 명)	656	731	928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생 배출 인원(명)	208	208	208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누적, 건수)	2,727	2,843	2,774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자 수(명)	171	281	270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명)	1,909	2,034	2,204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누적, 건수)	374	753	955
	농어촌 경제활동 만족도(10점 척도)	4.6	5.3	4.7

자료: 농식품부 내부자료.

4.1.2. 삶의 질 개선 정도

○ 2022년도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3년간 경제·일자리 전략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도시 지역에서 소폭 하락하였으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도시 지역 주민에 비해 만족도 점수가 낮고 등락 폭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일자리 용이성, 일자리 충분성, 일자리 지원, 충분한 소득에 대한 만족도 격차가 크게 나타남.

〈표 2-47〉 경제·일자리 전략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11점 척도)

전략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2020년	2021년	2022년	2020년	2021년	2022년
경제· 일자리	일자리 용이성(소득 기회)	5.6	5.7	5.1	4.5	5.2	4.4
	일자리 충분성	-	-	5.0	-	-	4.3
	충분한 소득	-	-	5.4	-	-	4.8
	경제여건 향상	5.3	5.6	-	4.6	5.3	-
	농외소득(농촌만)	-	-	-	5.0	5.6	-
	농어촌관광(도시만)	5.2	5.3	-	-	-	-
	일자리 지원	5.5	5.6	5.3	4.7	5.3	4.6
	로컬푸드 판매	-	-	5.5	-	-	5.3
	관광자원 및 산업 활성화	-	-	5.0	-	-	4.9
	여성·다문화 일자리(농촌만)	-	-	-	4.8	5.4	-
	다문화 주민 경제활동 지원	-	-	5.2	-	-	5.0
	여성농업인 경제활동 지원(농촌만)	-	-	-	-	-	4.9
	(평균)	5.5	5.6	5.2	4.6	5.3	4.7

자료: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각 연도).

○ 경제활동 부문에서 미달성 항목이 있으나, 전년보다 달성 정도가 개선되어 목표치에 근접해가고 있음.

- 창업·취업 컨설팅교육 항목의 달성 정도는 77.5%로, 목표치(86%) 대비 90.1% 수준에 그침.
- 2021년도(68.8%) 보다 2022년도(77.5%)의 달성정도가 8.7%p 개선됨.

〈표 2-48〉 경제·일자리 전략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 이행실태 변화

단위: %

부문	서비스 항목	세부시설(기초 인프라 시설) 및 측정 기준	2020년	2021년	2022년	목표 ('20~'24)
경제·일자리	창업·취업 컨설팅교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창업·취업 관련 지원센터에서 사업체 창업·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1년 1회 이상 받을 수 있는 비율을 86% 이상으로 한다.	65.5	68.8	77.5	86

자료: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각 연도).

○ 경제·일자리 전략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와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바탕으로 볼 때, 경제·일자리 부문의 만족도 제고 및 도·농간 격차 완화, 농어촌서비스 기준 핵심 항목의 목표치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

4.2. 정책군별 평가 결과

4.2.1.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 정책군 개요

- 본 정책군은 농어촌 융복합산업 고도화, 관광 활성화 및 푸드플랜 체계화를 통해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기반 다각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주요 정책과제로 ① 지역 여건에 맞는 융복합산업 고도화, ②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푸드플랜 체계화를 설정함.
 - 이와 관련한 핵심과제는 ① 농촌융복합사업 활성화, ② 푸드플랜 연계 가공 기초기반 조성 지원임.

〈표 2-49〉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정책군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평가 결과

단위: 점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2020년	2021년	2022년
(4-1-1-1) 농촌융복합사업 활성화(융복합산업 창업지원 강화)	96.3	91.3	94.7
(4-1-2-3) 푸드플랜 연계 가공 기초기반 조성 지원	97.7	96.7	98.0

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각 연도).

□ 평가 결과

〈정책 성과〉

- 해당 정책군은 다양한 농업·농촌의 유·무형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의 창업 촉진, 사업 운영과 확장, 시설·장비 개선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융복합산업의 고도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에 역량있는 창업 경영체 육성 및 지역 농산물 공동 가공활동 지원으로 농어촌 지역의 소득기반 다각화를 위한 기초적인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며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하고 있음.
 - ‘농촌융복합사업 활성화’ 사업의 성과지표로 제시된 ‘인증사업자 수’는 3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목표치를 달성함. 또한 지역특화상품 다양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및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 및 지원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및 네트워크 수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인증사업자 수 목표치 달성도: ('20) 112.3% → ('21) 101.7 → ('22) 101.8

* 농촌융복합산업 지구/네트워크 수(누적): ('19) 24개소/77개소 → ('20) 28/84 → ('21) 32/90

- '푸드플랜 연계 가공 기초기반 조성 지원사업'의 성과지표로 제시된 시제품 개발과 매출액 증가율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여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함. 또한 지역 및 여건 및 수요를 고려하여 가공장비 및 설비의 공동 활용을 위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며, 가공기술·식품위생 등 창업교육·코칭, 시제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신규 창업 경영체도 지속적으로 육성되고 있음.

* 농산물 상품화 매출액 증가(전년대비 증가율): ('20) 12.5% → ('21) 13.9 → ('22) 15.9

* '농산물가공기술표준화 사업'을 통해 개발된 시제품 개발 건수(실적 개수/목표 개수): ('20) 33/19 → ('21) 74/55 → ('22) 77/45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누계): ('20) 90개소 → ('21) 96 → ('22) 101

* 신규 창업 경영체 육성: ('20) 100개소 → ('21) 122 → ('22) 134

- 해당 정책군의 두 핵심과제는 맞춤형 종합지원과 신규 경영체수 및 매출액 증가 등의 기여를 통해 사회적 파급효과를 지속적으로 창출시키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큼.

- '농촌융복합사업 활성화' 사업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안정적 판로 확보 지원을 통해 인증경영체와 매출 실적 증가에 기여함. 또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지도 및 소비자 요구, 서비스 만족도 등 관심 영역을 조사하여 홍보방식 및 판로개선에 반영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의 고객 확장성이 증대됨. 이로 인한 경영안정 및 매출액 증대는 농가소득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인증사업자 수: ('20) 1,909개소 → ('22) 2,204 / 총 매출액: ('21) 3.31조 원 → ('22) 3.62

* 삶의 질 영향력 지수(최고 5등급): ('20) 5.0 → ('21) 5.0 → ('22) 5.0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지도: ('20) 26.3 → ('21) 32.1 → ('22) 36.3

- '푸드플랜 연계 가공 기초기반 조성 지원' 사업은 일자리와 연관된 인력 유입 및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구체적으로 역량있는 창업 경영체 육성 및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조성 확대를 통한 지역 농산물 공동 가공활동 지원, 농산물가공 전문성 향상 지원을 위한 교육·컨설팅, 시제품 개발·생산 등 창업 초기 단계부터 자립 경영까지 종합 서비스 지원, 농산물 가공제품 품질 향상 및 맞춤형 시제품 개발 등의 사업들을 수행하여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인력 유입에 기여함.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누계): ('20) 90개소 → ('21) 96 → ('22) 101

* 신규 창업 경영체 육성: ('20) 100개소 → ('21) 122 → ('22) 134

* 농산물 상품화 매출액 증가(전년대비 증가율): ('20) 12.5% → ('21) 13.9 → ('22) 15.9

* '농산물가공기술표준화 사업'을 통해 개발된 시제품 개발 건수(실적 개수/목표 개수): ('20) 33/19 → ('21) 74/55 → ('22) 77/45

〈정책 제언〉

○ 해당 사업의 지표에 사업의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사업의 취지와 성과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지표들을 추가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함.

-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은 직거래나 온라인 거래 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여 사업 목적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매출액, 참여 농가)를 추가하여 사업 목적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거점단지 조성 및 유통체계 개선, 관련 융복합산업 육성을 통해 추구하는 정책목표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하고 필요 시 후속사업이나 관련사업과 연계시켜야 함.

-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산림분야 6차산업 육성'에는 단지 조성이나 클러스터 조성, 센터 건축 공정율보다는 그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추가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향후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 수립에서도 경제부문에서 일자리 창출과 인력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지속되어 농어촌 지역의 다양한 소득기반이 조성되고 경영체가 육성되

어야 하지만 이를 위한 정책군과 세부과제들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인 조정이 필요함.

- 경영체의 창업 및 운영의 전 공정(원료 및 인력 확보, 가공, 유통, 판매)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함께 단계별, 규모별 특화사업 등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창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본 정책군(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과 농어촌 취·창업 촉진 정책군에 혼재되어 있어 정리할 필요가 있고, 관련 사업들 간에 연계가 필요함.
- 농어촌 경영체 창업과 이후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공 공동 활용시설 조성과 교육 및 훈련 컨설팅 지원을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유형화하여 접근하면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4.2.2. 농어촌 관광 활성화

□ 정책군 개요

○ 해당 정책군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어촌 관광 콘텐츠 개발과 관광 서비스 인프라 기반 구축을 통해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 농어촌 가치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주요 정책과제로 ① 지역자원 연계 강화 및 수요 확대를 위한 콘텐츠 개발·발굴, ② 농어촌 관광 서비스 인프라 개선을 설정함.
- 이와 관련한 핵심과제는 ① 농촌관광 활성화, ② 어촌관광 활성화임.

〈표 2-50〉 농어촌 관광 활성화 정책군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평가 결과

단위: 점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2020년	2021년	2022년
(4-2-1-1) 농촌관광 활성화	82.0	92.0	94.0
(4-2-1-2) 어촌관광 활성화	90.0	90.7	90.7

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각 연도).

〈정책 성과〉

- 성과목표 측면에서 2020년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추진 등으로 예외로 하고, 2021년부터 성과목표를 100% 이상 달성함.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재설정하였지만, 목표치를 초과달성함.
 - 농촌관광 방문객 수: 2021년 680만 명 목표 대비 731만 명 달성(달성률 107.5%), 2022년 805만 명 목표 대비 928만 명 달성(달성률 115.3%)
 - 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객 수: 2021년 105만 명 목표 대비 112만 명 달성(달성률 106.6%), 2022년 116만 명 목표 대비 129만 명 달성(달성률 111.2%)

- 농어촌관광 경영체 증가와 매출 증대로 농외소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농촌관광 경영체 수(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증가: 2019년 30,529 개소, 2020년 31,143개소(2.0% 증가)
 - 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 소득 증가: 2021년 전국 118개 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 소득 전년 대비 10.6% 증가('21.10, 160억 원), 2022년 전국 124개 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 소득이 전년 대비 16.6% 증가('22.12, 217억 원)

- 농어촌관광 홍보 사업을 통해 농어촌관광에 대한 홍보가 강화됨.
 - 바다여행 누리집 방문자(만 명): ('18) 144 → ('19) 139 → ('20) 145 → ('21.10) 174

- 전 국민 대상 최근 3년 내 농촌관광 경험자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등 실질적 정책 효과가 나타남.
 - 2021년 최근 3년 내 경험자의 농촌관광 만족도는 84.1%, 2022년 만족도는 86.0%로 전년 대비 약 2%p 상승함.

〈정책 제언〉

- 세부 사업들의 목적이 전반적으로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에 부합하게 설정되었으나 향후 농어촌 관광 활성화 정책은 기존 농어가의 농어업 외 소득 향상이 아니라 농어촌의 다양한 민간 혁신 주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적 활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특히 농어촌 인구 감소에 대응한 다양한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함.
 - 인구 감소에 대응한 청년 유입, 귀농·귀촌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정책 등과 긴밀히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농어촌을 구성하는 다양한 민간 혁신 주체 육성을 위한 사업 내용과 실행방식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기간 중 위축된 농어촌 관광의 양적·질적 회복을 위해 관광 트렌드 변화 및 소비자 수요 등에 대응한 농어촌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지원을 강화하여야 함.
 - 추진체계 측면에서 관광 부문의 빠른 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조직과의 협력, 그리고 시행 이후 사업 결과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를 추진 체계에 포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관광 활성화 정책 수혜 지역이나 그룹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방문객 등 수요자의 의견을 가능한 반영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설정해야 함.

- 농어촌 관광 활성화 정책군의 성과지표 관점에서는 방문객 수 외에 추가적인 지표 설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농어촌 경제활동 다각화를 통한 주민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고려할 때, 산업적 측면에서 농어촌 관광 경영체 수, 일자리 수, 농어촌관광 소비액 등을 성과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

- 궁극적으로 살기 좋은 농어촌 만들기과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농어촌 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관광객 중심 사고에서 나아가 장기적으로 농어촌 주민을 주요 정

책 수혜자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농어촌 관광의 수혜자(수요자)인 관광객 외에 농어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어촌 관광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 활성화 등 변화를 조사하고, 이들의 농어촌 관광사업 만족도, 참여도를 성과지표로 고려할 수 있음.

- 농어촌 관광의 지속가능성 및 정책 효과 관점에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수요자(관광객)뿐 아니라 실행자(주민)의 의견을 균형적으로 반영하여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 관점에서 농어촌 관광 방문객 수가 아니라 재방문을, 농어촌 관광 인지도 등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농어촌 관광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관련 성과지표로서 농어촌관광 경험률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각각의 세부 사업이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성과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에 있어 세밀한 고민과 접근이 필요함. ‘관광’을 매개로 농어촌에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특히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지원해야 함.

- 농어촌 관광 방문객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농어촌 관광객들이 농어촌 관광경영체(농어촌체험휴양마을 포함)에서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즉, 농어촌 관광경영체가 방문객들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더 많은 액수를 지불할 수 있도록 상품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 농어촌 관광의 강점을 부각한 정보 제공 및 홍보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농어촌 관광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홍보 및 정보 전달 방식을 다양화하고, 정보 파급력이 높은 젊은 층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매체와 방식 등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다양한 홍보 타겟에 맞는 효과적인 홍보 및 정보 전달 매체·방법을 강구해야 함.

4.2.3.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 정책군 개요

- 해당 정책군은 청년 및 귀농·귀촌인의 창업 촉진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농어촌 지역 신산업 육성을 통한 농어촌 지역 경제 활력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주요 정책과제로 ① 청년 및 귀농·귀촌인 창업 촉진, ②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창업·정착 지원, ③ 농산어촌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를 설정함.
 - 이와 관련한 핵심과제는 ① 영농승계 다변화를 통한 청년농업인 양성, ② 귀농·귀촌인 창업 주거지원, ③ 스마트팜 보급 확산 및 전문가 양성임.

〈표 2-51〉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정책군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평가 결과

단위: 점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2020년	2021년	2022년
(4-3-1-5) 영농승계 다변화를 통한 청년농업인 양성	97.7	98.7	99.3
(4-3-2-1) 귀농·귀촌인 창업 주거지원	94.0	98.7	98.7
(4-3-3-1) 스마트팜 보급 확산 및 전문가 양성	93.7	94.7	96.7

자료: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각 연도).

□ 평가 결과

〈정책 성과〉

-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정책군 세부과제의 성과목표는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목표에 기여하도록 적절하게 설정되었고, 세부과제의 성과 목표 달성 정도는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농업법인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의 2022년 성과목표(전문인력지원 100명)를 초과 달성함(113명).
 - ‘귀농·귀촌인 창업 주거지원’ 사업의 2022년 성과목표(귀농·귀촌교육자 정착률 30%)를 초과 달성함(42.1%).
 -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 사업 등 일부 사업은 목표대비 달성도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성과 달성을 위한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세부 핵심과제인 ‘영농승계 다변화를 통한 청년농업인 양성’사업은 영농창업활성화로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이 확대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 본 사업의 정책 수행도와 본 사업의 삶의 질 영향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책 수행도(점): ('20) 97.7 → ('21) 98.7 → ('22) 99.3

* 삶의 질 영향력(등급): ('20) 5.0 → ('21) 5.0 → ('22) 5.0

-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신규 청년 창업농이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함.

- 영농정착지원금, 자금·농지·기술교육 등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한 종합지원으로 초기 소득안정 및 영농정착률이 높아지고 있음.

* 영농정착율(%): ('18) 91.4 → ('22) 92.1

- 도시지역 청년 및 비농업계 인력의 농업 분야 창업과 농촌유입 성과를 창출함.

* 2022년 선발자(6,600명) 중 창업예정자 포함 영농경력 1년 이하가 90.0%, 비농업계 졸업생 비중이 70.5%, 귀농청년은 70.9%으로, 청년들의 농업분야 유입촉진에 기여

*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규모(12,815가구)가 2018년(7,624가구) 대비 약 68%(5,191가구) 증가

-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에 따라 농외소득 활동을 줄이고 영농에 집중하게 되어 지원 대상자의 농업 분야 매출액 및 농업소득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평균 총 매출액(천 원): (선정 전) 23,455 → (선정 후) 40,347(1.7배 증가)

* 평균 농업소득액(천 원): (선정 전) 8,976 → (선정 후) 15,455(1.7배 증가)

* 평균 영농기반 면적(m²): (선정 전) 6,488 → (선정 후) 12,929(2배 증가)

○ 세부 핵심과제인 ‘귀농·귀촌인 창업 주거지원’ 사업은 체계적인 귀농·귀촌 지원을 통해 농촌지역의 인구가 증가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 본 사업의 정책 수행도와 본 사업의 삶의 질 영향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책 수행도(점): ('20) 94.0 → ('21) 98.7 → ('22) 98.7

* 삶의 질 영향력(등급): ('20) 4.7 → ('21) 5.0 → ('22) 5.0

- 본 사업은 성과목표치로 귀농·귀촌교육자 정착률 30%로 설정하였는데, 실제 성과는 42.1%로, 매우 우수한 성과 달성을 보여줌. 특히, ‘귀농·귀촌인 창업 주거지원’ 사업은 농촌살아보기를 통해 귀농·귀촌 탐색과 실행 준비에 기여하고 있음. 이와 함께 농

정원, 지자체의 교육과 도시민 유치지원을 통해 농어촌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을 촉진하여 실질적인 지역 활력과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함.

-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 체계적인 사전준비 지원으로 귀농·귀촌을 통한 농어촌 지역 인구 증가에 기여함.

* 귀농·귀촌 인구(명): ('18) 490,330 → ('19) 460,645 → ('20) 494,569 → ('21) 515,434

* 농촌 인구(천 명) : ('18) 9,714 → ('19) 9,756 → ('20) 9,764 → ('21) 9,718

* 농림어업취업자 수(만 명): ('18) 134 → ('19) 139 → ('20) 144 → ('21) 146 → ('22) 153

○ 세부 핵심과제인 '스마트팜 보급 확산 및 전문가 양성' 사업은 스마트팜 보급을 통한 농산물 수급안정 및 농가 소득이 증대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 본 사업의 정책 수행도와 본 사업의 삶의 질 영향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책 수행도(점): ('20) 93.7 → ('21) 94.7 → ('22) 96.7

* 삶의 질 영향력(등급): ('20) 4.0 → ('21) 3.7 → ('22) 4.3

- 스마트팜 보급을 통해 기상재해 영향을 최소화하고, 노지재배에 비해 높은 생산량으로 농산물 수급안정 및 농가 소득 증대의 성과를 달성함. 이와 함께 자동화를 통해 노동시간도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냄.

* 애호박 생산량(kg/0.6ha): (도입 전) 31,206 → (도입 후) 41,649(1.3배 증가)

* 토마토 생산량(kg/0.6ha): (도입 전) 37,416 → (도입 후) 51,483(1.4배 증가)

* 딸기 생산량(kg/0.6ha): (도입 전) 19,626 → (도입 후) 25,820(1.3배 증가)

* 노동력 절감(시간/0.6ha): 애호박 271 절감, 토마토 522, 딸기 427

○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정책군의 일부 세부과제의 성과목표는 기본계획의 취지에 다소 부합하지 않고, 성과지표는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데 적절하지 않음.

- '스마트양식장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성과지표인 국내 양식수산물 생산량, '농식품 벤처 지원(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및 엑셀러레이터 육성)' 사업의 성과지표인 참가자수, 지원수, '농식품펀드 민간투자 활성화' 사업의 성과지표인 농식품펀드 누적 투자실적은 본 사업의 직접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는 매우 미흡함.

〈정책 제언〉

- 농어촌 취업·창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세부사업의 실행방식과 추진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함. 이와 함께 사업의 취지에 맞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은 농촌 유휴시설을 창업공간으로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신규 선정지구에 전문가 컨설팅 등을 실행하는 유효한 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음. 그러나 사업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리모델링과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단위 및 지역단위가 연결된 전체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함.
 -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 사업은 실적 중심의 사업관리체계에 머물고 있음. 따라서 거점 조성이 어떤 성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펀드 민간투자 활성화’ 사업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농식품 관련 기업들의 현황을 평가하고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평가 및 컨설팅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일부 세부과제의 성과지표는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취지와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미흡함. 따라서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대안적인 지표 개발이 필요함.
 - ‘스마트양식장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성과지표인 국내 양식수산물 생산량은 본 사업의 직접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는 매우 미흡함. 따라서 사업의 실제적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스마트양식장 설치 추진실적 또는 스마트양식장 생산량 등으로 성과목표를 대체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 벤처 지원(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및 엑셀러레이터 육성)’ 사업의 성과지표는 참가자수, 지원수를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실적이 아니라 창업인턴제 참가 및 기업지원에 따른 성과(예: 창업자수, 매출 등)를 성과지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펀드 민간투자 활성화’ 사업의 목적은 민·관 공동 투자 시장을 확대하여, 유망 농식품 경영체를 발굴·성장시키는 것임. 따라서 단순한 누적 투자실적 외에 투자기업의 매출액, 수익 등을 추가 성과지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정책군 세부과제에서 설정한 성과목표치의 적정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가 필요함.

- 대부분의 세부과제는 목표치가 어떤 방법론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근거 제시가 미흡함. 예를 들어 ‘귀농·귀촌인 창업 주거지원’의 경우 귀농·귀촌 교육수료자 정착률의 2022년 성과목표치는 30%로 설정되었으나, 달성치는 41.2%로 매우 높게 나타남. 이 같은 초과 달성은 정책의 효과적 수행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성과목표치 설정의 오류일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목표치 설정 시 좀 더 객관적인 방법론(예: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의 표준편차법, 전문가합의법 등)에 근거해야 함. 이를 통해 성과목표치 설정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세부 핵심과제인 ‘스마트팜 보급 확산 및 전문가 양성’ 사업은 사업 내에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일관성 있는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분리·재배치가 필요함.

- ‘스마트팜 보급 확산 및 전문가 양성’ 사업 내에 7개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스마트팜에 기반한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매우 우수한 사업임.
- 사업 내에 시설기반 조성(원예시설현대화, 스마트팜ICT융복합 확산,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축산분야 ICT시설 지원), 에너지효율화지원(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교육(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연구개발(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혁신기술개발) 등 이질적인 사업이 내역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음. 이에 따라 세부과제 내 사업들의 특성에 따라 사업추진체계와 목표 설정이 매우 상이함. 따라서 일관성 있는 추진체계 및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내역사업을 시설지원, 연구, 교육 등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정책군의 일부 세부과제들은 지속·확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몰사업으로 설정되어 있음. 따라서 이들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과제 발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농업법인 전문인력 채용지원’은 2023년을 마지막으로 일몰될 예정임.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는 농업법인에 대한 취업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따라서 농업법인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는 대체 사업 마련이 필요함.

- ‘청년 창업농 실습농장 설치 및 운영’ 사업의 경우도 2023년을 마지막으로 일몰될 예정임. 귀농 청년들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서는 실습농장에서의 훈련이 필수적임. 따라서 본 사업을 지속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4.2.4. 농어촌 여성 취업 지원 및 일손 부족 해소

□ 정책군 개요

○ 본 정책군은 다문화·여성의 취업 지원 강화 및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주요 정책과제로 ① 농어촌·다문화 여성의 취업 지원 강화, ②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설정함.

- 이와 관련한 핵심과제는 ① 농어촌 거주 여성 경제활동 지원, ② 농촌 고용인력 지원임.

〈표 2-52〉 농어촌 여성 취업 지원 및 일손 부족 해소 정책군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평가 결과

단위: 점

핵심과제	정책 수행도		
	2020년	2021년	2022년
(4-4-1-1) 농어촌 거주 여성 경제활동 지원	89.3	96.0	97.3
(4-4-2-1) 농촌 고용인력 지원	94.3	95.3	96.7

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각 연도).

□ 평가 결과

〈정책 성과〉

○ 세부과제들의 농어촌 삶의 질 영향력은 매우 높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를 달성함.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추진 기간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정책 실행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들에서 성과지표를 유지·확대 설정하여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성과목표를 초과 달성함.

- 새일센터는 여성직종 중심으로 취업 지원이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여성을 위한 유일한 취업지원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여성 고용률 증가 및 실업률 감소라는 고용지표의 개선에 기여함.

* 농촌여성 취업자 수(천 명): ('20) 2,148 → ('22) 2,317

* 고용률(%): ('20) 55.0 → ('22) 59.1

* 실업률(%): ('20) 2.2 → ('22) 1.3

- '농촌 고용인력 지원'은 다부처, 다기관 협력을 통해 다양한 계층으로 농업 인력풀을 확대하고, 온라인을 포함한 노동력 공급 체계를 마련하여 90만여 건(2022년)의 농업 노동력을 중개하는 실적을 올림. 향후 인력풀의 확대 및 안정적 인력 수급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일부 사업들은 사업의 실제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지표의 개선이 필요함.

- '다문화여성 역량강화' 사업은 결혼이민여성을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사업의 실제적 효과 파악 및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국적 취득 및 10년 이상 거주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착단계별 여성들의 역량수준을 고려한 지표 설정 및 교육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어업인 일자리 지원센터' 사업은 성과목표가 연차별로 하향 설정되었고, 목표 달성도도 낮은 편으로,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책 확대가 필요함. 현재 수협중앙회를 활용하고 있는데, 지역수협 및 민간 인력중개 역량 활용으로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정책 제언〉

- 농어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와 농촌 일손 부족 해소는 농어촌의 주요 현안이자 삶의 질 향상의 중요 의제이므로, 핵심과제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 두 과제를 하나의 정책군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농어촌 여성의 취업 지원 강화는 일자리 정책에 해당하므로, ‘농어촌 취창업 촉진’ 정책군에 포함하거나 별도 정책군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그리고 현재는 여성 가족부의 새일센터 운영 사업으로 정책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 농식품부의 농촌여성 일자리 정책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 정책군의 목적에 비추어 ‘다문화여성 역량강화’는 정책 내용 및 포괄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조정이 필요함.
 - ‘농어촌 여성의 직업역량 강화’로 과제 위상을 높이고, 지자체 및 교육훈련기관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농어촌 여성 직업교육훈련을 총괄하는 역할을 농식품부가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과제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새일센터의 신기술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이 일부 센터에서만 이루어져 농어촌 여성의 역량강화 기대효과가 높지 않으므로, 사업 선정에서 군 지역 새일센터를 우대하여 농어촌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들의 추진체계는 잘 갖추어져 있으나 사업의 규모가 전체 농촌 여건에 비해 부족하여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함.
 - 새일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대부분은 군 지역이므로, 새일센터 설치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자체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고, 현재 9개소에서 더 이상 늘지 않고 있는 농어촌형 새일센터의 지정 확대 노력이 필요함.
 - 농어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현장 노동력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품목별 인력 수요 예측을 농업생산 전망과 병행 실시하여 인력 수급 정책으로 발전되어야 함. 또한 농어업 일자리가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도록 하는 일자리 질 관리와 인프라 조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대부분 사업의 목표 달성 정도가 우수하지만 성과지표가 정책의 실효성 판단 근거로 삼기 어려운 과제들도 있으므로, 지표 개선이 필요함.

- ‘농어촌 거주 여성 취업 지원’은 농어촌형 새일센터의 실적만이 아니라 군 지역 새일센터의 취업 지원 실적으로 성과지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문화여성 역량 강화’는 정착단계별 여성들의 역량수준을 고려한 지표 설정 및 교육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단순 교육 실시 외 교육 이후 사후관리 사업으로 소모임, 컨설팅, 멘토링 등을 실시하고 해당 사업의 실적, 혹은 교육 이후 농산업 취창업 여성의 규모나 비율을 성과지표로 검토할 수 있음.
- ‘외국인 노동자 적정배정 및 처우 개선’은 숙소 기준 마련 등 인권 측면에서 개선되었으나 처우개선의 정책목표를 평가할 지표가 부재하므로, 처우개선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보완이 필요함.

○ 현재의 성과목표는 정책 산출물에 해당하므로 정책의 질적 측면을 평가하기에 불충분함. 핵심 세부과제는 정성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성과목표를 보조지표로 운영하여 정책의 질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농어촌 거주 여성 경제활동 지원’은 농어촌형 새일센터 취·창업 건수를 성과목표로 하되, 일하고자 하는 농촌여성이 얼마나 취창업에 성공하였는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농어촌형 새일센터 취·창업 성공률(취·창업건수/농어촌 새일센터 구직·창업희망자)을 보조지표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촌 고용인력 지원’ 역시 현행 증개건수를 성과목표로 유지하되 인력 수요를 얼마나 충족했는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증개율(증개건수/농촌인력증개센터에 요청된 인력수)을 보조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5. 4대 전략별 평가 요약

5.1. 보건·복지 전략

5.1.1. 개요

- 농어촌의 고령화·과소화 심화에 대응하여 지역 맞춤형 돌봄 모델을 개발·확산하고, 열악한 의료 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농어촌 보건의료 시설·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의료 취약 지역 해소 및 예방적 의료 서비스를 제고하여 농어촌 지역 의료 여건을 개선함.
 - 고령화·과소화가 심화되는 농어촌에 통합돌봄 인프라를 확장하고, 농어촌형 서비스 제공 모형을 개발하여 확산시킴.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육아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 고령·취약 농어업인의 소득 불안정 및 농어업 관련 위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사회 안전망을 내실화함.

5.1.2. 정책 성과 및 한계

-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추진과제 대부분이 목표했던 성과를 달성했으나, 사업별 성과 지표와 핵심 목표가 불일치하여 실질적인 정책 달성 목표를 확인하기 어려움.
 - 농어촌의 인구 감소·고령화에 따라 예상되는 전문인력 부족, 의료기관 유지비용 부담 및 지역별 격차에 대한 대응 방안이 미흡함.
-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사회서비스 정책 사업과 농어촌 정책 사업을 연계한 농어촌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의 개발·확산에 집중하였고, 일부 지역에서 성과를 보임.
 - 하지만 당초 계획하였던 부처간 협업을 통한 지자체, 지역 사회서비스 기관, 민간조직 등의 지역 단위 통합 돌봄 거버넌스 구축 성과가 미흡함.

- (보육·육아 친화적 지역사회 육성)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아이돌봄센터 지원 사업은 양적 측면에서 성과 목표를 달성함.
 - 하지만 도시에 비해 낮은 서비스 수준, 영유아 감소에 따른 시설 운영비 부담 등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
- (사회안전망 내실화)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 지원, 안전 재해 보험 가입률이 양적으로 확대되면서, 농어업인의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생활 안전에 기여함.
 - 하지만 낮은 농업인 연금 가입률, 지원금·지원 소득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농어촌 안전망 구축은 미흡함.

5.1.3. 정책 제언

-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농어촌 의료 서비스 기준은 도시와 동일한 법정 인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현재 예산으로는 전문인력 확보·유지가 어려움. 관련 사업 내용과 예산을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방문형 의료·간호 서비스 제공 사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4. 8. 시행)에 근거한 취약 노인에 대한 예방적 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가하고, 농어촌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보육·육아 친화적 지역사회 육성) 농어촌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거점으로 보건복지부의 ‘시간제보육 사업’을 연계·운영하여 농어촌 내 가장 수요가 높은 긴급·일시 보육,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충하여야 함.
- (사회 안전망) 농어촌 주민 일괄 지원에서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나 차등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소외된 집단을 파악하여 정책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음. 정책 성과는 집단별 사각지대 해소 정도를 지표화해서 사용하여야 함.

5.2. 교육·문화 전략

5.2.1. 개요

- 농어촌의 서비스 접근성을 보완하여 생애주기별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농어촌 주민이 문화·여가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통학 여건 개선 등을 통해 농어촌 학생의 교육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환경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 성인 문해 교육 활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기반 구축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 여건을 마련함.
 - 농어촌 문화·여가 인프라를 확충하고, 소외 지역 지원을 강화하여 농어촌 주민의 문화·여가 향유 여건을 개선함.
 - 농어촌 문화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향토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여가 향유가 가능하도록 지원함.

5.2.2. 정책 성과 및 한계

- (교육 서비스 확충)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버스 이용 시간이 감소하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학생 만족도가 증가하는 등 농어촌 교육 서비스는 질적 향상을 이루고 있음.
 - 농어촌의 협소한 도로 여건, 통학 버스의 유아보호장구 미비 등 미흡한 교통 안전, 일부 도로의 보행로 미설치 등 농어촌 통학로의 구조적인 문제가 위협 요인으로 지목됨.
- (평생교육 강화) 학교 교육 기회가 적었던 농어촌 주민, 특히 여성 노인들의 문해역량이 향상되면서 건전한 여가활동 및 문화활동 기회와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함.
 -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 여건’ 사업임에도 고령층 위주의 사업이 주로 추진됨. 농어촌의 다양한 세대와 생애주기를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됨.

-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 체육공간과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체육·문화·여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주민의 만족도가 높음.
 - 하지만 주민의 수요와 공급되는 서비스의 관계가 파악되지 않고, 양적 시설·서비스 공급 규모 이외에 주민의 체육·문화·여가 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움.

-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 단순한 문화·여가 활동 횟수를 넘어 개인의 치유, 사회적 관계망 확대 등 사회적 효과까지 창출하여 농어촌 사회 내에 사회적 자본을 형성·축적함.
 - 하지만 사업의 성과 자료가 도시와 농어촌을 구분하지 않아, 농어촌에 미치는 사업의 사회적 효과와 성과를 측정하는 데 제약이 있음.

5.2.3. 정책 제언

- (교육 서비스 확충) 농어촌의 학령인구 감소, 열악한 도로 여건, 부족한 통학 차량과 긴 통학 거리 등을 고려하여 통학 안전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역교육협의체를 통한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함.
 - 학부모·교육청·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교육협의체를 통해 학교 간 통학수단 공유, 탑승장소 안전 확보, 보행도로 개선 등 안전한 통학 여건을 마련해야 함.

- (평생교육 강화) 여러 단위로 분산 추진되는 평생교육 사업을 생애주기와 지역교육협의체를 중심으로 담당 부처·사업 간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농어촌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사업과 노인문해교육 사업, 농어촌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기반 활성화 사업 등은 서로 유사하지만 담당부처가 달라서 별도로 추진됨. 각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교육 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등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 체육·문화·여가 사업은 지방이양된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의 추진보다는 조성된 시설에 필요한 사업관리체계, 프로그램 및 전문인력 지원,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 농어촌 주민의 문화·여가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 위주로 사업 내용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 인문진흥사업, 농어촌 주민 여가 복지 사업을 추가하고, 사업의 성과 측정시 농어촌 비율을 의무적으로 산정하도록 함. 또한 문화 향유의 주체를 개인 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해야 함.

5.3. 정주생활기반 전략

5.3.1. 개요

- 농어촌 정주 특성에 맞추어 생활서비스 공급망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을 개선하여 각종 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함.
 - 농어촌 지역의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상·하수도 및 난방 등 주민 체감형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함.
 - 첨단 기술 기반의 정주환경 고도화 및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농어촌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함.
 - 지속가능한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휴식·여가 공간으로서 농어촌 공간의 가치를 증대시킴.

5.3.2. 정책 성과 및 한계

- (교통여건 개선) 농어촌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개선되고, 주민의 대중교통 만족도와 교통안전 만족도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농어촌 교통 여건이 개선되고 있음.

- 교통여건 개선 사업은 안정적으로 추진중이나 주민의 만족도와 서비스 수준의 향상 정도는 미흡함. 특히 도시와 비교하면 농어촌의 교통여건과 만족도는 미흡한 수준임.

○ (주거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농어촌 주민의 일상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과제들로 구성되었고, 농어촌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였으나 정책 수행도와 삶의 질 영향도는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음.

- 농어촌 인구 감소·고령화 등 장기적인 농어촌 변화를 고려하여 사업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ICT 기술 등을 활용한 무인행정민원서비스 키오스크 보급, 생활SOC 복합센터 조성,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한 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으로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 기반이 개선됨.

-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사업규모와 사업추진 적극성에 차이가 남. 비교적 균일한 정주기반 마련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정책·사업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함.

○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보전) 폐기물 수거, 가축분뇨 처리, 농촌공간계획을 통한 난개발 방지 등 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촌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있음.

- 다만 농촌공간계획제도의 지역특화지구, 폐기물 수거 등 활동은 주민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은 미흡함.

5.3.3. 정책 제언

○ (교통여건 개선) 실질적인 농어촌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분산된 농어촌 교통 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교통소외지역을 줄여나가는 정책 지향점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지리정보시스템(GIS)에 기반한 교통여건 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교통 관련 사업을 통합관리하고, '교통소외지역 해소율'을 성과지표로 도입해야 함.

- (주거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연계된 계획적·종합적인 기초 생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 주택, 빈집, 난방, 상·하수도,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은 마을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재해 안전에 대한 사업을 강화해야 함.
 - 인프라 개선 사업이 진행·완료된 마을은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하여 주민이 주도 하는 마을 관리와 추가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함.

-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목적을 중심으로 일부 사업을 개편하고, 서비스 전달 방식을 개선해야 함.
 - 어항시설의 안전, 외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 농어촌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서비스 확충과 거리가 있는 사업은 재편성이 필요함.
 - 농어촌 인구감소, 지방분권 확대, 농어촌 사회 공동체 축소 등에 대응하여 조성된 시설·서비스의 전달체계 개선, 배후마을의 이동성 향상 등에 대한 사업 추진방식 개선 이 필요함.

-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보전) 농어촌다움 유지 과제는 삶의 질 기본계획의 추진방향과 성과목표, 과제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함.
 -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ICT·AI 등 미래 여건변화, 삶의 질 관련 민간투자 등을 포함 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성과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5.4. 경제·일자리 전략

5.4.1. 개요

- 지역 내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소득원을 다각화하고, 청년·귀농귀촌인·다문화 여성 등 다양한 경제 주체의 취·창업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농어촌 융복합산업 고도화, 관광 활성화, 푸드플랜 체계화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기반을 다각화함.
 -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어촌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 농어촌의 가치를 증대시킴.
 - 청년, 귀농어·귀촌인의 창업 촉진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농어촌 지역 신산업 육성을 통해 농어촌 지역 경제의 활력을 증진시킴.
 - 다문화·여성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소득 안정과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함.

5.4.2. 정책 성과 및 한계

-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농촌융복합사업 활성화, 푸드플랜 연계 가공 기초기반 조성 지원을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과 신규 경영체 수 및 매출액 증가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일자리와 연계된 인력 유입,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관광 활성화) 농어촌 관광 홍보 강화와 농어촌 관광 수요 증대 등으로 인해 관광 경영체가 늘어나고 매출이 증가함. 이에 따라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취업·창업 촉진) 성과목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고, 전반적인 성과 목표 달성 정도가 우수함.
 - 하지만 ‘스마트양식장 클러스터 조성’, ‘농식품 벤처 지원’, ‘농식품펀드 민간투자 활성화’ 사업의 성과목표는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하기에 미흡함.

○ (여성 취업 지원 및 일손 부족 해소)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고, 대부분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를 달성함.

- 다만 '다문화여성 역량강화' 사업은 장기 거주 다문화 여성의 증가를 고려하여 정착 단계별 지표 설정 및 사후관리 방안이 필요함.

5.4.3. 정책 제언

○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사업 효과가 더욱 명확히 드러나도록 정책군과 세부 과제들의 체계를 조정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혼재된 창업 관련 사업과 취·창업 촉진 사업을 정리하고, 경영체 창업 이후 운영과 관련된 내용(원료 및 인력 확보, 가공, 유통, 판매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은 온라인 거래 실적, 직매장 운영 결과(매출액, 참여 농가 등) 등의 지표를 추가하여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 (관광 활성화) 농어촌 관광 활성화 정책은 농어촌의 다양한 민간 혁신 주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적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인구 감소에 대응한 청년 및 귀농·귀촌인 유입, 관계인구(생활인구) 확대 등 사업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농촌 내 다양한 민간 활동 주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 내용의 보완이 필요함.
- 관광객 중심의 정책 목표에서 나아가 장기적으로 농어촌 주민을 주요 정책 수요자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취업·창업 촉진) 일부 세부사업의 실행방식과 추진체계를 재검토하고, 정책 취지에 맞는 사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 ‘농식품펀드 민간투자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사업체의 운영 실적 및 성과(매출액, 생산량 등)를 성과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

○ (여성 취업 지원 및 일손 부족 해소) 사업의 사후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보조지표로 운영하여 정책의 질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사후관리를 위해 ‘농어촌 거주 여성 경제활동 지원’ 사업은 농어촌형 새일센터 취·창업 성공률을, ‘농촌 고용인력 지원’ 사업은 증개울(증개건수/농촌인력증개센터에 요청된 인력수)을 보조지표로 설정·관리할 수 있음.

3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성과 및 개편 방향

1.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성과

1.1. 정주민족도 조사 결과

○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현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2012년부터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 2012년, 2013년 조사에서는 농촌 지역 행정리를 마을 패넬로 구성하여 조사했으며, 2014년 이후 도시 지역을 포함한 전국을 층화추출방식으로 표본을 구성하고 온라인 조사와 방문 면접 조사를 병행하여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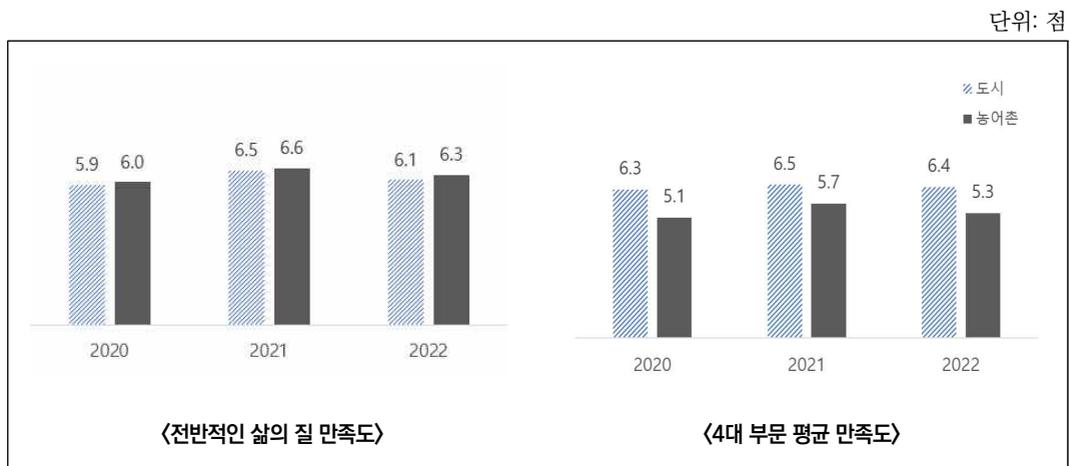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기간 약 3,000명의 도시 및 농어촌 주민에 대한 정주민족도 조사가 매년 이루어졌으며, 삶의 질 정책의 정성적 성과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 정주민족도 조사 응답자(명): ('20) 3,012 → ('21) 3,183 → ('22) 3,225

○ 4대 전략 중 정주 여건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도시 지역 주민 대비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낮았으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약간 높았음.

- 주관적 가치 및 인식을 반영하는 행복감 및 만족감, 건강 상태, 거주지역의 발전 전망 등을 포괄하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농어촌 주민이 도시 지역 주민 대비 매년 약간 높게 나타남.
 - 다만, 농어촌 주민의 정주 여건 파악을 위한 ‘4대 전략 평균 만족도’는 최근 3년간 약 1.0점의 도·농 간 차이가 나타나며, 크게 개선되지 못함.
- * 4대 전략 부문 평균 만족도 도·농간 격차(점): ('20) 1.2 → ('21) 0.8 → ('22) 1.1

〈그림 3-1〉 4차 기본계획 기간의 4대 전략 평균 정주 만족도



자료: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각 연도).

-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결과를 살펴보면, 농어촌 주민들의 살고 있는 마을 및 시·군의 발전 전망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음.
- 2020년 마을 발전 전망과 시·군 발전 전망의 도·농 간 격차는 각각 0.5점, 0.3점이었으나, 2022년 도·농 간 격차는 각각 0.2점, 0.1점으로 감소하여 도시 지역 주민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
- 현재 행복감, 살고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주관적 건강인식은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꾸준히 더 높게 나타남.

〈표 3-1〉 최근 3년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점수 비교

단위: 점

구분	현재 행복감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마을 발전 전망			시·군 발전 전망			주관적 건강 인식		
	'20	'21	'22	'20	'21	'22	'20	'21	'22	'20	'21	'22	'20	'21	'22
도시 지역	5.5	6.2	5.8	5.8	6.4	6.0	6.2	6.8	6.3	6.3	6.9	6.4	-	6.3	5.9
농어촌 지역	6.2	6.6	6.3	6.3	6.7	6.3	5.7	6.5	6.1	6.0	6.6	6.3	-	6.5	6.3
도·농 차이	0.7	0.4	0.5	0.5	0.3	0.3	-0.5	-0.3	-0.2	-0.3	-0.3	-0.1	-	0.2	0.4

자료: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각 연도).

○ 4대 전략의 전체 만족도의 도·농 간 격차는 소폭 개선되었으며, 부문별로는 교육·문화 부문과 정주기반 부문, 경제·일자리 부문에서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2020년 대비 소폭 향상됨.

- 보건·복지 전략은 도·농 간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크게 유지되고 있었으며, 교육·문화 부문과 정주기반 부문의 만족도 격차는 소폭 개선됨.
- 경제·일자리 전략의 경우 도시 지역 주민의 만족도는 감소했으나,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는 소폭 상승하여 도·농 간 격차 개선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표 3-2〉 최근 3년간 4대 전략 만족도 점수 비교

단위: 점

구분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도·농간 차이		
	'20	'21	'22	'20	'21	'22	'20	'21	'22
보건·복지	6.8	7.0	6.8	5.2	5.8	5.1	-1.6	-1.2	-1.7
교육·문화	6.1	6.4	6.3	4.8	5.4	5.2	-1.3	-1.0	-1.1
정주기반	6.9	7.1	7.1	5.9	6.4	6.2	-1.0	-0.7	-0.9
경제·일자리	5.5	5.6	5.2	4.6	5.3	4.7	-0.9	-0.3	-0.5
전체 평균	6.3	6.5	6.4	5.1	5.7	5.3	-1.2	-0.8	-1.1

자료: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각 연도).

○ 부문별 세부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일부 항목에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향상되거나 도·농 간 만족도 차이가 개선되었음.

- 정주기반 전략의 통신시설 및 생활 인프라, 교육·문화 부문의 공교육 수준, 문화·여가 시설 및 프로그램 항목에서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비교적 크게 향상됨.

- 경제·일자리 전략에서는 일자리 용이성, 경제여건 향상 항목에서 도·농 간 만족도 차이가 개선됨.

〈표 3-3〉 전략별 세부 항목 만족도 개선 항목

단위: 점

구분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도·농간 차이		
		'20	'21	'22	'20	'21	'22	'20	'21	'22
교육·문화	공교육 수준	6.6	6.7	6.8	5.2	5.8	5.8	-1.4	-0.9	-1.0
	방과 후 교육 기회	6.5	6.6	6.7	5.1	5.7	5.6	-1.4	-0.9	-1.1
	평생교육 기회	6.1	6.3	6.2	4.7	5.4	5.1	-1.4	-0.9	-1.1
	문화·여가 시설	6.2	6.5	6.6	4.6	5.4	5.2	-1.6	-1.1	-1.4
	문화·여가 프로그램	6.2	6.2	6.3	4.4	5.2	5.0	-1.8	-1.0	-1.3
정주기반	통신시설	7.6	7.7	7.8	6.1	6.7	6.9	-1.5	-1.0	-0.9
	생활 인프라	7.3	7.7	7.5	5.9	6.4	6.7	-1.4	-1.3	-0.8
	생활 서비스	7.3	7.6	7.3	5.6	6.2	5.8	-1.7	-1.4	-1.5
경제·일자리	일자리 용이성	5.6	5.7	5.1	4.5	5.2	4.4	-1.1	-0.5	-0.7
	경제여건 향상	5.3	5.6	-	4.6	5.3	-	-0.7	-0.3	-
	일자리 지원	5.5	5.6	5.3	4.7	5.3	4.6	-0.8	-0.3	-0.7

자료: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각 연도).

1.2.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 농어촌 지역 공공서비스 여건 개선 및 지역 내 격차 완화

○ 농식품부는 농어촌 내 삶의 질 격차를 평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에 대한 정책적 투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음.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보건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활동의 4대 전략 19개 항목으로 구성됨.
-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을 반영하여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접근성 개념을 적용하여 최소 접근시간 목표치를 설정함.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기간 대부분의 농어촌서비스기준에서 증기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지난 3년간 19개 항목 중 12개 항목(63.2%)에서 이행실태가 개선되었음.

- 해당 서비스 시설과의 접근성을 측정하는 6개 항목(진료, 영유아보육·교육, 초·중등 교육, 문화, 도서관, 체육시설)은 2021년 중기목표치를 기달성하였음. 상·하수도, 경찰순찰, 소방출동 항목 또한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기간 내 중기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응급의료, 노인복지, 체육시설, 주택, 상수도, 하수도, 난방, 대중교통, 생활폐기물, 방법설비, 경찰순찰,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항목 등 12개 항목의 이행실태는 지난 3년간 우상향 추세를 보임. 반면 영유아보육·교육, 평생교육 항목은 중기목표치는 달성하였으나 이행실태가 소폭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

〈표 3-4〉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부문	항목	2020년	2021년	2022년	중기목표치 (2024년)
1. 의료·복지	진료	23.3분	22.7분	23.1분	30분~1시간
	응급의료	20.8분	14.6분	13.8분	30분
	영유아보육·교육	5.8분	9.0분	9.1분	20분
	노인복지	99.3%	100%	100%	80%
2. 교육·문화	초·중등교육	7.5분	7.3분	7.4분	10분
	평생교육	88.2%	79.1%	83.5%	70%
	문화	24.7분	24.0분	24.1분	40분
	도서관	10.3분	9.9분	10.0분	10분
	체육시설	18.8분	17.0분	16.6분	30분
3. 정주 여건	주택	7.8%	30.7%*	34.8%	23%
	상수도	77.0%	80.6%	81.6%	85%
	하수도	71.8%	74.6%	75.6%	76%
	난방	68.1%	69.4%	70.0%	68%
	대중교통	87.1%	87.3%	89.1%	100%
	생활폐기물	(영농) 66.4%**	(영농) 75.0% (생활) 18.8%	(영농) 76.6% (생활) 20.6%	마을 내(100%)
	방법설비	64.9%	71.3%	75.9%	60%
	경찰순찰	62.9%	90.8%	95.4%	100%
	소방출동	72.1%	64.9%***	69.1%	70%
4. 경제 활동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65.5%	68.8%	77.5%	86%

주: 중기목표치를 달성한 항목은 음영표시함.

* 주택 항목은 측정 자료가 변경되어 '20년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상 표제부 자료에서 '21년 사업성과를 즉시 반영할 수 있는 환경부 '농어촌 슬레이트 철거실적 자료'를 활용함.

** '20년 생활폐기물 항목은 자료 구득이 불가하여 영농폐기물 이행실태만 조사하였음.

*** 소방출동 항목은 목표시간 설정에 필요한 화재발생 주소가 비공개 정보로 '20년에는 주소 대신 화재발생 동·리까지의 거리를 측정했으나 '21년부터는 출동 건별로 차고에서 화재현장까지의 이동 거리 자료 구득이 가능함에 따라 측정 방식을 변경함.

자료: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각 연도).

○ 연도별로 139개 농어촌 시·군의 항목별 중기목표치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평균화한 결과, 전체적으로 이행실태가 향상되었음.⁵⁾

- 일부 접근성 항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항목에서 점진적으로 이행실태가 개선되는 양상을 보임. 특히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간 달성률 차이가 점차 감소하여 농어촌 지역 내 격차도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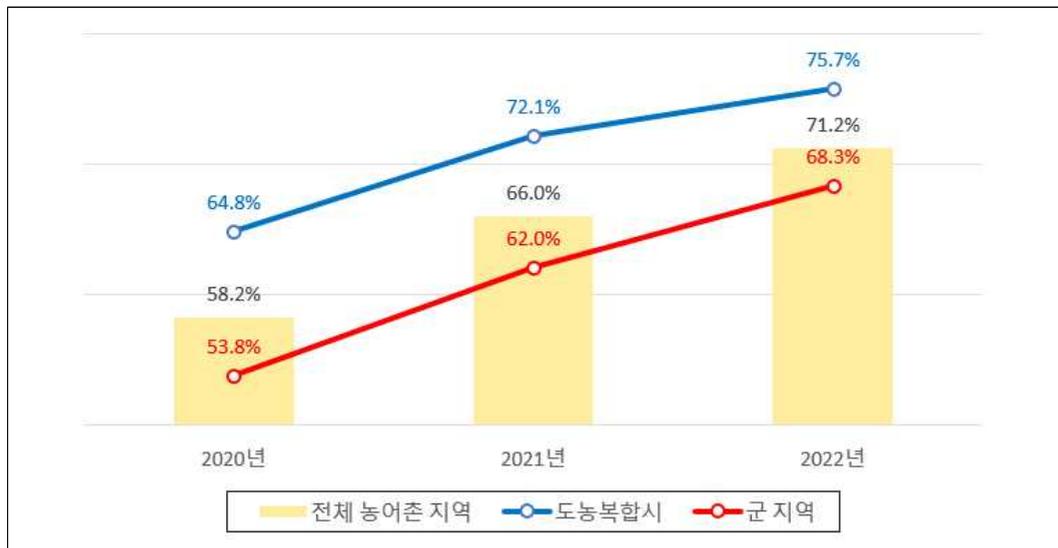
〈표 3-5〉 지역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중기목표치 달성률(평균) 변화 추이

단위: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농어촌 지역(n=139)	58.2	66.0	71.2
도농복합시(n=57)	64.8	72.1	75.7
군 지역(n=82)	53.8	62.0	68.3
차이(도농복합시-군지역)	11.1%p	10.1%p	7.4%p

자료: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각 연도).

〈그림 3-2〉 지역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중기목표치 달성률(평균) 변화 추이



자료: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각 연도).

5) 연도별로 각 항목에 대한 중기목표치를 달성한 경우 1, 미달성의 경우 0으로 구분하여 비교 가능한 18개 항목(주택 항목 제외)에 대하여 시·군별 평균 달성률 수치를 산출함.

1.3. 투용자 실적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기간의 총 투용자 규모는 약 55조 원 수준으로 전망됨.

- 전략별로는 정주여건 전략이 약 35조 9천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보건·복지 11조 원, 경제활동·일자리 4조 8천억 원, 교육·문화 3조 7천억 원 순으로 나타남.
- 예산 계획 대비 실적을 살펴보면, 첫 해인 2020년은 집행액 비율 99.1%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이후 2021년과 2022년은 예산 투입 실적이 계획을 초과함.
- 또한 2024년을 제외하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투용자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액됨.

〈표 3-6〉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연도별 투용자 실적

단위: 억 원

구 분		2020년 (실적)	2021년 (실적)	2022년 (실적)	2023년 (계획)	2024년 (계획)	합계
계획		103,566	109,572	116,960	121,868	98,253	550,219
실적		102,652	110,061	121,087	-	-	-
집행률(%)		99.1	100.4	103.5	-	-	-
재원별	국비	72,644	81,348	83,172	91,781	71,576	400,521
	지방비	24,770	24,333	30,956	24,560	19,043	123,662
	민자 등 기타	5,239	4,380	6,959	5,527	7,633	29,738
전략별	보건·복지	19,431	20,620	23,312	24,889	21,402	109,654
	교육·문화	10,921	6,586	8,933	5,597	5,329	37,366
	정주여건	63,579	73,473	78,030	81,230	62,503	358,815
	경제활동·일자리	8,722	9,383	10,812	10,152	9,020	48,089

주: 2023년은 삶의 질 시행계획, 2024년은 기본계획 보고서상의 계획예산을 기입함.

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각 연도); 관계부처 합동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2020).

2.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 기본 방향(안)

2.1. 농어촌 삶의 질 관련 여건 변화

□ (인구감소·고령화와 농촌소멸) 인구 감소, 청년 인구 유출, 고령화 심화, 인구 분포의 불균형 현상이 중첩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농촌소멸 우려 제기

○ 빈집과 노후주택이 증가하고, 주민들이 생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지역이 증가함.

- 농어촌 고령화율은 2022년 25.0%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음. 특히 면 지역의 고령화율은 32.4%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위 연령 또한 56.3세에 달함. 면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절벽이 우려됨.

- 읍·면 중 약 40% 지역에서 의원·약국을 이용하기 어렵고, 약 25% 지역에서 외식, 세탁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움(한이철 외, 2022).

○ 귀농어·귀촌인 증가, 고령화 심화, 청년세대 유출, 다문화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주민 구성원이 다변화되면서, 마을 공동체 여건이 크게 변하고 현재와 같은 주민 활동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농어촌 인재 유출) 도·농 간 교육·정주여건 차이, 인재 육성 체계 미흡으로 농어촌 인재 유출이 심화됨.

○ 농어촌의 출산율이 도시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보육·교육 여건 차이,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인해 농어촌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유출되면서 아동·청소년·청년 인구 비율이 감소함.

○ 농어촌에서 자라는 청년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는 인재 육성체계가 미흡함.

- 도시에 거주하는 청년 및 귀농어·귀촌인 뿐만 아니라 기존 농어촌에 거주하는 청년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함.

□ (지방분권 확대) 지자체 간 정책 추진 역량의 격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지방이양되면서 중앙에서 관리 가능한 정책 수단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부처 및 지자체 협업 중심의 삶의 질 정책의 보완 마련이 필요함.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전체 178개 과제 중 2022년 1개 과제가 지방이양되었으며, 2023년 4개 과제가 추가 전환될 예정됨.
- 지자체 차원의 농촌정책 추진 기반을 갖춘 시·군 지역이 차별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분권화 이후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 여건의 편차도 커질 전망이다.
 - 각종 기금(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금, 대중소기업농어업상생협력기금 등)의 효율적이고 중복적이지 않은 사용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지자체의 역량 편차가 큼.
 - 자체적인 정책 추진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지자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와 새로운 역할에 대한 국민 요구 증대

- 국민들은 농어촌에 식량생산 외에도 환경·경관 보전, 여가공간 활용 등 다방면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
 - 도시민 조사 결과, 식량 생산 이외에 농업·농촌의 다원적 역할(환경보전, 여가공간, 문화유산 보전, 경관 보전 등)이 장래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응답함.
 - * 농업·농촌의 중요한 역할 중 다원적 가치 응답 비율: (현재) 48.6% → (미래) 53.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

○ 반면, 농업·농촌이 갖는 미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전반적인 농촌의 삶의 질 여건이 열악한 점이 제약점으로 제시됨.

□ (타 계획과의 연계 강화) 삶의 질 기본계획이 다부처·종합계획임을 고려하여 주요 국가 정책과 삶의 질 기본계획과 연계 강화 필요

○ 주요 국가 정책의 농어촌 관련 키워드는 다음과 같음.

- 지방분권, 지역 주도 개발
- 국토의 생활·정주환경·일자리의 질적 격차 해소
- 정책인구(생활인구, 관계인구 등)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 인구감소에 대응한 인적 자원 육성(청년)
- 농어촌다움(지역다움), 지역의 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발전
- 기후변화, 미세먼지, 난개발 등에 대응한 국민 건강 및 안전 보장

2.2. 기본 방향

○ (삶의 질 고유 아젠다 발굴) 농어촌 삶의 질 관련 고유 아젠다를 발굴하고, 부처에 정책 방향성을 제시함.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유한 비전과 아젠다를 제시하고, 아젠다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부처에 제안하도록 삶의 질 정책 영역의 확장을 고려함.
- 농어촌만의 고유한 농어촌다움, 공동체 활동, 지역사회 활동 등 농어촌의 강점을 중심으로 한 정책·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신규 제도 반영) 새로운 법·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를 고려한 삶의 질 정책 수립이 필요함.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농림어업 발전 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그 외 기타 법률 및 타부처

관련 법과 같은 새로이 변화하는 법·제도와 이를 바탕으로 일어날 변화를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여러 제도적 변화를 바탕으로 기존의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중간지원조직이나 민간 주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있는 변화를 고려해야 함.

○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삶의 질 향상) 부족한 인적 자원과 서비스 공급 역량에 대응하여 ICT·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주거환경과 생활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정책시행 협력체계 강화) 삶의 질 향상 정책·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책시행 협력 체계를 구축·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삶의 질 정책은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므로, 여러 부처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연계를 통해 협력적·통합적인 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함.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부처들이 서로 소통·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도입된 새로운 제도들(농어촌서비스기준, 농어촌 영향평가, 사전협의 등)이 의도한 정책환류 효과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새로이 도입한 제도들의 실질적인 운영과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위한 정책시행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지역 활동 조직·단체가 연계·협력하여 여러 부처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역 조직·단체를 육성함.
- 지역 내 인력·자원·기술·시설을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발전의 성과가 지역 내에서 순환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사업을 발굴·시행하도록 함.

○ (정책·사업의 전달체계 점검·평가) 정책·사업의 성과가 농어촌 주민에게 어떻게 전달·이용되는지 점검·평가할 필요가 있음.

- 시행계획의 경우 도시와 농어촌의 성과지표가 동일함에 따라 농어촌의 성과가 적절하게 평가되지 않음.

- 시설·서비스의 공급 위주의 평가에서 농어촌 주민이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하는지를 중심으로 한 점검·평가체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 (활동 주체 육성) 인구감소·주민구성 다변화, 고령화에 따라 기존 공동체가 약화되고 새로운 리더십 형성은 미흡함. 다변화된 농어촌 구성원의 지역 사회 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주체를 육성해야 함.

- 농어촌 다문화 가정을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 사회 활동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이 각자 활동을 전문화·고도화하고, 지역 내 네트워크/공유 시스템을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하도록 유도함.
- 지역 문제를 공론화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조직화하여 지역 사회 활동 주체로 역할하도록 지원을 확대함.

○ (지방분권 확대 고려) 지방분권 확대 기조에 따라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문화 관련 사업과 농어촌 마을 관련 사업이 삶의 질 정책 체계에서 누락됨.

- 지방이양 사업과 지자체 자체 사업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함.
- 지자체 자체 사업 중 삶의 질 향상 성과가 우수한 과제를 선정하여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 방향

3.1. 개요

- ‘제2차 삶의 질 기본계획(2010-2014)’ 수립 당시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를 신규 도입함.
 - 제2차 삶의 질 기본계획 시기 8개 부문 31개 항목으로 시작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은 2013년 안전 부문과 경찰순찰 항목을 추가하여 9개 부문 32개 항목으로 확대 개편됨.⁶⁾

-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2015-2019)’ 수립 시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한 정책추진에서 벗어나 중앙정부 및 지자체, 민-관 등의 협치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체계 변화를 추구함.
 - 이 시기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기준을 이원화하여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핵심항목(7개 부문 17항목)과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제정·운영하는 선택항목으로 구성·운영함.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2020-2024)’ 수립 시기에 이루어진 2019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개편에서는 정부의 생활SOC 확대 기조를 반영하여 관련 시설 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서비스 이용 여건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접근성 방식을 도입함.
 - 체육시설, 도서관, 생활폐기물 등 3개 항목을 신설하고, 6개 항목(진료, 영유아 보육·교육, 도서관, 초·중등교육, 문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로의 접근성 측정 방식을 적용함.

⁶⁾ 농어촌 지역 범죄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였고,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아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라는 기준 신설

〈표 3-7〉 삶의 질 기본계획 시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변화

구분	부문	항목
제2차 삶의 질 기본계획	1. 주거	1) 주택, 2) 난방, 3) 마을공동시설, 4) 상수도, 5) 하수도
	2. 교통	6) 대중교통, 7) 여객선, 8) 인도
	3. 교육	9) 유치원/초·중교, 10) 고등학교, 11) 폐교, 12) 방과후학교, 13) 의건수련, 14) 평생교육
	4. 보건의료	15) 진료서비스, 16) 순회방문, 17) 의약품 구입
	5. 복지	18) 노인, 19) 청소년, 20) 아동, 21) 영유아, 22) 다문화가족
	6. 응급	23) 응급서비스, 24) 도서·벽지 서비스,
	7. 안전	25) 경찰 순찰, 26) 방법설비 27) 경찰 출동, 28) 소방 출동
	8. 문화	29) 독서, 30)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31)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9. 정보통신	32) 초고속망
▼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1. 보건복지	1) 진료 서비스, 2) 응급 서비스, 3) 노인, 4) 영유아
	2. 교육여건	5) 초·중학교, 6) 평생교육
	3. 정주생활기반	7) 주택, 8) 상수도, 9) 난방, 10) 대중교통, 11) 광대역통합망
	4. 경제활동일자리	12)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
	5. 문화여가	13)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6. 환경경관	14) 하수도
	7. 안전(생활안전)	15) 방법설비, 16) 경찰 순찰, 17) 소방 출동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1. 보건의료·복지	1) 진료, 2) 응급의료, 3) 영유아 보육·교육, 4) 노인복지
	2. 교육·문화	5) 초·중등교육, 6) 평생교육, 7) 문화, 8) 도서관, 9) 체육시설
	3. 정주여건	10) 주택, 11) 상수도, 12) 하수도, 13) 난방, 14) 대중교통, 15) 생활폐기물, 16) 방법설비, 17) 경찰순찰, 18) 소방출동
	4. 경제활동	19)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자료: 저자 작성.

○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치 달성 수준이 전반적으로는 개선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정주 만족도는 저조하여 현실과의 간극이 존재함.

○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제도의 실효성 문제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현행 기준 중 다수 항목이 목표치를 달성한 상황에서 다음 버전의 농어촌서비스기준으로 개편이 요구됨.

- 2025년부터 시행될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 수립을 앞둔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그간 제기되어 온 문제점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함.

〈표 3-8〉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 주요 내용 및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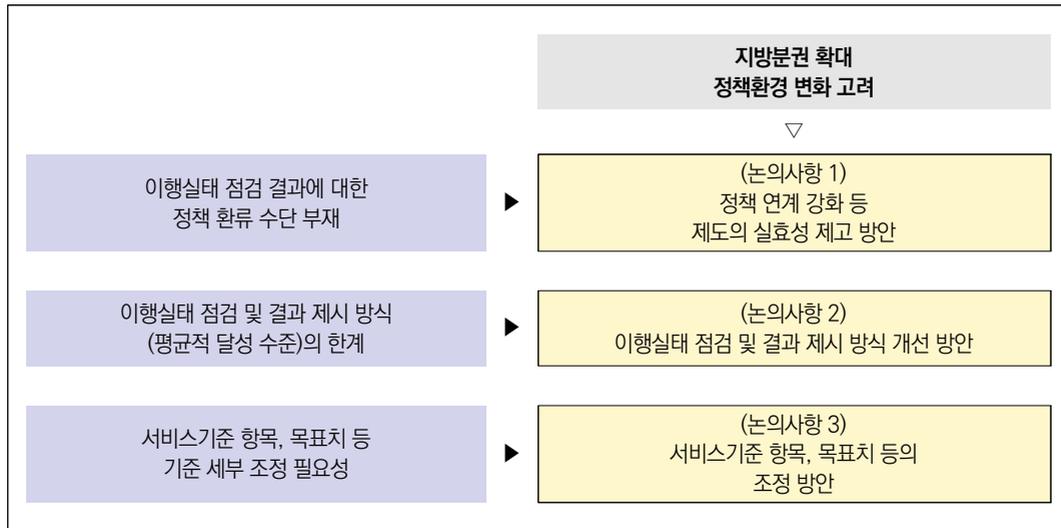
구분	주요 개편 내용	개편(도입) 배경
제2차 기본계획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도입(2010년)	◦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실효성 제고 * 농어촌서비스 기준(영국, 전 국토의 등가치적 생활 조건 확립(독일) 등 외국의 정책 사례 참고
	◦ 안전 부문과 경찰순찰 항목 추가(2013년)	◦ 농어촌 강력 범죄 발생 증가 배경(2019년 대비 2011년 40% 증가)
제3차 기본계획	◦ 중앙정부/지방정부 기준을 이원화하여 운영	◦ 중앙정부-지자체, 민-관 등 협치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체계 변화 추구
제4차 기본계획	◦ 체육시설, 도서관, 생활폐기물 등 생활SOC 관련 항목 신설 ◦ 일부 항목에 대해 서비스접근성 방식의 기준 설정	◦ 생활SOC 확충 기초 반영 ◦ 서비스 이용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접근성 방식 도입 필요성

자료: 저자 작성.

3.2. 주요 논의사항

- (논의사항 1)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대해 정책 환류 또는 정책 연계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으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특히 지방분권 확대 기조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적 정책수단이 축소되고 있는 여건 속에서 지자체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향후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논의사항 2) 각 지역 내 평균적 달성 수준, 전체 지자체의 평균적 달성 수준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현재 방식의 한계에 대해 점검 및 결과 제시 방식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논의사항 3) 시대적 여건 및 정책 환경의 변화, 현행 기준의 달성 수준 등을 고려, 구성 항목과 목표치, 기준 설정 방식 등 기준의 세부 내용에 대한 조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그림 3-3〉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 관련 배경과 논의사항



자료: 저자 작성.

3.3. 제도 개편 방향

3.3.1.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실효성 제고

□ 농식품부 사업 연계를 통한 실효성 강화: 농촌협약과 연계 운영 방안

○ 지자체에서 삶의 질 정책에 대한 인식은 낮지만 농촌공간계획/농촌협약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촌공간계획 제도와 연계할 경우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⁷⁾

- 농촌협약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에서 계획 수립을 위해 복잡하고 방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유용성은 크지 않음. 오히려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중심으로 취약한 부분을 도출하고 농촌협약 사업을 통해 개선해나가는 등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임.
-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촌협약과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하나

⁷⁾ 이 경우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는 지침 마련 등이 요구됨.

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사업 연계, 특히 농식품부 사업을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영향력 제고 측면에서 거버넌스 활성화: 지역의 역할 강화,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를 서비스기준 논의·운영 테이블에 포함

-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향후에는 중앙정부보다 지자체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점차 더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함. 이에 따라 삶의 질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들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시·도지사협의회, 농어촌군수협의회,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협의체와의 연결을 통해 농어촌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
 - 특히 교육 부문의 경우 교육부보다는 시·도교육청(시·도교육감)이 정책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24년도 개편 과정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협의회, 관계부처 등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⁸⁾

3.3.2. 이행실태 점검 및 결과 제시 방식 개선

□ 미달성 세부 실태에 초점을 둔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 서비스 충족(달성) 정도, 즉 달성의 시각이 아니라 오히려 서비스 공백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기준 미달 지역에 대한 구체적 진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
 - 예산, 인력, 기관 수 등 투입지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투입 대비 결과, 타 지역과의 비교 등).

⁸⁾ 관계부처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목표치가 달성하기에 무난한 수준으로 설정되는 경향이 있었음.

□ 각 지역 내 서비스기준 실태를 상세히 제시 가능한 분석 및 결과 제공

○ 향후 지역에서 필요한 경우 서비스기준 관련 현황을 공간분석하여 농촌공간계획 등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함.

- 전문지원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삶의질정책연구센터)은 서비스 수요(인구)와 공급을 매칭하여 공급 수준별로 측정할 수 있는 공간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공간분석 정밀화·고도화를 위한 분석기반을 강화해가고 있음.

- 전국을 대상으로 부문별 서비스시설에 대한 거리조락함수를 구축하고 이에 근거한 시·군별 접근성 분석이 가능함(이동수단별 거리조락함수를 활용하여 소요시간 등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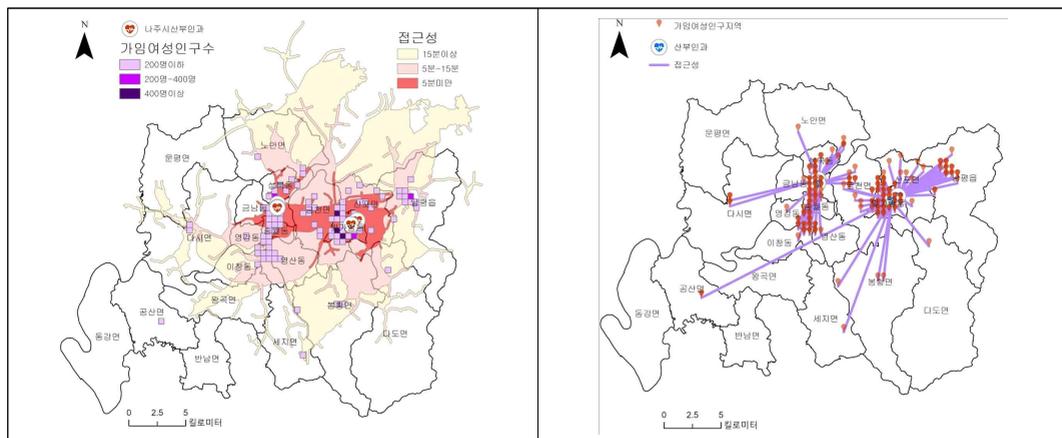
* 관련하여 호주, 캐나다는 수요 대비 공급을 파악(등급화)하는 방식 사용(two step floating catchment area 개념 활용)

○ 지역에서 어떠한 서비스가 어느 정도로 충족 또는 부족한지 확인할 수 있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지도’를 생산·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관련하여 국토모니터링(국토부·국토지리정보원)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점검 결과를 제시할 때 대상그룹을 나누어 제시하는 등 지자체 간 기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림 3-4〉 지역 내 서비스 접근성 취약지역 분석 예시



자료: 저자 작성.

□ 어촌/섬지역 등 특수 공간에 대한 고려

○ 섬/어촌 등 특수 공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섬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19개 항목 중 4개는 점검 자체가 불가하고, 점검 가능한 항목 중에서도 2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미달임.
- 기준을 만족하는 항목의 경우도 섬지역 현실과는 괴리가 있음(예: 하수도 항목은 달성 상태이지만 연안지역이나 섬에서는 대부분 하수처리 시설이 미비해 바다로 흘러 보내면서 악취 등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

○ 서비스기준 전체에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우선적·필수적 부분을 가능한 수준에서 '어촌형 특수 지표'로 제안·반영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음.

- 섬/어촌형 특수 지표를 별도로 두거나, 섬/어촌 지역(비중이 높은 시·군)은 별도 그룹으로 점검하는 등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달성률에 대한 통일된 방식('목표 대비 달성률')의 결과도 제시할 필요

○ 서비스기준 점검 결과가 한눈에 파악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각 부처에서 이해하는 데 혼동이 없도록 모든 항목의 점검 결과를 일괄적으로 '목표 대비 달성률'로 표기하여 제시할 필요도 있음.

3.3.3. 서비스기준 항목 구성 개편

□ 생명, 안전 등 핵심적/필수적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기준을 구성할 필요

○ 서비스기준이 권위와 주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안전, 생명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역할에 대한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함.

-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최근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필수 의료 여건 보장 등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을 보다 강화하고 있음.
- 핵심 기준을 중심으로 서비스기준을 보다 간명하게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환경에 대한 강조

○ 농어업을 현대화·첨단화하는 ICT 시설 등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지표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청년, 귀농어·귀촌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팜 지원, 디지털뉴딜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관련 지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 기반(통신망), 도·농 디지털 격차 등 관련 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최근의 정책 지향점이 귀농어·귀촌인구 및 관계인구/생활인구 확대, 워케이션 등 도·농 간 연계와 이동성을 중시하고 있음.

○ 교육 부문에서는 원격수업, 디지털교과서 등 디지털 기술·인프라를 활용한 교육 방식이 확대되는 상황⁹⁾을 맞고 있음.

9) '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다양하고 질 높은 과목 선택권 측면에서 불리하고 원격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교원 정원을 '30년까지 지속 감축할 계획(기재부 행안부 발표)이 있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전년 대비 7조 원 감액되는 등 지역에서는 교원이 급격히 줄고 결과적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섬과 같은 원격 지역의 경우 원격 교육을 통해 주요 교과목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음.

□ 주민들의 서비스 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급보다는 **향유의 관점에서 서비스 전달에 대한 고민도 중요**

-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달성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소한의 ‘향유’의 관점에서 기준 재설정이 필요함.
 - 향유 관점으로 접근해야 현재의 공급 관점 기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임.
- 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새로운 서비스 전달방식을 발굴·확대해나가는 것 역시 중요한 관점임.
 - 관련하여 과거 농협이 추진한 농어민행복버스(버스를 통한 서비스 전달), 여민동락의 황금마차 사례, 최근 드론을 활용한 치킨 배달서비스 등을 참고할 수 있음.

□ 그 외 항목 구성 관련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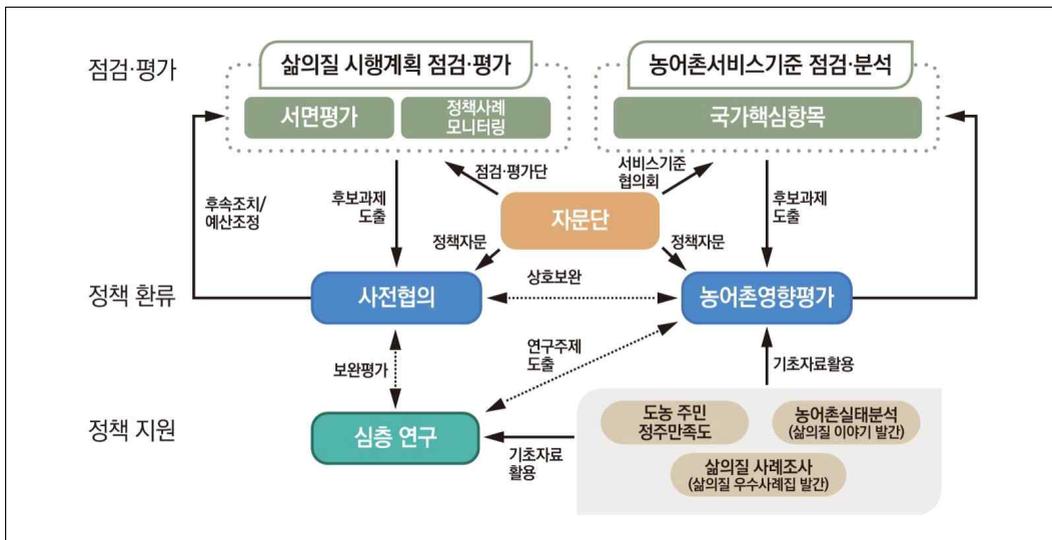
- 귀농어·귀촌 인구, 특히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 주택 공급 관련 역량 등 주거 여건과 관련한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지역 인구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민자 관련 기준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4. 정책 평가 및 환류체계 개편 방향

4.1. 개요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수립 및 법령·지침 개정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삶의 질 정책 성과평가·환류체계의 기본 골격을 형성함.

〈그림 3-5〉 삶의 질 정책 성과평가·환류체계의 열개



자료: 저자 작성.

□ 삶의 질 시행계획 점검·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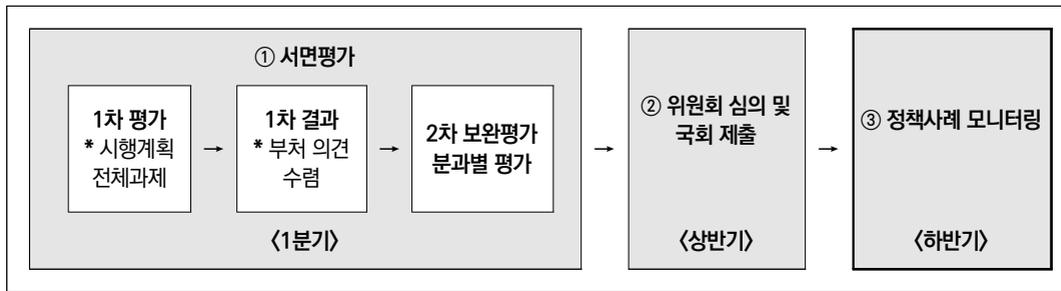
- 정부 부처별로 추진하는 농어촌 삶의 질 시행계획 대상 과제를 대상으로 정책 성과와 실행 과정을 매년 점검·평가하여, 정책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함.
 - 시행계획 점검·평가는 ① 서면평가, ② 정책사례 모니터링으로 구성되며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기간 중 시행계획 점검·평가를 4회(2020~2023년) 실시함.
 - (서면평가) 점검·평가단이 과제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상반기 위원회에 보고함. 또한 농어촌 영향평가, 사전협의 등 삶의 질 정책의 원활한 추진

을 위해 마련된 제도를 뒷받침하거나 부처별 정책 협의·조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됨.

- (정책사례 모니터링) 시행계획에 포함된 과제 중 점검·평가 결과 정책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도출되었거나 정책 시의성이 높은 과제를 별도 선정하여 현장에서의 정책 실행 과정과 성과를 심층 점검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함.

* 정책사례 모니터링은 전문지원기관인 삶의질정책연구센터에서 직접 수행

〈그림 3-6〉 시행계획 점검·평가 운영 절차



자료: 정문수 외(2022).

○ 제1~4차 삶의 질 기본계획 기간 동안 정책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점검·평가 방식을 개선해왔음.

- (제1차 삶의 질 기본계획) 위원회에 별도의 전문평가단을 두고, 전체 사업에서 11개 항목의 22개 지표를 통해 추진을 실적 평가함.
- (제2차 삶의 질 기본계획) 정책군 단위의 심층평가를 도입하고, 관련성이 높은 사업들을 정책군으로 구성하여 매년 2개 정책군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
-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매년 기본계획 전체 사업의 1/3씩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관계부처별 과제 이행의 충실성과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등을 점검하기 위한 서면평가·지역평가를 병행함.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매년 전체 사업에 대한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역평가를 간소화한 정책사례 모니터링을 도입함.

〈그림 3-7〉 제1~4차 삶의 질 기본계획 시기별 정책 점검·평가 방식의 변화



자료: 정문수 외(202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 시행계획 점검·평가 추진 결과, 서면평가 결과의 신뢰도 및 정책사례 모니터링 결과의 활용도 제고 등 개선 방안 필요성이 제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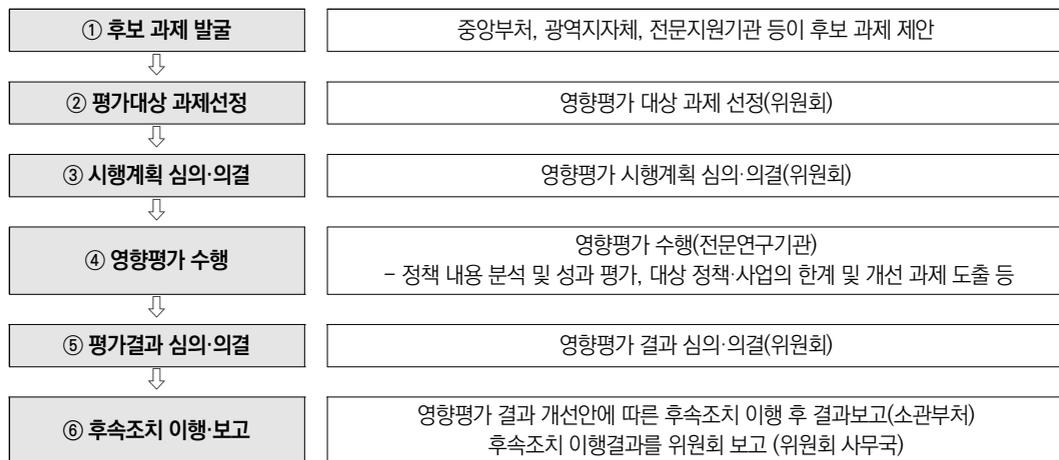
- (서면평가) 시행계획의 과제당 3명의 평가단 평가 결과 합산 방식으로 이루어져, 향후 평가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함.
- (정책사례 모니터링) 서면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한 과제를 대상 과제 우선 순위로 둔다는 점에서 사업 전후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현장 조사가 수월하지 않은 과제에 대한 평가 방안이 필요하며, 현행 모니터링 결과의 활용도가 저조함.

○ 삶의 질 정책에 대한 관련 제도인 사전협의제도와 연동 방안을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삶의 질 정책의 개선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함.

□ 농어촌 영향평가

- 정부 부처의 계획·정책·사업 등이 농어촌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평가하여 점검·보완하도록 조치하기 위한 정책조정제도로서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도입됨.
 - 제도의 도입과 함께 2020년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매년 2개 이상의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 농어촌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담당부처의 조치 사항을 지속 점검 및 보완 요청 중이나 현행으로서는 권고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실제 정책 개선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발생함.

〈그림 3-8〉 농어촌 영향평가 절차(운영 지침 제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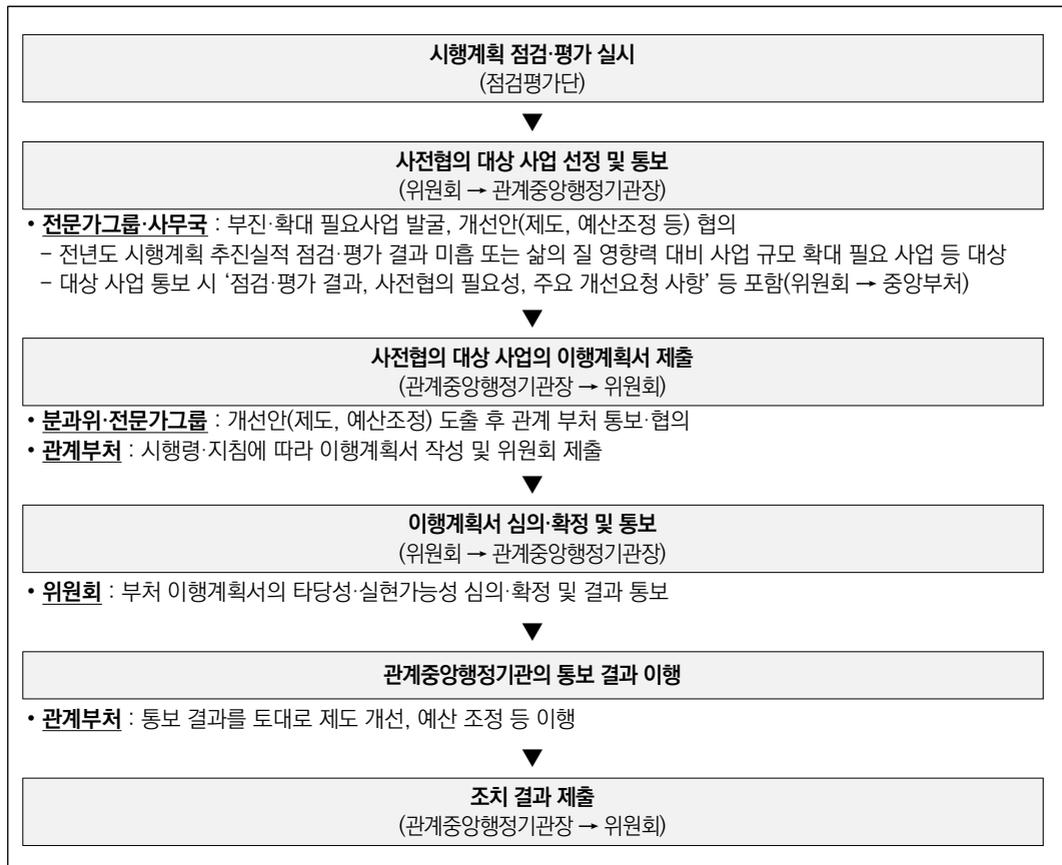


자료: 농어촌 영향평가 운영 지침 [별표 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사전협의

- 시행계획 사업 중 성과가 미흡하거나 삶의 질 기여도가 높은 정책사업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 도입함.
 - 삶의 질 위원회가 사전협의 대상 사업을 심의·선정하여 소관 부처에 통보하고, 부처는 해당 사업 개선을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 및 후속 조치를 추진하도록 유도함.
 - * 2021년 「농어업인삶의질법」 제9조의2(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이행계획서 제출 등)을 신설하고, 사전협의의 법적 근거 마련

〈그림 3-9〉 사전협의 추진 절차(안)



자료: 김광선 외(202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4.2. 주요 논의 사항

□ 삶의 질 시행계획 점검·평가

○ 시행계획 점검·평가 대상 과제의 조정이 필요함.

- 지방이양 및 교육자치 확대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관리가 감소하고 있음.
 -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178개 전체 과제 중 2023년까지 5개 과제가 지방이양
- 국정과제, 중앙부처 단위의 타 정책 계획, 또는 지자체 고유의 정책까지 놓여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평가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음.

○ 농어촌 삶의 질 핵심과제 대상의 정책사례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체계 강화 방안이 요구됨.

- 현행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은 핵심과제 대상의 연차별 달성목표치 중심의 정책 성과 파악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삶의 질 핵심과제(30~40개 선별) 대상으로, 부처 차원의 정책효과를 점검하는 주민 수요·만족도 조사 수행 내용을 반영하거나 삶의 질 위원회 차원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대상(예시): 보건·복지 부문의 지역거점 공공병원·보건기관, 응급의료기관, 분만의료기관 이용 주민 등

- 핵심과제를 대상으로 정책사례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현장실무기관의 정책 실행·내용·추진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조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

* 정책사례 모니터링을 지방분권 추세에 대응한 지자체, 단체, 공사 등 정책 실무기관의 현장 추진 실태 점검 도구로 활용

* 향후 정책사례 모니터링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전문지원기관의 인력구조 강화 필요

□ 농어촌 영향평가

○ 영향평가를 통한 조치 요구가 권고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실제 담당부처로부터 정책 개선을 유도하는 데 한계를 지님.

- 2021년과 2022년 수행된 4건의 농어촌 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처 협의를 진행함. 그러나 위원회의 조치 요구에 따라 개선조치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담당 부처별로 상이함.

* 농어촌 통학 여건 개선(교육부) - 수용 후 반영

* 농어촌·도시형 교통모델 개선(농식품부·국토부) - 수용하였으나, 담당자 변경 이후 미반영

* 분만의료 도농간 격차 해소(보건복지부) - 장기적 관점에서 반영 수용

* 농어촌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보건복지부, 농식품부) - 수용 후 미반영

- 영향평가를 통한 후속 조치 이행 의무화 방안 또는 인센티브를 이용한 이행 유도 방안 마련이 요구됨.

〈표 3-9〉 현행 농어촌 영향평가의 틀

영향평가 항목		영향평가 내용
실태 분석		농어촌 실태 분석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해당 항목 지표 분석
대상 정책·사업 현황		정책·사업의 목적 및 내용 예산 계획 및 집행 세부 달성 목표
농어촌 영향평가의 틀 및 기준		평가의 관점, 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 기준(평가지표 등)
내용 분석 및 성과 평가	정책 목표 및 수단 간 적절성 및 타당성	정책 목표 설정의 적절성 정책 목표 대비 수단의 타당성
	정책 성과의 투입·산출 효과	예산 투입 현황
		정책 산출 분석
		정책 효과 분석
도·농간 정책 성과 차이	도·농간 정책 성과 분석 및 비교	
대상 정책·사업의 한계 및 개선 과제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향후 정책 과제

자료: '농어업인삶의질법' 제4조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현행 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여건 개선을 도출할 수 있는 평가에 어려움이 있음.

- 농어촌 영향평가 대상은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지침」에 의해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바탕으로 한 관련 사업 20개에 한정됨.

* 현행 선정 기준에 따르면 일부 사업은 도·농 간 차별적 영향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 사업이 포함

- 향후 농어촌 영향평가 대상을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관련하여 제시되는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나아가 삶의 질 기본계획의 사업을 넘어 도·농 지역의 영향을 파악하고, 농어촌 지역의 여건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사전협의

○ 처음으로 도입·시행되는 제도로써 관련 제도의 일정과 연계성을 갖춘 수행에 어려움을 겪음.

- 시행계획 점검·평가, 삶의 질 위원회 개최, 타 부처 사업의 계획 및 예산 수립 등 한 해 단위에서 관련 제도의 일정과 연계하여 진행되어야 하지만 일정이 맞지 않음.

* (문제) 당해연도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사전협의를 통해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개시 전(6월 전)에 “시행계획 점검평가 - 사전협의과제 도출 - 사전협의 관련 심층연구 - 부처 이행계획서 작성 - 위원회에 (사전협의 반영된) 시행계획 보고”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사전협의제도 운영기반 확립을 위해 작동 가능한 절차와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전협의 대상 과제를 후보 과제 pool로 관리하여, ① 과거 점검·평가 결과의 변화추세, ② 외부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의견 수렴, ③ 영향평가 수행 등을 통한 부처 협의, ④ 삶의 질 심층연구와 기존 연구 결과 등을 다층적으로 참고하여 후보 과제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시행계획 점검·평가 기간을 단축(3월)하고, 위원회(5~6월) 전 이행계획서 작성 및 사전협의를 위한 심층연구와 부처 협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 필요 시 영향평가 대상 정책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연계 추진

○ 사업 부처의 사전협의를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 부족으로 사전협의 대상 사업 선정에 어려움이 발생함.

-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미흡 평가를 받은 과제보다 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적극 추진하려는 의지가 높은 과제의 시너지를 높이는 방식의 제도운영을 고려할 수 있음.

* 시행계획 점검·평가 방식과 연동이 필수적으로, 농식품부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이 필요

전문가 포럼 운영 결과

총괄반 1차 전문가 포럼 결과

○ 회의 개요

- 일시: 2023. 10. 27.
- 장소: 오송&세종 컨퍼런스센터
- 참석자: 한이철, 송미령, 성주인, 이명기, 권인혜, 정문수, 민경찬, 나현수, 김민석(이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진희 사무관(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홍길수 사무관(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임정우 사무관(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이영성 교수(서울대학교), 김동진 박사, 박세경 박사(이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세길 박사(전북연구원), 김상범 박사(농촌진흥청), 이상규 실장, 윤영준 연구원, 민재한 연구원, 이세진 연구원(이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요 회의 내용

○ 박진희 사무관(농식품부)

- 내년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까지 마무리되면 삶의 질 정책이 20년 동안 추진된 것이기에, 20년간 삶의 질 정책의 성과와 영향 등을 분석·정리한 뒤, 이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는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지 방향 설정을 해야 함.
-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소멸 문제인데, 이런 것들에 대응해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면 함.

○ 송미령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특위가 대통령 자문기구라 하더라도 한시적이기 때문에, 삶의 질 업무를 농특위로 옮기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우려 의견도 있음. 제5차 기본계획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음.

- 삶의 질 정책은 복지부와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보건사회연구원에 그러한 차원에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함.

○ 김동진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농촌 지역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의사 인력 확대 이슈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하지만 일본에서도 앞서 동일한 목적으로 의사 인력이 크게 확대가 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정책을 재검토하여 지역의사제라는 할당제를 만들었음. 일본의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를 배출하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고 한편으로는 지방의 의과대학을 나온 자에 대해 할당하여 장학금을 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현재 어느정도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음(예컨대 6년간 장학금을 주고 9년간 의무 복무, 전체 의사 중 70%는 의무 복무 후에도 지역에 정착).
- 일본의 사례를 볼 때, 의사 총량을 늘리고 수도권 의사가 지방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일종의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음. 그 이유는 도시에서 망하더라도 시골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기대, 기본적인 여건이 열악한 시골에서 살기 원치 않는 인식이 있기 때문임. 따라서 지역에 의료 인력을 늘리는 것 역시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시행계획 점검·평가를 실시하면 평가지표와 예산에서 대부분 100%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매해 정주 만족도와 같은 조사 결과를 보면 의료 부분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괴리의 문제가 발생함. 계획의 성과 달성 여부와 정책 성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삶의 질 정책 20년간 미흡했던 정책 조정 기능을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가능하도록 노력이 필요함.

○ 홍길수 사무관(해양수산부)

- 해수부 사업의 정책의 방향은 어촌 연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삶의 질 측면에서 도서 지역이 더 취약성을 띠고 있음. 섬 지역은 모든 측면에서 농촌 지역보다 열악함.
- 반농반어를 하는 지역도 많지만 농촌 지역과는 생활 방식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표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으며, 현재 KMI에서 많은 고민을 하며 작업해주고 계심.
- 어촌 분야의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어촌 뉴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좋은 편임. 1차 사업이 기초적인 인프라 개선이었다면 2차로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그 외 친환경 사업에 대한 논의도 확대되고 있음.

○ 성주인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책 여건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제도적 변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그 외 기타 법률 및 타부처 관련 법과 같은 새로이 변화하는 법·제도와 이를 바탕으로 일어날 변화를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여러 제도적 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중간지원 조직이나 민간 주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있는 변화를 고려해야 함.
- 베이비부머 이상 연령대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순유입이 지속되는 경향, 농어촌 지역에서 창업 등의 기회를 찾아 청년들이 유입되는 현상 등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함. 농촌 지역 청년에 대한 기존 정책이 청년농 육성에 집중되어있었다고 한다면, 반농반 X 등 다양한 생활 양식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이 고민될 필요가 있음.
- 5개년 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때마다 도입된 새로운 제도들(농어촌 서비스기준, 농어촌 영향평가, 사전협의제도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새로이 도입한 제도들의 한계를 고려하여 핵심적인 것 위주로 하며 정책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박세경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삶의 질과 관련된 최근의 사회적 화두는 돌봄이라고 할 수 있음. 고령층에 대한 돌봄뿐 아니라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돌봄의 대상이자 돌봄의 제공자로서 지역 사회에서 기능한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번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사회서비스 확충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 주체뿐 아니라 누구나 서비스 제공자로 참여할 수 있게끔 다 변화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농어촌 지역에서 돌봄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인프라나 프로그램뿐 아니라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함. 서비스 제공 인력을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지방 정부 간 역량 차이가 드러나곤 하는데, 서비스 확충을 위한 다양한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중앙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부처 간 소통·협력 체계가 필요함.
- 현행 농어촌 지역의 돌봄 사업은 고령 주민을 위한 시설 구축에 편중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여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함.

- 농어촌 지역에서는 특히 다문화 주민의 이슈가 더 중요하게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에 대한 돌봄 정책, 단순히 복지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함.
- 현재 정부에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민간 참여 유도 등)는 아직 이행 수단이 마땅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수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민간 주체가 농어촌 지역 돌봄 서비스 제공자로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국가가 책임지는 투트랙 전략도 논의되고 있음.
-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도 농어촌 지역, 특히 도서지역에 대한 기피가 나타남.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그에 대한 보상체계를 생각하면 사실상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기대는 편인데, 현실적인 사후 설계가 필요함.

○ 이영성 교수(서울대학교)

-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제조업 종사자 수 추이를 보면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금속 가공 등 비중이 높는데, 도시를 뺀 지역의 도 지역에 높은 비율로 있음. 자동차 산업과 IT 전자 부품 관련 연계 산업을 농어촌 지역에서 일자리 활성화로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재생에너지나 스마트팜, 미래식량과 관련된 바이오산업 등 농어촌 지역에 관한 먹거리산업 가능성은 높으며, 숫자 자체는 작을지라도 큰 산업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

○ 이명기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향후 제5차 삶의 질 정책에서는 각 전략 부문, 정책, 핵심과제 등에서 '누가 주체로 수행해야 할 것인가'라는 점이 강조되었으면 함. 현재 농어촌 지역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청년, 또는 정책인구(관계인구, 생활인구 등)를 육성해서 지역에서 역할 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함.
- 정주 만족도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방식, 즉 도시와 비교하고 도시와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맞추어가려는 방향에서 더 나아가, 도시가 가질 수 없는 농촌다움, 농촌성을 부각하는 정주 여건과 이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책 목표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함. 단편적으로는 농촌의 강점을 드러내는 조사 문항을 발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 약 20년 간 삶의 질 정책이 추진되면서 내걸었던 교육 여건 향상, 정주 여건 향상, 경제적 여건 향상 등 좁은 틀에서 벗어나서 결국 농어업인에 대한 복지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5년, 20년 앞의 미래를 담은 키워드를 발굴했으면 함.

○ 송미령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삶의 질 특별법이 제정될 초창기에 ‘농어업인 등’이라고 표현되었으나 결국 국민 전체의 복지 증진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들을 담다 보니 현재 시점에서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음.
- 농식품부에서는 국민 전체의 보편적인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이 불충분하니 타부처와의 협력이 불가피하고, 사무국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많음. 사무국이 농식품부에서 농특위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부처 간 협업과 연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잘 검토해야 함.

○ 장세길 박사(전북연구원)

- 문화 측면에서 지난 20년 간의 성과를 보자면 농어촌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활동이 어느정도 정착되었고, 문화 활동의 향유율도 도시 지역과의 격차가 완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하지만 이제 다수의 문화 관련 사업들이 지방이양되고 문화 예산이 지방으로 넘어가면서 지자체에서 문화 쪽 지원 사업이 줄어들 수 있는 우려가 있음. 지방이양된 사업들 역시 기본계획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는데(지방이양되는 사업을 담지 않는다면 문체부 사업이 많이 남지 않을 것이므로),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도 고민해야 함.
- 현재까지는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 문화 분야 사업이 농어촌 지역에서도 시행되는 문체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기본계획에 담긴 측면이 있음. 농식품부 자체적으로든 문체부를 통하여서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농촌과 도시 지역을 포괄하는 사업의 경우 선정 기준이나 성과지표를 구분해야 하는데 현행으로는 동일하게 통일시키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서의 성과 측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키워드로 두 가지를 더 언급하자면 이전에는 다문화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이민사회’로 가고 있어 기존의 다문화가족 정책과 다른 방식의 사업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며 여가 시간을 보낼 공간으로서 농어촌으로서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함.

○ 이상규 실장(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15년부터 삶의 질 정책 지원 업무에 참여한 KMI도 작년까지는 섬 위주의 연구와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어촌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업을 확대하고, 전국단위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음.

- 현재까지 삶의 질 기본계획은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유관 사업을 취합해서 평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이 한계라고 생각함. 위원회가 이관되고 향후 삶의 질 위원회만의 고유한 아젠다를 발굴해서 각 부처에 방향성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함.
- 어촌 지역은 농촌 지역에 비해 산업 재해율이 높고 전문인력이 제한적이며, 여러 물리적 인 제한 때문에 제도가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KMI에서도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오고 있으나 수월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많음. 앞으로의 삶의 질 추진체계에서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규제를 조절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까지 정책 전달력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농촌과 어촌의 생활 패턴은 상당 부분 상이하고, 여러 삶의 질 여건이나 그에 대한 만족도도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체적인 방향성은 통일하되 농촌과 어촌 각 지역의 세부 특성을 반영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김상범 박사(농촌진흥청)

- 농민들이 생각하는 삶의 질과 부처에서 생각하는 삶의 질 격차가 크게 나타남. 현재 삶의 질 계획에 따른 정책이 수립·전달되는 과정에서의 미흡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함.
- 제5차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 사업에서 5년 뒤, 또는 사업의 말미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화하고, 그와 관련된 사업이나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부처에 요구할 수 있는 체계가 되었으면 함.

○ 송미령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지금은 삶의 질 정책의 지난 20년에서 향후 20년으로 향하는 과도기라고 생각함. 앞으로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실행력을 갖춘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함.

총괄반 2차 전문가 포럼 결과

○ 회의 개요

- 일시: 2023. 11. 17.
- 장소: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
- 참석자: 한이철, 송미령, 성주인, 심재현, 권인혜, 정문수, 정민주, 민경찬, 나현수, 김민석, 유서영, 이진, 손경민(이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진희 사무관(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홍길수 사무관(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임정우 사무관(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이상규 실장(한국해양수산개발원), 권순형 박사(한국교육개발원), 박창석 박사(한국환경연구원), 김용욱 박사(전남연구원)

○ 김용욱 박사(전남연구원)

- 지자체, 즉 도와 시군은 제도적 측면에서 예산액이 큰 사업을 우선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외의 제도나 사업에는 무관심한 경향이 있음. 또한 삶의 질 정책에 대한 관심도도 적음.
- 반면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에는 지자체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점에 착안하여 향후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두 제도와 잘 연계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농촌공간계획의 성과지표로 서비스기준의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한다는 식으로 지침이 생긴다면 농촌 지역에서 서비스기준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민간서비스 포함 여부) 기존의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중에도 병원이나 대중교통(버스) 등 민간 부분의 서비스 공급에 관한 내용이 어느정도 녹아있음. 그렇다면 민간과 공공을 구분하여 민간의 영역을 포함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어촌 주민에게 어떠한 서비스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필요한지 강조하고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민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지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함.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지표 달성도와 삶의 질 정책 평가의 각종 수치 사이 괴리에 관해) 제 4차 기본계획을 준비하던 당시에 과정상 미흡했던 탓이 있음. 각 항목의 전면적인 검토와 개선보다는 당시 사무국에서 새로운 기본계획의 서비스기준에 들어갈 새로운 내용을 요청한 바가 있어, 정책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생활SOC 개념에서 착안하여 접근성 측정 항목을 개발하게 되었고, 촉박한 일정상 관련 연구나 종합적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측정 방식이나 기준을 설정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었음.
- 또한 설정한 각 기준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양호한 결과가 측정되기 용이하도록) 수정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고, 이러한 피드백을 수렴하다보니 (이미 첫 해에 기준을 달성해버리

는) 무난한 수치들로 설정된 부분이 있음.

- 이렇게 제4차 기본계획의 서비스기준 준비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들을 감안하여, 이번 개편 과정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최종안을 도출하고 위원회 검토뿐 아니라 각 부처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새로운 지표에 대한 아이디어) 최근 전라남도를 비롯해 농촌 지역에서 귀촌인이나 청년을 유입하는데 주택에 대한 사회·정책적인 관심이 높음. 추후 서비스기준에 새로운 지표로서 지역의 주거 공급 역량 등 주택과 관련한 지표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음.

○ 송미령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기존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정의에 비추어보자면 국가 어디에 있는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의미함. 향후 민간서비스에 대한 의미를 포함시킨다면 기존의 서비스기준의 정의, 개념의 변경(가령 공공 서비스라는 표현 대신 '필수 서비스' 또는 '핵심 서비스' 등)까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함.

○ 심재현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삶의질센터에서 작년부터 전국 단위 웬만한 서비스시설에 대한 거리조각 함수를 만들어 두었고, 지역별로 측정이 가능함. 예컨대, 특정 지역에서 초등학교를 이용할 때 이용 수단별 거리 조각 함수를 선택하여 걸리는 시간 등을 계산할 수 있음.
- 호주나 캐나다에서는 two step floating catchment area 개념을 활용해 수요 대비 공급을 파악해 등급을 매기는 방식이 있음.
- 삶의 질 센터 내에서도 향후 수요(인구)와 서비스 공급을 겹쳐서 서비스 공급 수준을 단계별로 측정할 수 있도록 현재 GIS 시스템 수준은 갖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예컨대 각 지역에서 필요한 경우 자신들의 지역 현황을 지도상에서 파악해서 공간계획 등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도화시키면 좋을 것이라 생각함.
- 서비스기준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음.

○ 권순형 박사(한국교육개발원)

- (지방분권 확대 관련) 교육부에서는 2010년 4월 15일부터 각 시·도 교육청으로 대부분의 권한을 이양해오고 있기 때문에, 교육 분야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인 교육부보다 시·도 교육청 역할이 더 강하고, 교육부는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임.

- 교육 부문의 사업 중 향후 고려 또는 준비해야 할 것은 농어촌 지역에서 2025년부터 전면 확대 실시되는 고교학점제임.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맞추어 다양한 과목을 조합해서 듣는데,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만큼 과목 선택권이 확보되지 않고, 작은 학교에서는 원격 수업으로 들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불리함.
- 최근에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서 늘봄 사업과 학교통합지원센터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 그리고 5차 기본계획 기간인 2029년까지는 일선 학교에서 종이 교과서가 태블릿 등을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로 교체될 것이라 예상함.
- 기재부와 행안부 등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에는 교원 정원을 2030년까지 줄여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 전년 대비 7조 원 줄었음. 지방에서는 교원이 더 급격하게 줄 것이고 결과적으로 향후 농어촌 작은학교의 학교 통폐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문제에 대응한 민간 부문의 서비스의 도입, 예를 들어 교육 바우처를 공급하여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기재부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현행 초·중등교육법 또는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지 졸업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우처(민간)를 통해 학습한 아이들은 검정고시를 봐야 함.
- 그렇지만 일본(쿠마모토, 홋카이도)이나 호주 등 해외에도 정규 교원 자격을 갖춘 교사가 원격 교육을 하는 사례가 있음. 우리나라는 신안군에서 2012, 2013년경 섬에 있는 학교끼리 네트워크 화상 수업을 진행한 사례가 있지만, 현재는 전무한 상황임. 섬처럼 원격지역의 경우 주요 교과목이라도 이런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다고 생각함.
- 우리나라는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두고 있어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이 분리되어있음. 현재 흐름대로 중앙부처의 정책을 지방으로 이양한다고 할 때 보통 시·군·구가 중심이 되는데, 기초 단위 교육지원청은 하급 교육행정기관의 역할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교육 분야 정책에 대한 권한은 광역 지자체의 교육감이 가지고 있음. 결과적으로 시·군·구가 해당 교육지원청과 어떠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십 구성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 있음.
- 또한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은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사무 자체는 시·도 교육감에게 있는 상태임. 따라서 삶의질위원회를 거쳐 총리가 교육 정책에 대해서 교육부에 요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을 것이라 생각함. 현재 강릉시의 우수한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통학수단 관련 정책도 도 교육감 권한으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교육부와는 관련이 없는 사업임.

- (거버넌스의 문제) 교육부 대신 교육 부문의 거버넌스 주체를 누구로 둘 것이냐를 고민해보면, 실제 현장에서 실행력을 가지고 있는 17개 시도교육감협의체를 생각해볼 수 있음.
- 농어촌 학교에서 통학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지역에서 통학버스는 ①학교가 소유하고 자체적으로 있는 경우, ②교육지원청이 지역 공영으로 돌리는 경우, ③임차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등 세 가지로 운영되고 있음.
- 학교가 버스를 가지고 있을 경우 주무관과 안전원이 배치되기 때문에 통학 안전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교통 여건의 장점으로 새로운 학생이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버스 한 대에 태울 수 있는 학생 수 정원에 한계가 있음.
- 강릉시의 경우처럼 교육지원청에서 버스 노선도를 정하고 공영으로 돌리는 경우가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음.
- 농어촌 지역 고령층 또는 일반 주민이 이용하는 버스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나, 버스 구조나 안전 기준이 학생 버스와는 상이하다는 걸림돌이 있음.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통해 버스 운영의 효율화와 각자의 안전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일부 지자체처럼 민간 위탁하여 임차 버스를 통학버스로 하는 경우 통학 접근성은 개선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전 문제를 학교에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할 우려가 있음. 결국 학생들의 통학 환경을 안전하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통학 시간을 줄일 것인지의 문제에서 고민이 필요함.

○ 송미령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중앙부처뿐 아니라 실제로 실행력을 가진 협의체(시도지사 협의회, 교육감협의체, 군수협의회 등)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향후 5차 기본계획에서 반영하면 실질적인 영향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음.

○ 홍길수 사무관(해양수산부)

- 논의의 대부분이 농어촌에서 도시를 향하는 서비스 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반대로 도시에서 농어촌에서 향하는 지표가 필요하다고 봄(드론 치킨, 여민동락 황금마차 사례 등).
- 어촌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등 외국인 인력과 관련한 문제가 두드러지는데, 주민과 외국인이 함께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데 아직 불편함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향후 서비스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면 함.

- 또한 향후 점점 더 고령화, 여성화되어가는 농어촌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농어업을 도와줄 수 있는 ICT 시설 등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지표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응급의료 등 현재 농어촌서비스기준에서 사용하는 지표 중 몇몇은 어촌, 특히 섬 지역에서 거의 무의미한 지표가 있음. 기상 악화로 인한 문제(예: 섬에서 헬기를 타고 응급의료 시설로 갔는데 착륙장이 없다 등)에 닥쳤을 때처럼 극한의 상황, 섬과 같이 특수한 공간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특수 지표의 필요성을 절감함(예: 응급의료 서비스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 측정이 아니라, 인근 시·군 단위에서 응급의료센터 내에 착륙장이 있는가 등).
- 하지만 유인도는 행안부, 무인도는 해수부 소관으로 구분되어 행안부 소관인 섬진흥원과의 연계가 필요한 점, 섬 진흥법에 따른 도서 지역에 대한 구분 등 섬 지역에 대해서는 해수부 자체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에 복잡한 요소들이 있음.

○ 송미령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해수부에서 전반부에 말씀하신 서비스 전달 관련, 농협이 했었던 농어민 행복버스(버스를 통한 서비스 전달)의 사례처럼, 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전달을 발굴하고 확장시키는 것도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함.

○ 이상규 실장(한국해양수산개발원)

- KMI에서도 매년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측정하고 있는데, 섬 지역에서는 현행 19개 항목 중 4개는 점검 자체가 불가하고, 나머지 항목 중에서도 2개를 제외하고 그 외는 미달함.
- 만족하고 있는 항목도 지역의 여건 현실과 동떨어짐. 예컨대 하수도의 경우 인구 대비 측정하기 때문에 측정값 자체는 달성상태이나, 연안 지역이나 섬을 가면 대부분 하수처리 시설이 미비하고 바다로 흘러보내는 상황이라 악취 등 문제 발생함.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있으나 해수부 소관이 아니라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임.
- 교육 분야 지표도, 섬 지역은 사람 자체가 없기 때문에 통학버스가 다니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고, 어촌은 동선이 길기 때문에 해당 지표가 무의미함. 거리 측정 지표의 경우도, 자가용에 대한 거리 측정을 보면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음.
- 연안 지역의 입장에서는 지표와 관련하여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문제에 고민을 하고 있으며, 어촌형 지표를 개발하려고 고민하고 있음.
- 어촌의 인구소멸은 2015년경부터 심화되고 있고, 해수부에서도 정책적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한 요구가 잘 반영되지 않고 요원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와 고민이 많음.

○ 송미령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어촌형 지표를 개발한다면 전체를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담기는 힘들겠지만, 어촌형 특수 지표로 필수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가용한 수준에서 제안해 반영한다면 좋을 것 같음.

○ 성주인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 결과를 연계하여 실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항상 숙제였음.
- 현재의 농촌협약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에서 IPA분석 등 대동소이하게 많은 분석과 계획을 제시하지만 실질적인 유의미성은 떨어지는 실정임. 그렇다면 오히려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중심으로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등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면 좋겠다고 생각함.
-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실제 서비스기준을 측정한 이후, 관련해서 사업을 연계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임. 농특위에서 서비스기준을 측정하고 작은 규모의 사업이라도 대상 사업에 반영·연결해주는 역할을 고민해주었으면 함.
- 서비스기준을 충족하는 시각이 아니라 반대로 서비스 공백 지역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현행 농촌협약 제도에서는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목표가 사업지가 선정되는 과정에서만 참고하게 됨. 지자체에서 처음 목표를 제시하고 사업 후 그것을 달성했는지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 등, 실제적으로 사업 후 달성에도 신경 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유럽의 유사 제도에는 중간 평가와 그에 따른 절차들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체계가 없다는 점에서 고민이 필요함.
- (김용욱 박사가 이야기한 바) 4차 기본계획 준비 시 생활SOC 관련 내용은 도시 중심적인 내용이었음. 앞서 이야기나온 바처럼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기준이 달성되었다고 나오지만, 사실은 항목 달성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달성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함.

○ 홍길수 사무관(해양수산부)

- 농식품부의 농촌협약과 같이 지자체와 협력이 가능한 수산 분야 사업은 어촌뉴딜 300 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으로 보임. 위 사업은 지자체에서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관심이 많은 사업임. 다만, 사업 선정 이후 집행률 등 부진이 발생하고 있어 신규사업 선정 시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와 집행 노력도를 평가에 반영하여 신규사업을 선정하고 있음.

○ 박창석 박사(한국환경연구원)

- 상하수도망 사업은 지자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항이 없는 상황이라 의미가 크지 않다고 생각함. 다만 상하수도망에 서비스를 받는 사람 수와 최종 공급의 관리는 환경부에서 함.
- 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를 사업 선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지원을 하게 됨. 이것이 상하수도망 사업의 한계로서 지역으로 갈수록 예산 투입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 고민임. 다시 말해 도시 대비 비용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고, 더군다나 인구가 줄어들면서 상하수도망이나 시설 유지 문제도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듦. 상하수도망 유지 비용에 대한 부담, 농촌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유지에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함. 서비스 품질의 문제도 있지만, 서비스 유지의 문제도 고민으로 남아있음.
- 농촌 지역에서 폐기물 처리 기준은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최근 생활폐기물처리장 수거를 개선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환경공단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행인데, 환경공단은 시·군으로 떨어뜨리고 싶어하나 시·군 지역은 받기 꺼려하고 있음.
- 향후에는 갈수록 중앙정부보다 지자체의 관점, 공급의 관점에서 유지 관리의 관점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여겨짐.
- 농어촌서비스기준이 권위와 주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최소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생명 등 국가가 책임지는 부분과 관련한 지표가 들어가야 하고, 달성목표적 지표가 아니라 최소한의 향유 관점에서 개념을 정의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함. 향유의 관점으로 개념을 잡아야 현재의 공급 관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국토모니터링처럼 다양한 서비스 공급에 대한 지도를 만들어 지역에서 어떠한 서비스가 충족되거나 부족한지 확인해볼 수 있는 일종의 '농촌 서비스 지도'를 구축하여 관리하였으면 좋을 것 같음.

○ 심재현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서비스기준, 영향평가, 사전협의제도를 연동해서 강제력을 높여보려고 했으나 현재까지 잘 안되고 있음. 이행력을 높이려는 제도적 장치는 만들지만 번번히 부처의 반발 또는 불이행으로 고민임.

○ 임정우 사무관(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지자체에서는 삶의 질 기본계획보다 농발계획(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많음. 지자체에서는 삶의 질과 관련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느꼈음. 삶의 질 계획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인데 농촌협약과 관련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과 농어촌영향평가, 사전협의제도를 내실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현재 청년 및 귀농·귀촌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팜 지원, 디지털뉴딜 등 추진하고 있어, 관련 지표를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음.
- 슬레이트지붕 철거가 아닌 개량에는 큰 비중이 자부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함. 향후 지표 설정 방식에 참고해주었으면 함.

○ 송미령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 5G 커버리지는 민간의 영역이고 정부 정책을 통해서는 이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농촌 주민, 농촌 지역에서 요구가 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임.

○ 박진희 사무관(농림축산식품부)

- 실효성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문제뿐 아니라 삶의 질 제도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함. 실효성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 현재 삶의질법 개정안으로 서비스기준 점검·평가 사항을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이 올라가있음.
- 현재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대부분 항목을 달성한 상황인데, 지표 기준을 강화할지, 다른 항목으로 변경할지 내년에 서비스기준협의체, 관계 부처 등과 논의해봐야 할 것 같음.
-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여부는 항목별로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일괄적으로 목표 대비 달성률로 표기가 된다면 각 부처 등에서 헛갈리지 않을 것 같음.

총괄반 3차 전문가 포럼 결과

○ 회의 개요

- 일시: 2023. 12. 5.
- 장소: 오송&세종컨퍼런스 회의실
- 참석자: 한이철, 성주인, 심재현, 권인혜, 정문수, 정민주, 민경찬, 나현수, 김민석, 유서영, 이진, 오한솔, 손경민(이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혜란 주무관(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이상규 실장(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동진 박사, 박세경 박사(이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심재현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삶의질법 제9의2에서 사전협의제도의 법령상 기술에 의하면 '점검과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대상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에 묶이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함. 작년도까지 농식품부 사무국과 논의를 하던 당시에는 이전 2~3년 점검·평가 결과까지 대상과제 풀을 잡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음.
- 현행 영향평가와 현재 논의 중인 사전협의제도는 후자에 이행계획서 등을 절차를 포함하여 강제성을 좀 더 강조한 것 외에 내용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음. 따라서 작년도까지 논의에서는 영향평가와 합쳐 운영의 묘를 살려 운영한다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였음. 영향평가는 농어촌서비스기준과 연동되기 때문에 영향평가 결과를 통해 사전협의에 태울 과제들을 발굴하고 실제 부처가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이행계획서의 시행 점검을 다음 연도에 하는 것으로 절차를 짜는 것이 최적의 방안일 것이라는 논의까지 진행된 바 있음.

○ 성주인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제2차 기본계획 수립때부터 계속 삶의 질 정책 관련 업무에 참여해온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드는 생각은,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특정 제도의 미흡한 점이 지적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보완 장치로 도입하고, 또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식의 반복이었음.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은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부처 간 협력의 문제, 지역에서의 실행 문제임. 따라서 제도 자체의 디테일한 부분을 어떻게 구성하고 개선할지도 고민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부처 간 협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 고민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박세경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다부처 협력 방안, 중앙과 지방 정부 간 거버넌스 문제, 시행계획의 이행력 담보 등에 대한 사항이 논의된 바 있음. 현재로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지역 계획의 수립과 이행 점검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있음. 하지만 이번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앙과 지역 계획 수립 연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기본계획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연계할 수 있다는 기술에 그치게 되었음.

○ 김동진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중앙 단위 사업과 지역 단위 사업의 레벨을 맞추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면 두 가지 수준의 사업의 방향성을 맞추는 것이 중요함.
- 중앙과 지역 단위 사업의 방향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중앙 단위 사업의 성과지표와 지역 단위 성과지표가 다르기도 하고, 중앙 단위에서는 성과지표를 충족시켰으나 실질적으로 지역에서의 효과(가령 만족도 등)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 성주인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공간재구조화 도시재생 지원이 시행되는데, 향후 시·군 자체의 성과지표를 농촌협약 등을 통해 중앙에서 관리해야 할 지표와 연계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농어촌 삶의 질과 관련하여서는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읍·면 단위 공동체 조직에서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 활동 지원 근거를 시·도나 시·군에서 수립하고 민간 조직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박세경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동진 박사님의 이야기와 관련하여, 앞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을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앙에서 사회보장 지표를 제안하는 방안도 시도된 바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 통계 산출 방식과 체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음. 중앙에서 지표를 제시해주는 것이 효용이 높진 않았지만 원론은 유효하기 때문에 성과지표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체계나 틀에 관해서는 여전히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함.
-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 향후 사회서비스 이슈가 접목될 경우 상충이 예상되는 지점은, 현재 삶의 질 기본계획 대부분 사업에서의 성과지표가 투입 중심의 지표로 구성되어있는데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목적은 삶의 질이 얼마나 나아졌는가, 얼마나 개선되었는가라는

결과에 방점이 있다는 것임. 주관적인 삶의 질 만족도를 객관적 성과지표로 제시하는 것을 꺼리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으로 외국의 트렌드는 사회복지 정책을 평가하는데 있어 주관적 삶의 질을 중요한 성과지표로 인정하고, 그것을 객관화하여 성과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따라서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도 점차 투입 중심의 지표를 벗어나 삶의 질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측정하는 지표를 분명한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통계 생산 방식과 같은 체계적인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성주인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현재 전문지원기관인 센터에서도 매년 정주민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기본계획은 개별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정주민족도 조사 결과와 연결성이 강하지 않은 것이 한계임.
- 제4차 기본계획을 예로 들면 178개 개별 사업에 전부 대한 만족도를 각각 측정하는 것은 어려우니 중간 단위로서 예컨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만족도와 같은 지표를 도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그렇다면 그 핵심과제를 선정하는 기준의 문제, 핵심과제와 관련하여 사전협의제도와 같은 다른 제도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하는 문제 등 고민이 필요함.
- 제4차 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핵심 과제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여러 과제를 더해 178개 과제로 구성하게 되었음.

○ 김동진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비대면 진료 확대와 관련된 사업은 복지부와 의협 간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의협 내부에서의 문제도 얽혀있음.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료 정원 확대는 반대, 비대면 진료는 확대의 기초를 띄고 있음.
- 비대면 진료 확대로 인해 의료 서비스 여건 전반이 개선되는 것은 농어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 여건이 개선되는 것과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함.
- 비대면 진료 확대와 관련하여 대형 종합병원에서는 지방에 branch 협약 병원을 두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음. 서울에 중앙 병원을 두고 지역별 협약 병원을 의원별로 두면 지역의 의원에서는 비대면으로 해당 대형 병원의 협력병원으로서 진료를 볼 수 있는 효과를 갖는 것임. 대기업 대형마트가 동네에 들어오면 동네가 상권이 침체되는 것처럼, 이것이 결국 지역 의료기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음. 결론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농어촌 지역에 긍정적이거나, 하는 점에는 유보적 입장임.

- 농어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 여건 개선, 특히 비대면 의료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농촌 노인 계층의 디지털 격차가 가장 심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그런 점을 고려하면 농촌 지역에 보건소를 하나 더 짓고 마을 주치이나 마을 간호사를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의협에서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임.

- 또한 방문 진료 역시 농어촌 지역에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농어촌 지역 병원에 서는 도시 지역의 병원 원장을 두 명으로 두고 돌아가면서 진료를 볼 수 있지만, 지역으로 가면 보통 단독 원장으로 이루어진 기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방문 진료를 수행하기에 어려운 여건임.

○ 성주인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제4차 기본계획에 들어오면서 삶의질법이 더 복잡해지고 매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 늘어났음에도 실질적으로 실효성은 그만큼 늘어난 절차에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임. 제5차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오히려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간소화하는 방향 역시 고려해보고, 그러한 차원에서 정책 환류 체계를 내년까지 함께 고민해보았으면 함.

○ 박혜란 주무관(농림축산식품부)

- 매년 나오는 시행계획 점검·평가 보고서를 사무국에서 각 지자체에 뿌리고 있기도 하지만, 지역에서는 중앙부처의 상황,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음.

○ 심재현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과거에 연구진에서 정부 정책의 사업 내용과 목적을 분리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한 뒤 삶의 질과 관련하여 특정 분야와 성격을 입력하면 연관 정책을 출력할 수 있도록 정책 아카이브 분석을 한 적이 있음.

○ 박혜란 주무관(농림축산식품부)

- 그러한 아카이브나 라이브러리 시스템이 정식으로 구축이 되고 이용법에 대한 교육이 동반된다면 각 지자체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성주인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제3차 기본계획 수립하던 때에는 중앙과 지역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연구원에도 KREI리포터를 활용한 관련 행사도 운영한 바 있으나,

오래 지속되지 못했음. 수 년이 지난 지금은 그 당시보다 사회적 경제 조직도 많이 활성화 되고 농촌 지역 인적 자원도 늘어났기 때문에 지역 단위 추진 체계를 갖추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졌다고 생각함.

- 향후 농특위가 삶의 질 정책을 이어받는다면 농특위가 중심이 되어 농어촌 영향평가나 사전협의제도를 위한 주요 아젠다를 발굴하는데 역할을 해줄 수 있길 기대함. 현재까지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몇 가지의 사업 리스트에서 영향평가 대상을 사무국과 협의하여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측면이 있었으나, 농특위라는 조직의 장점을 발휘하여 체계성을 갖추어나갔으면 함.

○ 김동진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시행계획 점검·평가를 하다보면 중간에 종료되거나 지방이양 되는 과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과제들을 고려하는 한편 5개년 기본계획 중간에 변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간평가와 같은 기제를 만들었으면 함.

○ 심재현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동의하는 의견이나, 문제는 각 부처에서 그러한 절차를 어떻게 따라오게 할 것인가라고 볼 수 있음.

○ 박세경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비추어볼 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이행력을 갖추려면 중앙보다 지역과 더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함. 실제로 지역에서 기본계획 이행 방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소통 채널에 목말라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사회서비스 이행방안을 논의할 때엔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지역 단위에서도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의 입장이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거버넌스 레벨 간 소통 채널을 정기화하여 각자의 입장에서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함.

○ 심재현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지역에서의 이행력을 갖추기 위해 농촌공간계획이나 농촌협약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이상규 실장(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어업 지역에서는 농촌 지역과는 다르게 중앙 사업이 지방으로 전달된다기보다 지자체 단위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우수한 경우 국가 단위 사업으로 올린 경우가 적지 않음. 정부 정책을 중앙 부처 중심이 아니라 지자체의 수요에 의해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현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는데 권역별로 지자체장을 만나는 과정도 있음.
- 반대로 삶의 질 전문지원기관으로서 보기에 위원회에서 지정된 과제(중앙 부처에서 결정된 과제)는 어촌 분야에서 시급성이나 이슈화가 되지 않는 과제들이 많음. 예컨대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사업의 경우엔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시행착오를 거치며 지지부진해진 사업임. 집행률이나 사업 지체를 지적하여 모니터링 사항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테스트성(시범)사업의 성격을 지닌 과제는 삶의 질과 직접적인 큰 연관이 없을뿐더러 일반적인 과제들과 동일한 수준에서 성과를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 따라서 모니터링이나 영향평가와 같은 과제 평가 절차에서 충분히 부처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과제 선정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도출될 필요가 있음.
- 대부분 과제가 '농어촌'으로 묶여있어, 어촌 지역에 적절한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해수부 등과 별도로 할 수 있는 협의 체계가 마련되었으면 함. 예컨대 도서 지역의 경우 앞서 논의되었던 원격진료 이전에 기초건강검진 수급 여건 자체가 열악함. 섬 지역은 보건진료소나 지소가 있더라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점이 문제임.
- 행안부는 유인도, 해수부는 무인도를 정책 대상으로 하는데, 행안부는 인프라 개선 사업 위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정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해수부의 소관을 넘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도 부처 간 협업이나 소통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협업 체계가 절실함.
- 농특위에서 삶의 질 업무를 맡게 된다면 실무위원회 기능을 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과 관련한 권고사항들이 본위원회에 상정이 된다면 강제성을 갖게 되고 현재보다 더 논의의 체계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현행 분과위원회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도 있지만, 현재 주로 해수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KMI가 교육·문화 분과를 맡은 것으로 되어있어, 적절하게 조정 논의가 필요함.

부 록 2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과제 목록(2020년 기준)

4대 전략 부문	정책군	사업명	소관부처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 및 장비 현대화	복지부	
		농어촌 공공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	복지부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복지부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소방청	
		분만의료 도농간 격차 해소(분만취약지 해소)	복지부	
		소아 청소년과 의료취약지 지원	복지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농업안전보건센터운영)	농식품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어업안전보건센터운영)	해수부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농식품부	
		어업인 특수건강검진	해수부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을 통한 농어촌 정신건강관리 지원	복지부		
	농어촌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농어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시스템 구축	농촌형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시스템 구축	복지부 농식품부
			취약농가 인력지원	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농식품부
	보육·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조성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복지부
			농어촌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공동아이돌봄센터)	농식품부
			농어촌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농번기 아이돌봄방)	농식품부
	농어촌 사회안전망 내실화	농어촌 지역안전망 내실화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복지부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복지부
			찾아가는 보육 서비스 제공	농식품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식품부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식품부
			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해수부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자 확대	해수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식품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개선	해수부
			농업인 업무상 재해 보장 및 예방 관리기반 조성	농진청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실천 현장지원	농진청
			어업작업 안전 교육 및 예방장비 개발보급 지원	해수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해수부
			연안해역 안전지수 개발	해양경찰청
			민관 협업 수난구호를 통한 선진 바다 안전망 구축	해양경찰청
			소형어선 안전검사 단속 계도 활성화	해양경찰청
			농업인 노후안정 농지연금 지원	농식품부
			농업재해보험 사업 내실화	농식품부
			어업재해보험 품목 확대(양식어업재해보험 수지 개선)	해수부
			경영이양 고령농업인 소득 지원	농식품부
	여성농업인 출산 급여 지원(여성경영주 등록확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 생애주기별 복지 환경 기반 조성	농진청		

(계속)

4대 전략 부문	정책군	사업명	소관부처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농어촌 통학여건 개선	교육부
		농어촌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교육부
		농어촌학생 대학 진학 기회 확대	교육부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농식품부
		농업인 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농식품부
		농수산업 후계 인력 장학금 지원	해수부
		학교 시설 안전 강화	교육부
		미래형 학교환경구축(농어촌 고교 우선망 지원)	교육부
		농어촌 학교 온라인 화상 교실 구축 지원	교육부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학교 운영 지원	교육부
		혁신교육지구 활성화	교육부
		농어촌 방과후학교 내실화	교육부
		농어촌 학교 진로교육 강화	교육부
		농어촌 학교의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교육부
		우수영어 공교육 프로그램 제공	교육부
	농촌유학 지원	농식품부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농어촌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교육부
		농어촌 노인문해 교육 (문해교육 공동체 지원)	농식품부
		농어촌 지역 평생교육 기반 확충	교육부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문체부
		농촌지역 양성평등 교육확대	농식품부
	농어촌 지역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	농어촌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조성	문체부
		농어촌 체육공간 조성	문체부
		생활문화센터 조성	문체부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지원	문체부
		문화누리카드로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제공	문체부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문체부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문체부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문체부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문체부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문체부
		문화이모작 (문화공동체 촉진인력 양성)	문체부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지원	문체부
농경문화자원 활용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농진청	
농촌축제 지원	농식품부		

(계속)

4대 전략 부문	정책군	사업명	소관부처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	농어촌 지역 교통 여건 확충	농촌형 교통모델 다변화	농식품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 추진	농식품부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확충(공공형 택시)	국토부
		주민참여형 교통모델 확산	국토부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철도연계교통 강화	국토부
		내항여객선 승선관리 시스템 고도화	해수부
		도서지역 해상교통환경 개선	해수부
		위험도로 구조개선	행안부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보급	국토부
		교통안전 활동	경찰청
		연안여객선 현대화	해수부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확충	해수부
		스마트 해상교통망 구축 운영	해수부
		해상교통관제구역 확대	해양경찰청
		농어촌 주거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취약계층 주거여건 개선(농어촌주택개량사업)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추진		농식품부
	농어촌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처리 지원		환경부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국토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국토부
	농어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 개선(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농식품부
	농어촌지역 하수도 설치		환경부
	농어촌 지역 도시가스 보급		산업부
	농어촌 지역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산업부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해수부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농촌 빈집정비 및 활용	농식품부
		거점과 배후마을 간 상호 기능 연계 강화 (농촌중심지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조성)	농식품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농식품부
		어촌뉴딜 300	해수부
		정주환경 및 농촌생활서비스 모니터링 기술 개발	농진청
		수리시설 안전관리 (1)	농식품부
		수리시설 안전관리 (2)	농식품부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대책	농식품부
		어항시설 안전관리(어항시설보강)	해수부
		산불 예방 방지 대책	산림청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강화	산림청
		산림보호 지원	산림청
		농어촌지역 범죄예방활동 강화	경찰청
		청년 보급자리 조성	농식품부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고령자 복지주택)	국토부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국토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과기정통부
	스마트타운 조성	행안부	

(계속)

4대 전략 부문	정책군	사업명	소관부처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보전	농어촌 폐기물 수거·처리 개선	환경부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추진	농식품부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개선(1)(해양폐기물 정화)	해수부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개선(2)(연안어장 환경개선)	해수부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	해양경찰청
		국민방제대 운영 확대(해양자율제대 운영 확대)	해양경찰청
		축산,경종 분야 암모니아 관리 강화	농식품부
		지역단위 농업농촌 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확산	농식품부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해수부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해수부
		축산분뇨 자원화-에너지화 (1)	환경부
		축산분뇨 자원화-에너지화 (2)	농식품부
		부산물비료 공급으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농식품부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개발	농식품부
		친환경 양식 에너지 보급	해수부
		목재펠릿 사용 확대	산림청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산림청
		해역별 외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및 해양경비정보 시스템 구축	해양경찰청
		농촌공간계획을 활용한 난개발 방지	농식품부
		경관보전 직불제	농식품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해수부		
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1)	농식품부		
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2)	해수부		
농업,농촌 공익자원 관리 및 활용 기술 개발	농진청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 경제 구축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융복합산업 창업지원 강화)	농식품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해수부
		산림분야 6차산업 육성	산림청
		푸드플랜 내실화(1)(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농식품부
		푸드플랜 내실화(2)(농산물직거래활성화)	농식품부
		푸드플랜 연계 가공 기초기반 조성 지원	농진청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1)	해수부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2)	해수부
	농어촌 관광 활성화	농촌관광활성화	농식품부
		여촌관광활성화	해수부
		해양관광활성화	해수부
		농촌관광 수요확대를 위한 포용적 디자인 기술 확산	농진청
음식관광활성화(음식관광상품 개발 보급)	농식품부		
음식관광활성화(찾아가는 양조장)	농식품부		

(계속)

4대 전략 부문	정책군	사업명	소관부처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 경제 구축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농업법인 취업 지원	농식품부
		농업법인 전문인력 채용지원	농식품부
		청년 창업농 실습 농장 설치 및 운영	농식품부
		아이디어와 기술융합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지원	농진청
		영농승계 다변화를 통한 청년농업인 양성	농식품부
		청년어업인 후계영여자금	해수부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농식품부
		귀농 귀촌인 창업, 주거 지원	농식품부
		귀어귀촌활성화(민관 거버넌스 구축, 청년어업인 양성)	해수부
		스마트팜 보급 확산 및 전문가 양성	농식품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농진청
		스마트양식장 클러스터 조성	해수부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	산림청
		농식품 벤처 지원 (인턴제 개편 및 엑셀러레이터 발굴)	농식품부
		농식품펀드 민간투자 활성화	농식품부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추진	해수부
		산림 휴양-치유공간 조성	산림청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 및 확대	산림청
	말산업 육성	농식품부	
	농어촌 여성 취업 지원 및 일손 부족 해소	농어촌 거주 여성 경제활동 지원	여가부
		다문화여성 역량강화	농식품부
		농촌 고용인력 지원	농식품부
		어업인일자리지원센터	해수부
		외국인 노동자 적정배정 및 처우개선	고용부

-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2020. 『2020 대한민국 농촌경제보고서』.
- 관계부처 합동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2020. “2020~2024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 권인혜·나현수·손경민. 2022. 『202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광선·김경인·김민석·유은영. 202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심층연구 - 삶의 질 향상 정책 사전협의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심층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남훈·김태완·나현수. 2020. 『2020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동훈·박혜진. 2022. “2022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민석·김태완. 2020. 『2020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용욱·나현수·손경민. 2021. 『202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은설·유혜미·김재운·박유경. 2023. 『농촌형 보육지원 모델 도입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태완. 2021. 『2021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노승철·김미옥. 2021. “GIS공간분석을 활용한 공공체육시설 수요분석”. Sports Science 2021, 제39권, 제3호. pp.99-107.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202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20년 시행계획”.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20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20년 추진실적 및 '21년 시행계획”.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202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21년 추진실적 및 '22년 시행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2022 국민여가활동조사”. ‘여가생활만족도’, p64.
- 민경찬·김민석·유서영. 2022. 『2022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보건복지부. 2023. “2023~2027년 응급의료 기본계획.”
- 심재현·정문수·김용욱·김민석·민경찬·구본아. 2020. 『2020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안석·김남훈·김유나. 2019. 『농촌·도시 건강실태 및 의료비용 효과 비교와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문수·김민석·민경찬·유은영. 2021. 『2021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문수·김민석·민경찬·이진. 2022. 『2022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주동범·이현철·이원석·김광석. 2021. 『농어촌 영향평가 - 농어촌 통학 여건 개선』.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지역문화진흥원. 2022. 『2022 생활문화사업 성과분석 연구』.

지역문화진흥원. 2022. 『2022년 국민생활문화활동조사 결과보고서』.

지역문화진흥원. 2023. 『2022년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이철·이순미·정학성·박대식·안규미. 2022. 『인구감소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확충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홍성효·김진희·박상명. 2021. 『농어촌 영향평가 - 농촌형·도시형교통모델 개선』.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참고 인터넷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

한겨레(2023. 05. 31.). “‘병원 찾다 사망’ 응급의료 공백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검색일: 2023.
10. 26.